

PEOPLE
GEOGRAPHY
HISTORY
ECOSYSTEM
CULTURAL HERITAGE

DMZ가 말을 걸다



박은진 외 지음

LEGAL ISSUES
THE DMZ'S FUTURE
CASE OF GERMANY
N L L
PEACE PARK INITIATIVE

평화와 생태의 상징, DMZ의 모든 것



자연·역사·평화가 공존하는 DMZ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1부 DMZ가 내게 말을 걸다

분단 이후 민통선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DMZ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DMZ의 생성과 변천의 역사를 소개한다.

1장 PEOPLE

민통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 함광복 한국DMZ연구소 소장

DMZ 통신 #1 DMZ 브랜드마을 '통일촌'

- 김자옥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장 HISTORY

DMZ의 어제와 오늘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2부 DMZ를 따라 걷다

DMZ의 지리·경관,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 DMZ 일원의 문화·생태적 가치를 조망하고, 자원으로써 DMZ의 특성을 설명한다.

3장 GEOGRAPHY

DMZ 일원의 자연경관

- 김창환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4장 ECOSYSTEM

DMZ 일원의 생태계

-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5장 CULTURAL HERITAGE

DMZ 일원의 문화유산

-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DMZ^가
말을 거다

DMZ가 말을 걸다



평화와 생태의 상징, DMZ의 모든 것

박은진 외 지음



위즈덤하우스



세계속의 경기도



60년 분단의 땅에서 되살아난 생태의 보고 DMZ

DMZ는 20세기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유물로서, 살아 있는 평화의 상징물입니다. 지난 60년 남북한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동안 DMZ는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태의 보고로 되살아난 DMZ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DMZ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과 논의는 남한에서만 계속되었을 뿐 남북 간의 합의와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DMZ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MZ 관련 논의는 이제 공허한 구호나 관심 끌기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DMZ와 한강 하구 중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DMZ 일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DMZ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DMZ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DMZ 소개 책자를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DMZ의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거의 매년 있었지만 정작 DMZ의 다양한 면모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영문 도서가 없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DMZ의 역사와 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삶, 지리경관, 생태환경, 문화유산, 미래 발전 구상 등 관련 정책과 현안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에서 DMZ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DMZ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들과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경기도지사



DMZ의 미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MZ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열망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DMZ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불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늘 대립되는 곳, 의도치 않게 보존된 놀라운 생태적 가치, 삶의 흔적과 전쟁의 상흔이 옛 모습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역사적 공간,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에서 평화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현재의 DMZ입니다.

대치 상황의 남북이 평화공존 또는 통합의 단계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DMZ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변화의 방향을 정한 뒤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MZ와 관련한 국제협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MZ 영문판과 국문판 도서를 동시 출간하기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이 만들

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이러한 기념비적 시도에 많은 이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DMZ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서관 취지에 맞춰 내용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DMZ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관통하여 전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DMZ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DMZ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담은 도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문 도서는 물론이고, 국문 도서의 경우도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 다루거나 여행서 또는 관광안내서 같은 형식이 대부분으로, 학술적 성격의 종합서는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책이 DMZ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DMZ가 말을 걸다』를 펴내며

이 책은 DMZ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쟁점과 과제까지 다룬 종합적인 DMZ 안내서이다.

DMZ의 다양한 측면을 한정된 지면에 심도 있게 다루기엔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인 구성과 지면 활용으로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DMZ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러면서도 DMZ의 역사, 생태 환경, 인문환경, 지리경관, 문화유산, 정책 등의 핵심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압축하여 집필했고, 각 내용에 대한 출처와 부연 설명도 각주로 꼼꼼히 달아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즉, 책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학술적으로 인용해도 손색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 책은 DMZ의 과거와 현재 상황 및 주요 쟁점, 미래 구상을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부와 2부는 주로 DMZ의 역사와 현재 상황, 자원요소 등을 다루었고, 3부와 4부는 DMZ 일원의 남북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쟁점 및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1부 〈DMZ가 내게 말을 걸다〉에서는 가장 먼저 분단 이후 민통선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DMZ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했고, 1장 한강북부, 민통선지역에 선전마을로 조성되어 지난 8월 마을박물관을 개장한 파주 통일촌에 대한 짧은 글 김지옥을 실었다. 이어서 DMZ의 생

성과 변천의 역사²장 최용환을 다루었다.

2부 <DMZ를 따라 걷다>에서는 DMZ의 지리·경관³장 김창환, 생태환경⁴장 조도순, 문화유산⁵장 이기환 등 DMZ 일원의 문화·생태적 가치를 조망하고, 자원으로서 DMZ의 특성을 설명했다.

3부 <DMZ, 경계와 접경 사이에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⁶장 소병천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DMZ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 문제⁷장 심숙경을 다루었다. 또한 남북 한에서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 그룹에 대한 짧은 글⁸김엘리나도 포함했다.

4부 <DMZ의 미래를 스케치하다>에서는 기존의 DMZ 정책 논의와 향후 전망⁸장 박은진, 서해 접경과 DMZ에서 남북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⁹장 장용식 / 10장 서예애 등을 담았다.

한반도 DMZ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에 담다 보니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책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나 단체 등 외국의 관심 그룹과 개인에게 DMZ에 대한 기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는 점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각 부문별로 심층적인 내용을 다룬 책들이 더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내외에서 DMZ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 이 책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박은진



Contents

발간을 축하하며 ... 4

『DMZ가 말을 걸다』를 펴내며 ... 8



1부 | DMZ가 내게 말을 걸다

1장 | 민통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_ 함광복 ... 19

DMZ 통신 #1 DMZ 브랜드마을 '통일촌' _ 김지욱 ... 46

2장 | DMZ의 어제와 오늘 _ 최용환 ... 53

2부 | DMZ를 따라 걷다

3장 | DMZ 일원의 자연경관 _ 김창환 ... 79

4장 | DMZ 일원의 생태계 _ 조도순 ... 103

5장 | DMZ 일원의 문화유산 _ 이기환 ... 129





3부 | DMZ, 경계와 접경 사이에서

6장 | 국제법으로 살펴보는 DMZ의 법적 쟁점들 _ 소병천 ... 167

7장 | 독일 그뤼네스반트가 DMZ 토지 문제에 주는 교훈 _ 심숙경 ... 193

DMZ 통신 #2 남북한의 두루미 보호사업과 NGO의 역할 _ 김엘리나 ... 218

4부 | DMZ의 미래를 스케치하다

8장 | DMZ의 위상 변화와 통일을 향한 준비 _ 박은진 ... 229

9장 | 서해 위 또 하나의 경계, NLL _ 장용석 ... 255

10장 | 남북 협력을 매개하는 탄력적 공간 디자인 _ 서예례 ... 281

화보로 보는 DMZ

공간으로 보는 DMZ ... 12

시간으로 보는 DMZ ... 14

민통선지역의 8개 마을 ... 44

추가령구조곡 / 강변의 깎아지른 절벽, 주상절리 적벽 ... 92

DMZ 일원의 우수 생태계 ... 116

DMZ 일원의 역사 유산 ... 160

DMZ 일원의 평화안보 · 생태 · 역사유적 관광 ... 314



공간으로 보는 DMZ

한반도 DMZ와 접경지역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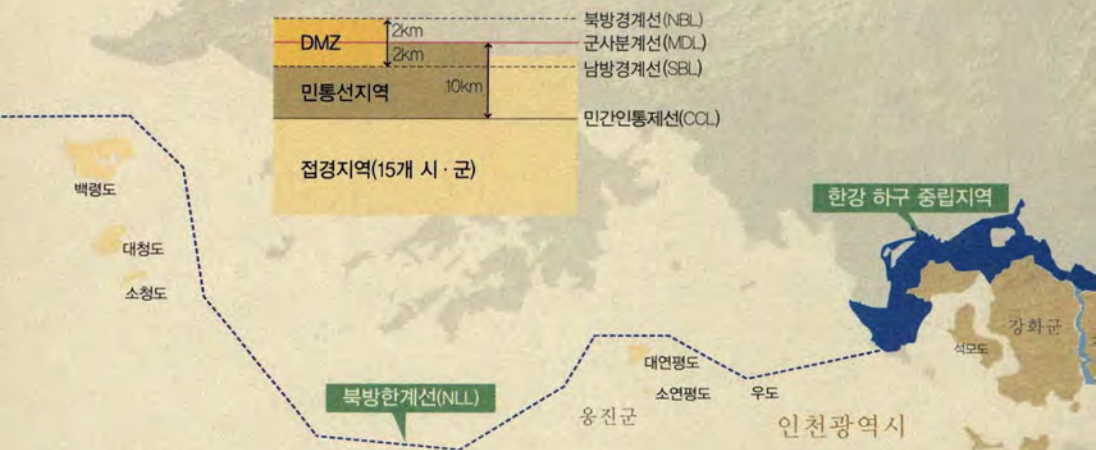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

교전국 쌍방이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대. 한반도에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중단되면서 생겨났다. DMZ는 국제법상의 제도로서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의무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실제 DMZ는 남북의 군사력이 중무장되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안 고성 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km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으로 2km씩 떨어진 곳에 남방경계선과 북방경계선을 설정하여 DMZ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방경계선과 북방경계선이 모두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DMZ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다.

민통선지역(CCZ : Civilian Control Zone)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0km 밖에 설정된 경계선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며, 그 사이의 공간이 민간인통제구역이다. 이 지역을 민통선지역 또는 민북지역(민통선 이북 지역)이라고 한다. 원래는 민간인의 농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귀농한계선으로 설정했던 것을 휴전선 방어가 국군의 임무가 되면서 '민통선'으로 명칭을 바꾸고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군 초소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계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5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등 2개 군이 해당되고,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 해당되며, 강원도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강 하구 중립지역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의 말도에 이르는 지역으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이다. 육상의 DMZ가 남북한의 민간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남북한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NLL은 유엔군 사령부가 1953년 동해와 서해에 설정한 군사통제선으로,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왔다. 동해에서는 지상의 군사분계선을 연장해서 설정되었고, 서해에서는 서해 5개 도서인 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DMZ 일원'이라 한다.



DMZ를 둘러싼 한반도와 국제 정세

1910년~1945년

- 1910. 8. 29_ 한·일병합조약 조인
한·일 병합조약 조인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 카이로회담

- 1943. 11. 20_ 카이로회담
미·영·중 3국 수뇌가 참가하여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과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회담이다.
- 1945. 2. 8_ 알타회담
미·영·중 3국 수뇌가 참가한 알타회담에서 "일정 기간 미·영·소 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잠정 합의했다.
- 1945. 7. 26_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은 국제적인 약속이 되었다.
- 1945. 8. 15_ 광복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는 불안정한 해방을 맞았다.



▲ 모스크바회담

- 1945. 12. 16_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에서 미·소·영 3국의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5년 이내의 신탁통치 실시 등을 논의했다. 이 결과를 놓고 국내에서는 반탁, 찬탁의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1946년~1960년대

- 1946. 3.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 5.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는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 1948. 5. 10_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 1948. 8. 15_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194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950. 6. 25_ 한국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의 전역에 걸쳐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 1951. 7. 10_ 개성에서 정전회담 본회의 개최
휴전협상은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포로 교환 방식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었으며, 그 사이 38도선 근처에서는 전투가 계속됐다.
- 1953. 7. 27_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 대표 사이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 휴전협정 조인

- 1954. 4. 26_ 제네바회담
우리나라와 유엔군 측 참전 16개국 및 소련·중국·북한의 정부 대표가 참가하는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다.
- 1968. 1. 21_ 1·21사태
- 1968. 10. 30~11. 2_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대 ~1996년

- 1971. 8. 12. 남북적십자회담
KBS 방송을 통한 남북한 간의 아산가족찾기가 제안되었다.
- 1972. 7. 4.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의 공식 대화가 본격화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다.



▲ 7·4남북공동성명

- 1976. 8. 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 1978. 10. 27. 문산 지역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제3땅굴 발견
- 1983. 10. 9.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 1984. 11. 15. 분단 후 처음 판문점서 남북경제회담 개최
- 1985. 9. 남북한 고향 방문단, 서울과 평양 방문
- 1987. 11. 28. KAL기 폭파 사건
- 1989. 8. 15. 평양축전
평양축전 전대협 대표 임수경, 문규현 신부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 1990. 3. 3. 강원도 양구 비무장지대서 제4땅굴 발견
-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에는 남북화해, 상호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1992. 5. 22. 비무장지대 북한군 무장 침입, 남북 총격전 발생
- 1996. 4. 4. 북한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규정 준수 포기 선언
- 1996. 4. 19. 북한 경비정 2척 서해 연평도 침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연평도 서남쪽 16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남쪽 1km 지점까지 침범했다.
- 1996. 7. 31. 김영삼 대통령, 4차회담 수용 시 남북경제지원 협력 표명
- 1996. 11. 13.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착공식

1998년~2010년대

- 1998. 5. 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판문점을 거쳐 한우 500두 대북지원
- 1998. 11. 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금강산 관광

- 2000.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적인 통일과 상호교류, 경제협력 등을 약속했다.
- 2000. 9. 18.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임진각)



▲ 경의선 열차

- 2002. 6. 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 교전
- 2004. 6. 개성공업지구 착공
- 2004. 11. 19. 금강산 관광 전용 육로도로 완전 개통
- 2005. 7. 18. 분단 60년 만에 남북 간 광통신망 연결
- 2006. 10. 9. 북한 1차 핵실험
- 2007. 5. 17. 남북 열차 시험운행(12. 11. 상시 운행)
- 2007. 11. 22. 제1차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 발표
- 2008. 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발생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 2009. 5. 25. 북한 2차 핵실험
- 2010. 3. 26. 천안함 피격 사건 발발
-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 2011. 12. 19.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 2013. 2. 12. 북한 3차 핵실험
- 2013. 4. 3. 개성공단 폐쇄(9. 16 재개통)



철원 승리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DMZ가 1부

내게 말을 걸라



왜 독수리는 유독 DMZ 인근에 밀집하는 걸까? 조금만 더 남하하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이 있다. 또 울속도, 주남저수지, 순천만, 금강 하구, 해남 지역 등 다른 철새 도래지도 많다. 독수리 먹이인 동물 사체도 그만큼 풍부할 텐데 거길 마다하고 민통선 인근 지역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민통선지역이 출입을 통제받는 지역인 만큼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쩌면 민통선 사람들의 '못 말리는 먹이 주기'가 해마다 독수리를 불러들이는 이유가 아닐까? 민통선 사람들과 철새가 빚어놓은 '자연과 인간의 동행', 이는 민통선 마을은 사라지지만 민통선 사람들의 문화가 빛어 숙성시킨 아름다운 아이이다.



민통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People

부터는 **민간인**

제선입니다

함광복 | 한국DMZ연구소 소장

한국관광공사 DMZ 명예홍보대사,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실장, G1 강원민방 대기자, 방송위원 역임. 1985년 한국 언론 최초로 DMZ에 대한 자연 생태를 취재, 기사화했으며, DMZ를 집중 조명한 기사로 두 번의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저서에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한국 DMZ, 그 자연사적 탐방』, 『DMZ는 국경이 아니다』 등이 있다.

민통선은 DMZ를 그려놓은 화판

민통선은 DMZ를 고스란히 새겨놓은 화판이다. 그 화판에 새겨진 그림이 하나둘씩 지워지며 모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이는 태어났고, 젊은이는 사랑했으며, 노인은 늙어갔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에서 생의 한 시절을 보낸 민통선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사라지는 민통선 마을

2012년 4월 9일 오후 3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의 검문소 바리케이드가 철거됐다. 민간인통제선이야 민통선이 1km 북상해 연주고개로 옮겨간 것이다. 양지리 101세대 230명은 이제 '민통선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1972년 4월 민통선지역에 입주한 지 40년 만에 '민통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모든 민통선 사람들에게 '탈 민통선'은 꿈에도 그리는 소망이다. 민통선이 해제되면 통행 불편이 사라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농지나 주택에 대한 군사적 통제 강도가 낮아져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유리하다.

엄밀한 의미의 DMZ는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까지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 구역을 말한다. 그 DMZ 남쪽에 그려진 민통선 안에,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앉아 있던 113개 민통선 마을은 이제 8개로 줄어들었다. 경기도 4개 마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자유의 마을,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연천군 중면 횡산리과 강원도 4개 마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근남면 마현리, 이중에 앞으로 군사작전 때문에 불가피한 몇 지역만 빼놓고 민통선 마을은 모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¹

들국화 핀 골짜기 길을 오르다가 구멍 뚫린 철모 하나를 보았다

민통선은 DMZ의 바깥 인접 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다. 어찌 보면 민통선은 DMZ의 조연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DMZ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일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민통선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오래된 철모 사이에 피어난 얼레지



DMZ 자연생태계 조사는 휴전 다음해인 1954년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에는 정부, 학술단체, 환경단체, 언론기관 등의 생태계 조사가 붐을 이루었는데, 그 대부분이 민통선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환경부가 2008년 11월 서부지역파주, 연천, 2009년 9월 중부지역원천에서 실시한 두 차례 조사는 예외다.

DMZ는 시, 소설, 영화 속에도 자주 등장한다. “들국화 핀 골짜기 길을 오르다가 구멍 뚫린 철모 하나를 보았다”로 시작하는 민영의 시 〈추석날 고향에 가서〉, “이 다리 반쪽은 네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고”라고 노래한 신경림의 시 〈승일교〉는 DMZ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민통선 마을을 소재로 하고 있다.

DMZ 여행은 대부분 민통선 안에 남아 있는 전쟁 유적을 돌아보다가, 클라이맥스로 전망대의 넓은 유리창 너머 철책선에 갇힌 DMZ를 바라보는 것으로 짜여진 코스가 대부분이다.

그밖에 대암산 고층습원의 신비로운 자태, 독수리 떼의 출몰과 먹이 주기 미담, 병사들의 ‘잔밥’으로 겨울을 나는 멧돼지 등 DMZ와 얽힌 화제들이 모두 민통선지역의 일인 것이다.

민통선은 DMZ를 고스란히 새겨놓은 화판이다. 민통선 사람들의 삶과 희망, 애환이 그려진 이 땅의 분단사, 냉전사의 적나라한 기록이다. 그 화판에 새겨진 그림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 그동안 허투루 보아왔던 민통선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이는 태어났고, 젊은이는 사랑했으며, 노인은 늙어갔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에서 생의 한 시절을 보낸 민통선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민통선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

그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민통선이 설정되기 전에 찾아가는 사람들, 전쟁 중에도 그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입주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햇볕정책에 따라 입주한 사람들이다.

수복지구에 그려진 금단의 선과 20세기판 사민

휴전 후 새로운 터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수복지구² 일대로 몰려들었다. 수복지구는 북위 38도선 이북의 DMZ 접경지역으로, 해방 후 북한 통치를 받다가 휴전협정으로 남한에 귀속된 지역이다. 해방 이후부터 남한의 통치권에 있었던 북위 38도선 이남 경기도 지역에는 전쟁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한 농민들도 옛 집을 찾아 몰려들었다.

그러자 유엔군 사령부는 DMZ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민들의 '귀농 의지'를 제지하는 한편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 사령관은 직권으로 DMZ 후방 5~20km에 귀농을 막는 귀농한계선³을 그었다. 이로써 한강 남단부터 DMZ를 따라 동해안까지 1,528km²에 이르는 벨트가 형성됐다.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 강화, 김포, 파주,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2도 9군 24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가 금단의 선 안에 갇히게 됐다.

1959년 6월 11일 DMZ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귀농한계선 통제권도 한국군에 이양됐다. 한국군은 귀농선을 '민간인통제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상 유례없는 정책



민통선지역의 농민

이주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대적인 정책 이민(移民, 倂民, 倂姓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이 있었던 곳이다. 10세기 초, 궁예는 철원에 태봉국을 세우면서 '청주인 사민 1,000호'를 단행했다. 1100년 전 사민의 땅에 '20세기판 사민'이 재현된 것이다.

그 땅을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민통선이 설정되기 전에 찾아간 사람들, 전쟁 중에도 그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입주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햇볕정책에 따라 입주한 사람들이다.

민통선 입주의 효시, 해안분지

1956년 4월 25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개척민 150가구 965명이 입주했다.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아직 귀농선 관할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기 전 민통선 정책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957년 5월 11일,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도 50세대 300여 명이 같은 목적으로 귀농선을 넘어 입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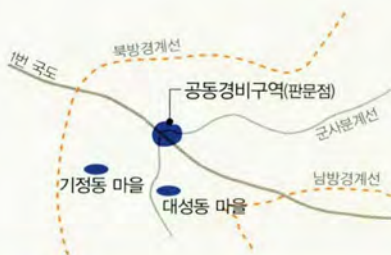
을지전망대에서 바라본 양구 해안분지(일명 편치불)



경기도에는 수복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북위 38도선 이남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54년 5월 25일,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와 두일리에는 이미 58세대가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런 경우는 계획적인 정책 이주라고 보기 어렵다.

DMZ 안의 평화지대, 대성동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마을은 1953년 8월 3일 '자유마을'이란 이름으로 DMZ 안에 건설됐다. 정전협정 부칙 '정전협정이 조인될 시점 비무장지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남쪽 비무장지대에는 대성동, 북쪽 비무장지대에는 기정동이 생겨난 것이다.



남쪽 비무장지대에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 대성동 - 기정동 - 판문점이 군사분계선 위에 서로 1~1.8km쯤 떨어져 직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대성동, 기정동, 판문점은 군사분계선 위에 서로 1~1.8km쯤 떨어져 직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1951년 10월 판문점¹에서 휴전회담이 열릴 무렵 현 군사분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 삼 각지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전장 한가운데에서 뜻밖의 평화를 누렸다. 이 지역의 16세대 60명의 노인과 아이들은 피난을 떠나지 않았고, 길을 나 섰던 사람들도 발길을 되돌렸다.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1953년 7월에는 30 세대 160명이 거주했고², 2012년 3월 현재 47세대 49가구 212명이 거주하 고 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촌 -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은 민통선지역에 정책 이주를 단행하면서 입주 목적을 구별하던 용어다.

자립안정촌 정전협정 체결 직후 북한은 DMZ까지 바짝 다가와 농사를 짓 는 계획적인 '선전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민통선지역에 건설된 마을이 자립안정촌이다. 땅을 농경지로 재가동하고 대북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이주가 단행된 것이다.

자립안정촌은 이미 입주 영농을 하고 있던 양구군 해안분지, 고성군 명 파리 등을 포함해 99개 마을이 건설됐다. 그중 강원도 철원군에 가장 많은 전략촌이 생겨나 철원평야의 60%를 이루었는데, 1959년 4월 10일 철원을 월하리에 72세대 353명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11월 29일 철원을 관전리에 32세대가 입주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975세대가 입주했다.

판문점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군사분계선 상에 위치하며,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된 곳이며, 북한군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 실 등이 있다.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이다.



소이산에서 바라본 철원평야 전경. 멀리 보이는 녹지가 비무장지대이고 그 너머 산지는 북한이다.

재건촌 1972년 4월 25일, 강원도 양구군 만대리에 해안분지의 2차 개척민 100가구 476명이 첫발을 디뎠다. 만대리라는 마을 이름에는 들이 넓어 1만 호가 살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군인들은 분지의 북쪽 벽에 뚫린 V자 홈을 통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매봉^{1,290m}이 이곳 만대리를 향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매의 눈을 한 채 이쪽을 뺏히 내려다보고 있을 북한군들에게 정말 1만 호가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기에 당시로서는 초현대식이던 박공식 주택들이 들어섰다. 흰 벽의 집들이 주황색 또는 하늘색 지붕을 맞대고 있는 마을 가운데로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뚫렸으며, 그 길로 주황색 경운기들이 오갔다.

이처럼 만대리는 자립안정촌보다 더 강력한 대북 심리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목적으로 건설된 마을이다. 한편으로는 유흥지를 개간해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이 사용하던 정치적 구호를 따서 '재건촌'이라고 불렀다.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민통선 지역에는 이런 의도로 12개의 재건촌이 생겼다.

통일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의 백연리 통일촌은 더 적극적인 정책 이주 개념으로 조성된 민통선 마을이다. 이곳에는 1972년 4월 제1사단 전역 부사관 14명이 입주해 영농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했고, 1973년 8월 백연리는 '반공의식 투철한 통일촌'이란 이름으로 재건설됐다. 당시 전역을 앞둔 부사관 40세대와 예비군 자격을 가진 주민 40세대, 총 80세대가 입주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유곡리는 북한의 오성산에서 뻗히 내려다보이는 옛 금강산 철길 옆 마을이다. 1973년 8월, 백연리와 같은 목적으로 전역을 앞둔 현역 장교 부사관 30세대, 35세 이하 예비군 30세대 등 총 60세대가 입주해 통일촌이 건설됐다.

경기도 파주시 백연리 통일촌 전경.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기만 하다.



햇볕정책에 따라 입주한 사람들 - 해마루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은 동파리의 해 뜨는 '동東', 언덕을 뜻하는 '파坡'를 우리말로 풀어 쓴 지명이다. 이름만큼이나 마을도 아름답다. 높은음자리표 모양으로 설계해 52채의 집들이 들어선 마을은 전원주택 단지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다. 해마루촌 입주는 민통선 마을 가운데 가장 늦은 2001년에 시작됐다.



위성에 찍힌 해마루촌. 높은음자리표 모양으로 설계됐다.

6·25전쟁 당시 민간인 소개 작전으로 강제 이주⁵됐던 주민들이 입주 영농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덕분이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년 동안 60가구가 살 수 있는 3만 평의 마을 부지를 건설하고 2001년부터 입주를 단행해 2007년 7월 현재 52세대, 인구 155명의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면 소재지가 됐다.

대부분의 민통선 마을이 전쟁과 도발의 공포와 긴장을 안고 있지만, 해마루촌은 민통선지역이 갖고 있는 필연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기원을 담고 있다. 모든 민통선 마을이 반공 정책에 기초를 두고 건설됐다면, 해마루촌은 햇볕정책의 산물이다.

피와 땀으로 일구고 싸워서 지킨 땅

민통선의 역사는 토지 분쟁의 역사다. 거기에는 독가시처럼 숨어 있는 지뢰와의 싸움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불거진 땅 소유권자와 개척민 사이의 분쟁이 경기도에서는 일부 수복지구가 있는 연천군에서 일어났고, 강원도에서는 민통선 전 지역이 수복지구인 철원, 양

구, 고성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민통선 영농은 토지대장, 등기부 등 근거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됐다. 땅 소유권자를 가려서 영농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므로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을 개간한 경작자가 있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분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개척민들은 철석같이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믿었다. 토지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점유권이 이탈된 상태였고, 지뢰밭 속에 버려진 땅을 정부의 권유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개척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땅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째, 작전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배제하려면 헌법 정신에 기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쟁에 의한 점유권 이탈은 농지개혁법상 불경농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군이나 행정 당국에서 민통선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은 거의 해소됐다. 그 사이 입주민들이 개척한 땅은 모두 원소유권자에 넘어갔다. 개척민들은 '빼앗긴 땅'을 매입하거나 소작농이 되어 임대 영농을 하면서 개척 당시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땅을 찾아갔다. 문제의 땅이 국유지인 경우와 소유권자가 없어서 아무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땅은 정부에 귀속시켰다. 지금 주민들은 정부에게 그 땅을 되팔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통선 개척 세대들은 원소유권자와 소유권을 놓고 싸웠고, 그 후손들은 소유권을 갖기 위해 정부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⁶

아직도 40여 년간 토지 분쟁에 휘말려 있는 곳도 있는데, 1967년 전락촌으로 조성된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이다. 이곳에서 토지 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자 2007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다. “당사자 간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합의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대마리 외에도 전락촌이 10여 곳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민통선지역의 토지 분쟁은 주민들을 깨우치고 단련시켰다.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는 민통선 내의 토지 매각·임대·금융 활동 등 경제 활동을 사실상 정상화시키고 주민들의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껏 ‘주인 없는 땅’을 정부의 ‘권유’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개척했어도 대가는 없었다. 민통선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군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통선 복상, 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 다각 영농에 따른 시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1995

가을걷이가 끝난 후 철새들이 찾아온 대마리의 한가로운 풍경



년에는 가구당 영농 범위 확대, 주민 이주, 토지 개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민통선지역 민사 활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지역의 사회간접투자를 추구하는 민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민통선은 더 이상 'DMZ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완충지대'에 그칠 수 없게 됐다. 토지 분쟁은 민통선을 DMZ 쪽으로 북상시키는 기폭제가 됐고, 민통선 사람들의 정주의식을 북돋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민통선 마을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유랑의 삶을 접고 비로소 정착기를 맞았다.

'민통선' 시대가 남기고 가는 것



민통선에선 철새도 인간인 것일까? 민통선 사람들과 철새가 빚어놓은 '자연과 인간의 동행'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개발과 보전의 갈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동행', 이는 민통선 마을은 사라지지만 민통선 사람들의 문화가 빚어 숙성시킨 아름다운 아이티이다.

그곳에 민통선 문화가 있었다

그곳은 섬이다. 민통선지역은 지리·자연생태적으로 고립돼⁷ 있으며, 정치·문화적으로도 타지역과 구분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30여 년 동안 이곳에는 4만여 명이 이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집되어온 사람들의 집 속에는 각자 자기 고향의 문화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민통선지역 이주민의 역사는 문화 이주의 역사인 셈이다.

이주민들은 출신지나 본적, 직업, 학벌, 문화 수준도 달랐다. 집집마다 말의 억양, 가풍, 관습과 풍습도 달랐다. 직업 농민이 있는가 하면, 농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있었다. 벼씨를 뿌리는 방법, 소를 모는 방법, 이엉을 엮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제사상을 윗목에 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랫목에 놓는 집도 있었다. 새해 차례상에는 만둣국을 올리는 집과 떡국을 올리는 집이 있었고, 결혼식 하객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집과 국밥을 차리는 집이 있었다.

군사문화도 개입했다. 그들에게 주둔군은 입주민들의 일상을 간섭하며 영농 자유를 억제하는 ‘불편한 이웃’이자 최전방 지대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보호해주는 더없이 ‘좋은 이웃’이었다. 무엇보다 민통선 개척 시대에는 군인이야말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은인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삼거리에 세워진 ‘해안재건지비’ 비문엔 당시 군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오랑캐를 무찔러 정의의 피를 뿌린 이 고장
 쑥대 우거진 옛 터전에 단기 4289년 4월
 험벗고 굶주려 지친 농민 160세대가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왔으나 한설과 염천
 폭우에도 몸 둘 곳조차 없어 신음하여
 이에 제6사단 전 장병은 슬기로운 뜻에 뭉쳐
 그들에게 주택 80동과 학교 1동, 공공시설
 4동을 이룩하여 자유와 행복의 마을을
 마련하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삼거리에 세워진 해안재건지비

- 단기 4289년¹⁹⁵⁶ 8월 15일 대한육군 제6사단장 이백우

이주민의 문화는 처음엔 서로 충돌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전방의 혹독한 시련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연마되고 용해되다 마침내 융합되고 동화돼

특유의 민통선 문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독특한 문화 유형이 흡사 미국 사회를 일컫는 ‘멜팅팟(Melting Pot, 인종의 용광로)’을 닮았다. 멜팅팟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민통선의 ‘한국판 멜팅팟’ 문화 현상이 이 땅 어디에도 없는 민통선 문화를 빚어냈다. 그 민통선 문화 가운데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문화 다양성 유산이 적지 않다. 마치 미래를 위해 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들 하나하나가 교훈적이다.

덧세도 지방색도 없다

민통선지역의 인구 구성은 원주민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원주민이란 6·25 전쟁 이전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한다.

1987년의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원주민 구성 비율이 총 490세대 중 49세대인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341세대는 출신지가 강원도 홍천, 인제 그리고 해안분지 밖의 양구 지역, 경기도 양평 등이었다. 이처럼 원주민 구성 비율이 턱없이 낮은 현상은 민통선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났다. 당시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의 원주민 구성 비율이 총 41세대 중 2세대인 4.8%, 삼곶리는 총 30세대 중 3세대인 10%였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총 137세대 중 12세대인 8.8%,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는 총 21세대 중 1세대인 4.7%를 보였다.

드물게 원주민 구성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도 있었는데,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지역의 경우 총 1,289세대 중 586세대인 45.5%가 원주민이었다. 이는 곡창지대에 대한 원주민들의 귀농 의지가 다른 지역 원주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경기도에 속했던 인천직할

시 강화군 교동면의 경우는 원주민 구성 비율이 80%나 됐는데, 그것은 이 일대의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원주민의 거주가 단절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낮은 원주민 구성 비율은 과거 농경생활을 해오던 민통선지역에 예로부터 이어져오던 산신제, 천신제, 당산제 등의 의례나 관습 등의 전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토박이 없는 사회’가 빚어낸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이자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던 텃세, 지방색이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민통선식 언어를 아십니까?

지역의 고유 방언이 사라지고 전국 여러 지역의 언어 습관과 군사용어를 등을 혼용해서 쓰는 새로운 언어 형태가 나타난 것은 민통선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반찬 → 부식’ ‘전화로 → 유선상으로’ ‘불일 있다 → 용무 있다’ ‘먹는 물 → 식수’ ‘소금 → 식염’ ‘뛰어서 → 구보(驅步)로’ ‘밤에 → 야간에’ ‘이해된다 → 감이 잡힌다’ ‘고개 → 고지’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도 군사문화가 그대로 이입돼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강원도 철원군 서면 화수리 국도변 한 휴게소 화장실 소변기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좋은 장충이 아니다. 한 발 다가서서 숨을 죽이고 정조준 후 발사!”

밭을 습관에 따라 지명이 바뀌기도 했다. 강원도 철원 지방의 토박이들, 즉 현재 70대 이상 실향민들은 ‘금화’와 ‘금성’을 ‘김화’와 ‘김성’으로 발음한다. 옛 금화읍은 현재 김화읍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민통선지역으로 집단 입주한 주민들이 지명을 바꿔놓은 경우도 많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서는 ‘지상깃개’라는 지명을 ‘부대골’로, ‘샘밭고개’를 ‘사격장골’로, ‘이둔지’를 ‘큰길가로’, ‘뱀청골’을 ‘관사 마을’로 고쳐 부르고 있다. 또 입주 당시 개척지를 구획할 때 편의상 나뉘던 ‘갑자골, 을자골, 병자골’ 등을 그냥 지명으로 쓰기도 한다.

주둔 군인들이 붙여놓은 동식물이나 어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일대에서는 DMZ 일대의 자연생태계 조사가 있기 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산양을 ‘말염소’로, 열목어를 ‘김일성고기’로 부르기도 했다. 또 민통선 전 지역에서 귀화식물인 돼지풀을 꽃가루가 두드러기를 돋게 하는 쑥같이 생긴 풀이라는 뜻으로 ‘두드러기쑥’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로 넘어가는 ‘광덕고개’를 ‘카라멜고개’로 부른 것은 미군들이 그 고개를 ‘카멜 Camel, 낙타고지’로 부른 것에 대한 오역으로 보인다.

그곳에선 철새도 인간이다

2012년 7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MAB'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정을 유보⁸했다. 당초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에 걸쳐 총 면적 2,979km²를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철원 지역의 용도구역 설정 미비로 결정이 유보되었다.

과거에도 정부가 애써 추진하던 환경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1996~1997년에 정부는 강원도 철원·양구·인제·고성 등 4개 군의 민통선지역 609km²에 대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때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계획 초기에 무산됐다. 이들의 주장은 이 일대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토지 개간, 벌채 등 18종에 걸친 규제를 받아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에 결정적인 지장을 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연구사업은 이전의 일방적이고 보호 위주였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그동안 쌓인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웠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결국 자연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무산된 민통선 마을. 그러나 지금 자연은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민통선 일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독수리의 월동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그 증거다.

독수리는 1993년 12월 1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첫 모습을 선보였다. 사흘 뒤인 17일 오후, 이번엔 사내면 삼일리 한 군부대의 연병장을 어슬렁거리다 '생포'됐다. 28일 오후에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백석동에서 군부대 정문 앞을 서성이다가 붙잡혔으며, 29일 오후에는 강원

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삼거리에서 집 잃은 아이처럼 갈팡질팡하다가 주민들에게 붙들렸다.

뜻밖의 진객,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의 등장은 갖가지 화제를 빚어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민통선 사람들의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일까, 민통선 마을 곳곳에서 굶주리는 독수리를 보호했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사의식이 벌어졌다. 지자체들도 굶주리는 독수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방사하는 것을 환경보호 정책의 성과나 업적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 바람에 독수리의 개체 수는 그날그날 파악됐으며, 그해 몇 마리의 독수리가 찾아왔는지는 지역 언론의 좋은 기삿거리가 되기도 했다.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독수리는 1995년에도 20마리가 찾아왔다. 그리고 1996년 40마리, 1997년 60마리, 1998년 100마리, 1999년에는 150마리로 늘어났다.

그러나 독수리의 실제 개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청은 2000년 1월, 독수리 개체 수에 대한 센서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837마리가 월동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는 월동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그해 문화재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무려 1,23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5년에는 16개 지역에서 최대 1,719마리가 관찰됐다. 조류독감 파문으로 전반적으로 먹이 주기를 실시하지 않은 2006년에는 1,022마리로 일시 감소했다가 2008년에는 다시 1,912마리로 늘어났는데, 이들 독수리들은 대부분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경기도 파주시 장단반도, 적성면 두지리 임진강변 그리고 철원군 동송읍 토교저수지 등 민통선 일대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독수리의 월동지 가운데 하나가 됐다.

왜 독수리는 유독 DMZ 인근에 밀집하는 걸까? 조금만 더 남하하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이 있다. 또 을숙도, 주남저수지, 순천만, 금강



주민에게 붙잡힌 독수리

민통선 마을 곳곳에서 굶주린 독수리를 발견, 보호했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사의식



하구, 해남 지역 등 다른 철새 도래지도 많다. 독수리 먹이인 동물 사체도 그만큼 풍부할 텐데 거길 마다하고 민통선 인근 지역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민통선지역이 출입을 통제받는 지역인 만큼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쩌면 민통선 사람들의 ‘못 말리는 먹이 주기’가 해마다 독수리를 불러들이는 이유가 아닐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민통선 사람들의 ‘못 말리는 먹이 주기’는 보상 없는 무상 급식이 아니다. 독수리는 동물의 사체를 주워먹는 자연의 청소부다. 축산 농가에서 쏟아져나오는 가축의 사체는 매립할 경우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소각할 때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독수리는 그 오염원,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분해자 역할로 유독 자신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민통선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셈이다.

정말 민통선에선 철새도 인간인 것일까? 민통선 사람들과 철새가 빚어놓은 ‘자연과 인간의 동행’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개발과 보전의 갈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동행’, 이는 민통선 마을은 사라지지만 민통선 사람들의 문화가 빛어 숙성시킨 아름다운 아이디어다.

1 주 |

- 1 민통선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민통선이 복잡함으로써 통제가 해제돼 민통선 마을 이름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2 북위 38도선 이북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전 지역과 미산면, 백학면 일부 지역,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남면 일부 지역 제외), 고성군 전 지역이 적용됐다.
- 3 귀농선은 DMZ 남쪽에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중립지대인 한강 하구 남쪽에도 설정되었다.
- 4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 ‘마을 소개’.
- 5 동파리는 판문점 인근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판문점 휴전회담 장소가 가까워 대성동처럼 직접적인 전투 현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마을이 DMZ와 너무 가까워졌다. 전쟁 중에 남아 있던

주민들은 강제 이주됐고, 그때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이들이나 사흘 뒤 마을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국유농지 규모가 가장 컸다. 1996년 3월 미북구 토지(292만 평) 등 1,805만 1,000㎡(547만 평)가 농림부와 재경부로 귀속됐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이들 농지에 대한 매각 금지 규정 시효는 지난 2006년 4월로 만료됐다. 정부는 국유화한 땅을 다시 실경작자에게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서가 있다. 첫째, 5년 이상 실경작자가 우선 대상이다. 둘째,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1필지당 1만㎡(3,025평), 그 외 지역에서는 필지당 1,000㎡ 이하(302평)로 제한한다. 이는 1만㎡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침이다.
- 7 대개 남쪽으로는 민간인이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는 경계선이 지나가는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이 흘러가거나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북쪽은 아무도 갈 수 없는 DMZ가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아름드리 아카시아나무가 서 있는 검은 숲에서 아무리 더덕 향기가 풍겨나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갈대 우거진 벌판으로 고라니가 달려가더라도 무심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거진 지뢰가 우글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에서).
- 8 ‘유보’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MAB 이사회 심사 결정의 한 형태로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이다.

참고문헌 |

- 김재한, 2000, 「상호 이익을 위한 DMZ 정책」, 한림대.
- 이문항, 2000, 「군사분계선의 영역과 비무장지대」, 한림대.
- 이문항, 2001, 「JSA-관문점(1953-1944)」, 한림대.
- 이재, 1999, 「군사보호구역 일대의 관방유적」, 한림대.
- 전성우 등,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도순, 2000, 「집경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환경부.
- 함광복, 1988, 2000, 「민간인통제구역」, 『한국민족사대관』, 정신문화연구원.
- 함광복, 1995, 「DMZ는 국경이 아니다」, 문학동네.
- 함광복, 2002,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이스트위드.
- 함광복, 2007, 『흐르지 않는 강』, 집문당.
- 함광복, 2008, 「DMZ, 그 자연사적 탐방」, 집문당.
- 함광복, 2010, 「DMZ, 뜻밖의 여행」, 한국DMZ연구소.
- Galtung, J., 2000, From DMZ to ZOP(Zone of Peace), 유럽평화대.

정말 민통선에선 철새도 인간인 것일까?
민통선 사람들과 철새가 빚어놓은
'자연과 인간의 동행'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개발과 보전의 갈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민통선지역의 8개 마을

1959~1973년, 민통선지역에는 북한의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99개의 자립민정촌, 전략적 성격이 더욱 강한 12개의 재건촌,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범 농촌인 2개의 통일촌이 건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출입 절차와 영농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민통선이 북상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민통선지역에 민간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은 DMZ 안에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포함하여 총 8개소로, 가장 최근에는 2012년 철원 양귀리 철새마을이 민통선 마을에서 해제되었다.

169가구(세대)
464명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69가구(세대)
171명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56가구(세대)
213명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자유의 마을



101가구(세대)
224명



철원군 갈말읍 정면리

62가구(세대)
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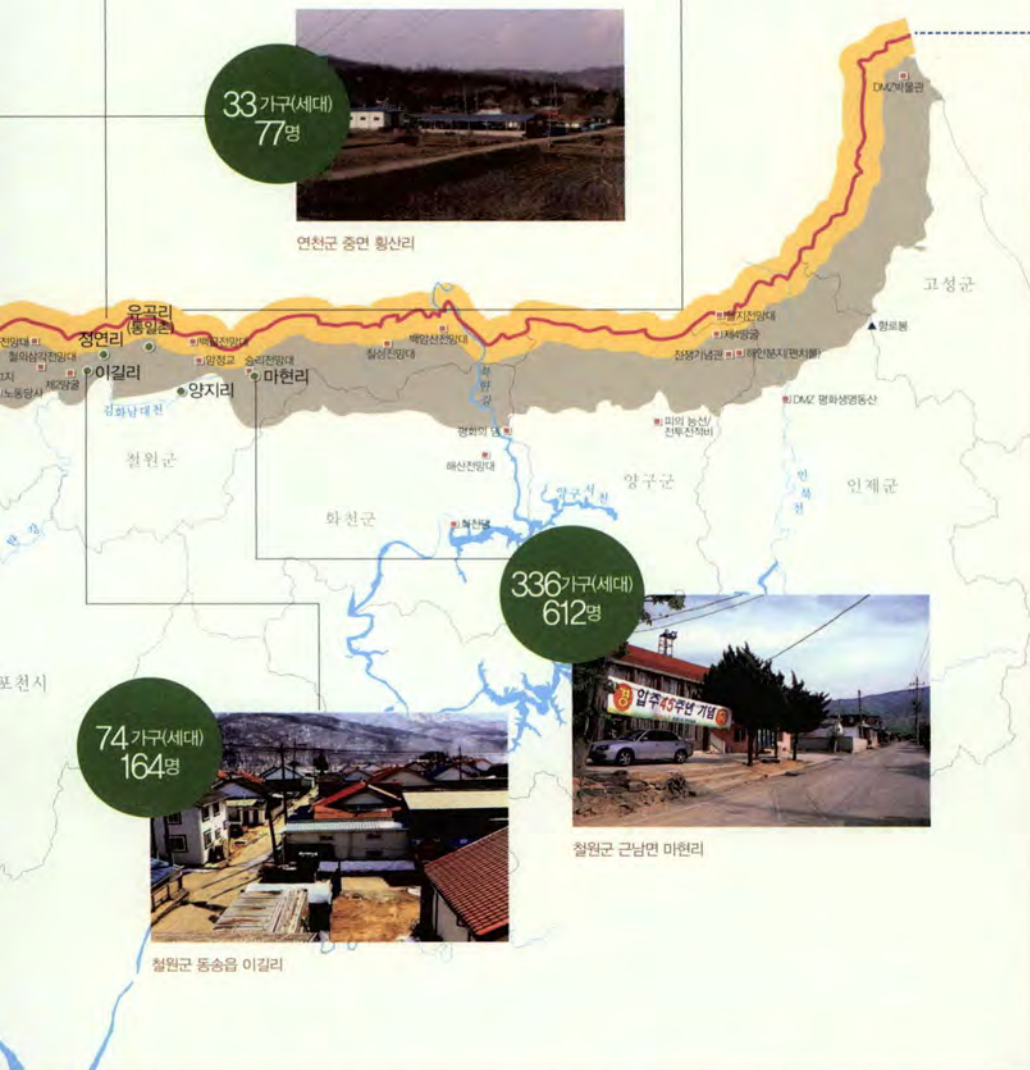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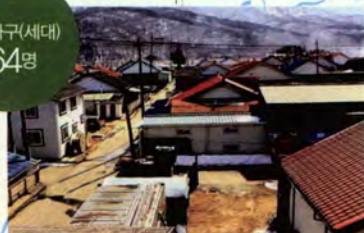
33가구(세대)
77명



연천군 중면 황산리



74가구(세대)
164명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36가구(세대)
612명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DMZ 브랜드마을 '통일촌'

- 평화와 생명의 땅을 일구는 사람들



“잠깐 나갔다 오라더니

그길로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들왔지”

DMZ 서부 전선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이 마을은 1973년에 형성된 '전략촌'으로, 후방 마을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쟁이 멈춘 자리에 남아 있는 지뢰와 철조망처럼, 마을 사람들의 삶에는 전흔과 함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임진강 하류의 평야지대인 이 마을에는 민씨, 최씨, 박씨 등의 집성촌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포성이 울리며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을 떠났다. 얼마 뒤 돌아와보니, 떠날 때 항아리에 담아 뒷산에 묻어둔 귀중한 물건들이 극심한 폭격에 남아난 것이 없었다.

마을은 낮에는 아군이 차지했다가 밤이면 인민군 천지가 되곤 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자 했지만, 휴전 후 군에서 잠시 마을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길로 몸만 나왔다가 20년이 지나서야 통일촌 마을이 다시 생기면서 돌아오게 됐다. 그것도 이 지역이 고향인 원주민 40가구에만 허용됐고, 인근 부대를 제대한 장병 40가구와 함께 입주했다.

산등성이를 밀고 마을을 만들어 '정책 입주촌'으로 자리를 잡은 지 이제 40년이 된다. 1973년 8월에 각자의 집에 입주하기 전부터 남자들은 미리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박씨 할머니는 입주 자격을 갖추느라 서둘러 제대한 남편을

따라 혼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 채 마을에 들어왔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척박한 터를 농지로 일구기 위해 고생하던 시절이 떠오르면 박씨 할머니는 그저 이 한 마디를 몇 번이고 되낸다.

입주 신청 마지막 날, 우연히 통일촌 입주 모집 신문 공고를 보고 동생을 들여보내려고 했다가 구비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본인이 들어오게 됐다는 민씨댁.... 그 밖에도 통일촌에 들어온 가구에는 하나같이 사연도 많다. 제대 장병들은 고향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제각각이니 입주 80가구가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기까지의 과정은 척박한 땅을 농토로 일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 싶다.

원래 통일촌의 모델은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인 키부츠였다. 제대 장병과 원주민들은 고르게 배정되어 2개 반 8개 조로 나뉘었고, 남녀 모두 훈련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처음부터 무기고와 방공호, 병커가 조성되어 있었다.

집은 안채와 창고를 모두 똑같은 형태로 지었다. 농지와 집은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고, 학교와 교회도 지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 자급자족하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그러니 여느 후방 마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12년 DMZ 브랜드마을로 선정된 통일촌. 마을길의 태극기와 빨간 우체통이 인상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2012년 8월부터 마을박물관과 마을길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DMZ 통일촌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이 진행됐다.

2013년 8월까지 에코뮤지엄Eco-Museum으로 발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 14일에 통일촌브랜드마을 개장 및 입주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2012년 안전행정부의 지방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기도가 선정되었고 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추진한 것이다.

“여기 들을 때? 살림살이가 뭐 있어? 피난 다니느라 다 없애고...”

“이사 들을 때, 지금 이장이 검문소 앞으로 경운기 끌고 나와서 온 가족이 그거 타고 들왔지. 애들은 항아리에 넣어갖고...”

살림살이는 우선 댕을 이불과 밥해 먹을 술, 밥그릇, 숟가락이 전부였다. 잠시 나갔다 오라는 말에 그대로 두고 나왔던 살림살이들은 전쟁통에 폭격을 맞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파주 통일촌마을박물관이 생기자 이곳에 하나둘씩 사연과 함께 역사가 묻은 물건들이 기증됐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차좁쌀로 만든 떡조망뎡이를 손으로 조물조물해 화롯불에 구워주던 추억이 담긴 화로, 시집을 때 친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며 “손녀딸에게 한번 입혀보고 줄게” 하면서 내놓은 배자,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라 쓰지 않



마을 주민들의 삶과 전쟁의 흔적이 같이 전시된 통일촌마을박물관



고 아껴두었다던 옹태이, 듬성듬성 기능성만 살려 만든 골무, 군인 시절에 만든 추억집과 편지들, 꼼꼼하게 적어둔 농사일지….

아직은 ‘골동품’도 되지 못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에 얹힌 사연들에서 그들 삶의 역사와 마을을 가꾸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낸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의 독특한 혼례 문화인 ‘재끄러미’와 스님을 모시고 지내는 ‘장승제’, ‘콩 고사’, ‘시제’, 전국에서 모인 주민들이라 유난히 심했다는 상여가 나갈 때의 장난질 등 전통 문화의 전승은 여느 마을과는 ‘깎고도 다름’이 있다. 이는 마을 뿐만 아니라 DMZ 지역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귀한 생활문화로서 분단이 만들어낸 또다른 유산이다. 전국에서 모인 군인 출신들의 본고향 생활방식 역시 이 마을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유산일 터이다. 통일촌마을박물관은 이제 막 이런 기록들을 담기 시작했다.

“불안하지는 않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현재 파주 지역의 민통선 안에는 3개의 마을이 있다. 1953년 조산리에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2013년 8월에 정전 60년인 동시에 마을 조성 60주년이 되었다.

백연리 ‘통일촌’은 6·25전쟁 전에는 장단군에 속했으나 휴전 이후 민간인의 출



‘재끄러미’를 당한 신랑의 혼례 사진



마을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위험한 놀이>



통일촌브랜드마을 입구 안내물

입이 통제됐고, 1972년에 파주군으로 편입됐다.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정착촌 개발을 지시하여 1973년 3월 개발사업에 착수했고 그해 8월 21일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통일촌이 조성된 것이다.

2001년에는 진동면 동파리에 연고지가 장단 지역인 신흥민 1세대를 위한 수복마을 ‘해마루촌’이 조성됐다. 1979년 5월에 민통선 내 행정기관으로 군내출장소가 개설됐으며, 2011년에 장단출장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장단출장소 관할 구역인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등 4개 면 22개 리 중 백연리 통일촌과 조산리 대성동, 동파리 해마루촌 3개 리 8개 반에 약 2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파주시 전체의 19.3%라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거주 가구의 95%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들은 “이 지역에 사는 게 불안하지는 않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DMZ 안보관광객 600만 명 돌파...”

통일촌에는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그중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이 90%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 임진각에서 시작하는 안보관광에 참여한다.

관광객들이 평화누리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느끼게 되는 긴장감은 도라전망대에서 DMZ 주변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다 한참을 지하로 내려가는 긴 땅굴에서 남한과 북한이 심각한 대치 상황임을 실감하고 잠시 불안감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통일촌에 들어서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 된장찌개로 점심 식사를 하고, 마을박물관과 마을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평화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DMZ 동부 전선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생태환경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경기도의 DMZ 서부 전선에는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뿐 아니라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분명 남과 북을 문화로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이며, 지역적 거점이 될 것이다. 이는 냉전이 남긴 상처인 DMZ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분단문화이자 이 시대 최고의 유산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문화와 유산은 세계화 브랜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DMZ의 가치는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인 것,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기억과 함께 고향과 부모, 가족 상봉의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지금도 통제구역이라는 불편한 땅에서 살아가며 생명의 땅을 일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처한 전쟁과 분단 상황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촌에서 마을공동체를 다지는 일 또한 그 한 가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김지옥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민속학자. 2013년 DMZ 통일촌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총괄 기획, 추진했다.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경기도 남양주·안산·수원·광주 등 시군지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수원박물관·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광주·수원·연천 향토유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경기민속지」, 「경기도 사람, 경기도 이야기」, 「용강리 마을지」, 「봉안 마을지」, 「통일촌 마을지」 등 경기도 민속 관련 책자를 다수 발간했다.

한반도의 DMZ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 혹은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지대이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DMZ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은 최근 까지 계속되었다. 남한에서는 이런 갈등의 공간을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제안과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DMZ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전 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분쟁과 갈등의 공간 안에 자연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스며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DMZ는 생태·환경·생명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다.



| 2장 |

DMZ의 어제와 오늘

History



최용환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에 "The Roles of South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Inter-Korean Cooperation"(North Korean Review, Vol. 4, No.1), 『북한, 어디로 가는가?』(김연철 외 13인 공저), 『DMZ의 미래』(조용래 외 5인 공저),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정덕구 외, 25인 공저) 등이 있다.

한반도 DMZ의 생성, 38선에서 DMZ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한반도의 분단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가 남긴 역사적 상처이다. 그리고 한반도 DMZ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산물이지만, 그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전후 처리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연합국들은 전후 처리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943년 11월, 미국·영국·중국 3국의 정상이 만난 카이로회담에서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의 독립 보장도 언급되었으나, 강대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3국의 정상이 만난 얄타회담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전쟁 수행이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 독일의 패망이 가시화된 시점에 태평양에서 일본과 한창 전쟁 중이던 미국은 대일對日 전투에 소련이 참전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 시험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일본 본토를 침공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국 군대를 전진시키지도 못한 실정이었다.¹

카이로회담. 왼쪽부터 장제스, 루스벨트, 처칠.



얄타회담. 왼쪽부터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그러나 스탈린은 대일전 참전을 서두르지 않았다. 독소전쟁* 때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서유럽에서의 전쟁을 서두르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결국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대일전 참전 대가로 외몽고, 러일전쟁* 때 일본에 넘어간 모든 영토와 권리 그리고 쿠릴 열도 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전 참전을 최대한 미루었다. 그러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이를 후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선언하고 만주와 북한 지역으로 진격했다.

8월 10일 저녁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일본의 항복 후 한국을 포함한 일본 점령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미국의 젊은 장교 두 명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점령지를 구획했다.

이 임무를 담당한 딘 러스크 Dean Rusk 중령과 찰스 본스틸 Charles Bonesteel 대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에 한반도의 대략적인 중간선인 북위 38도선을 그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으로 상부에 보고했고,² 8월 13일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일반명령 제1호 General Order No. 1'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8월 14일 미국이 38선 분할 점령안을 소련에 제안하자, 스탈린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락했다.³ 38선은 단순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절차상 임의의 분할선이었지만 점차 사실상의 분단선으로 고착

독소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 사이에 일어난 전쟁.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러일전쟁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1904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했다. 1905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한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묵인받고, 라오둥 반도(遼東半島)를 차지하여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화되어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한 뒤, 12월에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상은 모스크바회담에서 '신탁통치로 한국 독립을 준비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남북한에 진주한 미·소 양군의 정책이 서로 달라 신탁통치에 대한 찬탁 운동과 반탁 운동이 일어났고, 그 사상적 대립마저 커지면서 국토 분단이 현실로 다가왔다.

결국 온 국민의 열망과 유엔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미국과 소련의 후원을 받는 별개의 정부가 구성되었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정부가,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수립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분단의 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DMZ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은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으나,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은 38선 돌파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10월 26일 북한군이 한·중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쫓겨갔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그들에게 내주었다. 하지만 한국군과 유엔군은 재반격을 시도했고, 3월 25일 38선을 다시 돌파했다.⁴ 이렇듯 38선 근처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전선戰線이 고착화되자, 더 이상의 확대보다는 전쟁 이전 상태의 회복을 희망하는 참전국

들 사이에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1951년 6월 30일 유엔군 측의 리지웨이 Matthew Bunker Ridgway 총사령관은 방송을 통해 정전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회담의 장소로 북한 원산항 안에 정착해 있던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드야 Jutlandia를 제시했다. 그러나 7월 1일 공산군 측은 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해왔다. 정전에 불만이었던 리지웨이 총사령관이 회담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트루먼은 시일 문제는 조정하되 장소는 양보하라고 지시했다.⁵

결국 회담 장소는 개성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개성은 쌍방의 접촉선에 있었지만 공산군 측 진지에 가까워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심리적으로 그들 측에 큰 이득을 제공했으며, 군사적으로도 큰 이점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회담에 앞서 리지웨이에게 협상 지침을 하달했는데, 여기에 비무장지대 DMZ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당시 미국은 20마일^{약 32km} 폭의 DMZ를 주장할 것을 지시했다.⁶

정전협상의 제1의제는 군사분계선 MDL^{*} 설정이었다. 공산군 측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명분으로 38선을 분계선으로 남북 약 10km의 DMZ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남침하기 이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유엔군 측에서 볼 때 수개월의 희생 끝에 얻은 전적^{戰績}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⁷ 결국 군사분계선 문제는 1952년 1월 27일에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1951년 6월 말에 시작된 휴전 논의는 2년여의 지루한 협상을 거쳐 1953년 7월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을 대표하여 미국의 윌리엄 해리스 중장, 중국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두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제의되었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 활동의 한계선. 한반도에서는 강원도 고성 명호리에서 경기도 임진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휴전선을 말한다.



군사분계선은 동쪽은 38선 이북으로,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치우쳐 있다.

및 북한군을 대표하여 북한의 남일 장군이 마침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은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대치선이고, 이 선은 대략 38선과 일치하지만 동쪽은 38선 이북으로,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치우쳐 있다. DMZ는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전체 폭 4km인 지대에 설치되었는데, 정전협정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DMZ는 육상에만 설정된 것이다. 정전협정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던 한강 하구 수역 the Han River Estuary을 중립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강 하구 수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따로 설정되지 않고, 평화적 용도의 민간 선박 운항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육상 DMZ와 다소 다른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규정은 이 지역에도 적용된다. 즉, 한강 하구 수역 역시 군사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의미는 DMZ와 같다.⁸

정전협정은 해상에서의 분계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전협정 체결 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쌍방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군사

분계선과 같은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동해 및 서해에, 남한의 해군 및 공군 초계활동을 한정 짓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했다.

NLL은 당시의 영해 기준인 3해리를 고려하고, 한국과 유엔군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서해의 NLL과 함께, 동해 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 1996년 7월 이후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이 통일됨)이 설정되었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막대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중공군 90만 명, 북한군 52만 명, 유엔군 40만 명이 가운데 2/3 이상이 한국군이 사망 혹은 부상당했으며, 미군 5만 4,000명이 죽고 10만 3,000명이 부상당했다.⁹ 민간인 피해는 더욱 커서 당시 남북한 합산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죽거나 부상 또는 실종됐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전쟁의 후유증은 동족끼리 갖게 된 적대감이었다. 가족과 친구, 동료 간에 총부리를 겨누며 전쟁을 치른 결과, 전에는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었던 적대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까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런 적대감은 남북한의 이념적·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DMZ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역사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

DMZ는 기본적으로 완충지대의 의미를 가진다. 즉, DMZ는 종전이 아닌 정전의 과정에서 탄생하고, 전투 행위를 중지한 채 그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한반도의 DMZ 역시 정전 혹은 휴전 상태 유지를 위해 생성되었다. 결국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DMZ는 술한 갈등과 대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 시작된 1963년에서 1965년 사이, 북한군은 아예 노골적으로 DMZ 안에 각 초소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중화기와 전투병력을 배치했다. 특히 1960년대 말에는 DMZ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극에 달했다.¹⁰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DMZ를 넘어 청와대를 기습하는 사건^{1·21사태}이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계기로 남한 측에서도 DMZ 남방경계선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철책선을 구축하고 요소마다 북한군 기동부대의 습격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했다.

1970년대, 비극의 공간이 된 DMZ

1974년에는 중부 전선 DMZ 남측 100m 지점에서 북한군이 파내려온 땅굴이 발견되었다. 땅굴은 지금까지 모두 4개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정

1·21사태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DMZ를 통과하여 남한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기습을 목표로 서울에 침투한 사건. 1월 16일 황해도 연산을 출발한 이들은 18일 자정에 군사분계선을 넘고, 파주·고양 등을 거쳐 서울로 들어와 21일 밤 검문에 걸렸다. 1월 31일까지 이들 가운데 26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 산하 124군이라는 특수부대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전협정이 이루어졌던 판문점 동남방으로 4.6km나 파내려온 것도 있다.¹¹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과 한국인 노무자들이 북쪽 관측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미루나무 가지를 베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사건 발생 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전투준비태세 명령이 내려지고 한국에서도 특전사로 구성된 결사대가 편성되어 보복 작전이 실시되었다. 김일성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판문점 내의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남북한의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군사적 긴장 상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실제 한반도의 DMZ 일원은 수십만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중무장 지역이며, 수십 년 동안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비극의 공간이다. 탈냉전 이후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 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반도 DMZ의 기본적인 기능은 남북의 분리와 완충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전 세계 분쟁 지역 중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지역의 1순위로 한반도 DMZ를 꼽기도 했다.¹²

북한의 정전감시기구 무력화 시도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정전협정의 이행 및 준수, DMZ의 감시를 위한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 측 장성급 대표 5명과 공산군 측 장성급 대표 5명 등 모두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된다.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당시 황원택 소장)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원



남쪽에서 바라본 공동경비구역

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한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정전감시기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¹³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임무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독이며, 유엔군 사령관이 지명하는 스위스, 스웨덴 대표부와 북한 및 중국이 지명하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대표 등 4개국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1991년 5월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해 공식 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접수를 거부

했다. 1991년 8월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의 평양 방문을 금지시켰다.

1992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자,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지위를 승계하려던 체코 공화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자격을 부인하고 1993년 4월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또 북한은 폴란드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 대표단의 철수를 요구했다. 폴란드 정부가 중립국감독위원회 고수 입장을 보이자, 폴란드 대표단의 판문점 철수를 최후통첩하고, 불응할 경우 폴란드 대표단을 DMZ 내 불법 외국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결국 1995년 2월 28일 폴란드 대표단이 철수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축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대표단은 현재 본국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열리는 판문점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¹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냉전 시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제안

DMZ를 둘러싼 역사는 대립과 갈등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적이지만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70년대 소위 '테탕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반도의 분위기 역시 다소 변화가 있었다. DMZ를 통한 북한의 무력침투 사건은 1968년 한 해에 233건이었으나 1970년 30건, 1971년 20건, 그 이후 매년 1~2건으로 급격히

DMZ에 숨어 있는 살인자, 대인지뢰

대인지뢰(Antipersonnel Landmines)는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든 폭발물이다. 지뢰는 폭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땅속에 숨어 있고, 그 특성상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도 않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무기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수출입을 금지하는 협약(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이 존재하지만, 남북한은 모두 안보 문제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DMZ와 그 인근 지역은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매설 지뢰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한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남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조사에 따라, 2006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DMZ에만 약 97만 발, 민간인통제구역에 약 3만 발, 기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군사시설 인근에 약 8,000발 정도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DMZ의 평화적 이용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뢰 제거라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군은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인지뢰의 종류

- ① M14 지뢰 : 일명 발목 지뢰. 플라스틱 원통형으로, 금속탐지기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
- ② M16 지뢰 : 현재 한국의 DMZ에 M14 지뢰와 함께 가장 많이 매설되어 있는 지뢰. 미국에서 대인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되었다. 공중에서 폭발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다.
- ③ 목함 지뢰 : 나무상자 안에 TNT 장약이 들어 있고, 15kg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거나 상자를 열거나 줄을 건드리는 등의 충격이 있으면 폭발한다. 살상 범위는 2m이다.



M16 지뢰



M14 지뢰



목함 지뢰

줄었다.¹⁵

1971년 6월 12일 제317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연합국 측 수석 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¹⁶을 내놓았다. 1972년 2월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DMZ 비무장화에 대한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것을 촉구했으나 묵살되었다.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구실로 8월에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고, 10월에는 소위 서해 사태가 발생하면서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다. 서해 사태란 19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측이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고의로 침범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 도계선 이북 수역이 자신들의 영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아울러 서해 5도에 출입하려는 선박은 북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¹⁷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안은 1980년대에 재개되었다. 1981년 2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경의선 도로 연결, 설악-금강 자유관광



지역 설정 등 20개 시범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DMZ 내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북측은 이를 번번이 묵살하며 선先 군축 제안으로 대응했다. 남측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 여긴 반면 북측은 군축 우선을 주장한 것이다.

탈냉전 시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북 최초의 합의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루어졌다. 합의서 제12조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를 협의·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핵 위기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지도 못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DMZ의 자연공원화 등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일부나마 현실화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이다. 금강산과 개성 등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개방되면서 DMZ를 관통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이 이루어졌다.

1998년 4월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동년 6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금강산은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백두산과 함께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산으로, 동해안 DMZ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선박을 통해 시작되었고, 2003년 9월부터는 DMZ를 관통하는 육로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북측 초병에 의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 : 명)

1998. 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총계
371,637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이산가족 행사 및 남북 공동 행사 등을 위한 금강산 지역 방북 인원만 제외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79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214

자료 : 통일부 (각 연도 말 현황이며, 2012년은 10월 말 기준임)

개성공단 가동 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가동 기업 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생산액(연간)	1,491	7,374	18,478	25,142	25,647	32,332	40,185	39,366	190,015

자료 : 통일부 (각 연도 말 누적 금액이며, 2012년은 10월 말 기준임)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



개성공단 조업 현장

전면 중단되었다.

DMZ 동쪽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는 동안 DMZ 서쪽 지역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었다. 개성공단은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이루어지던 판문점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에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2003년 공단 개발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되었다.

개성공단의 조업은 서해 NLL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 간의 수차에 걸친 교전과 천안함 폭침뿐 아니라 북한의 핵 실험, 심지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3년 초반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4월 3일 폐쇄되었다가 9월 16일 재가동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의 사례는 DMZ와 그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직접적인 DMZ의 평화적 활용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단절의 공간이었던 DMZ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가 이어지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남북을 왕래했다. 또한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크게 활성화된 것은 물론이다.

DMZ와 접하고 있는 한국의 두 지방정부, 즉 강원도와 경기도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지방정부는 접경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지방 차원의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과 DMZ를 관통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에서의 연어 방류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DMZ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공동 방역과 농업 협력사업 등을 추진했다. 한국에서 말라리아는 한동안 사라진 질병이었지만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 말라리아 매개 곤충인 모기가 경기 북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남북 공유 하천을 이루고 있는 임진강과 북한 강 수계에서의 남북협력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2010년 천안 함 사건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현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분단 고착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와 환경 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와 참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DMZ의 새로운 가치와 달라진 위상 변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생태환경

한국전쟁의 정전 상황은 현재까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전쟁의 중단 상태가 이토록 오래 유지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전 상태가 60년 이상 유지되면서 한반도 DMZ에는 뜻하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다. 자연의 위대한 힘이 DMZ를 바꾸어놓은 것이다.

DMZ와 그 주변에는 남북한의 중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제한된

인력만 출입할 수 있다. 지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된 곳도 많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수풀이 우거지면서, 동물들이 돌아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 스스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물론 현재 DMZ의 생태계는 완전한 자연 상태라기보다는 왜곡된 생태계가 포함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컨대 DMZ 일원에 설치된 철책을 통과할 수 없는 대형 동물의 서식지는 철책선을 기준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또한 DMZ 내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큰 나무가 벌목된 지역도 많아서 DMZ 내부보다는 민통선지역의 생태계가 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군사적 대치 상황에 의해 형성된 DMZ의 생태계는 교란되고 훼손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DMZ



통일의 꿈을 품은 한반도 역사박물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DMZ의 서쪽 끝인 한강 하류와 그 주변 지역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세력 다툼이 7세기경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한 고려의 수도 개성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시작된 지역이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려 이후 조선왕조가 수립되면서 수도를 옮긴 이래 600년 이상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서울 역시 한강의 하류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DMZ에서 남쪽으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금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역사 유적들이 방치되고 있지만 이 지역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중심 도시인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DMZ의 위상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본다.

| 주 |

- 1 John Keegan, 1989, *The Second World War*. 류한수 역, 2010. 『제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p. 817.
- 2 Don Oberdorfer, 1997, *The Two Koreas*, Basic Books, p. 6.
- 3 김영호,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무장지대”, 김제한 편, 2004. 『DMZ V』, 서울: 소화, p. 49.
- 4 통일연구원, 2011. 『남북 관계 연표, 1948년-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p. 8.
- 5 김학준, 1992,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pp. 259-260.
- 6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전쟁(下)』,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p. 32-44.
- 7 김학준, 1992, 『한국전쟁』, pp. 268-277.
- 8 김제한, 2011,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6호, p. 126.
- 9 Don Oberdorfer, 1997, *The Two Koreas*, pp. 9-10. 한국전쟁의 전사상자 통계는 집계하는 국가와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군의 손실(사망, 부상, 실종)을 유엔군 측은 25만 7천여 명으로,

공산군 측은 58만 6천여 명으로 발표했다. 반면 일본 도쿄의 「통일조선신문」(1970. 6. 27)은 988,403명으로 추정했다. 미군 전사자 수는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36,940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표석에는 54,2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http://koreanwar60.tistory.com/584>).

- 10 Hamm Taik-young, 1999, *Arming the Two Koreas : State, Capital and Military Pow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pp. 77-79. 북한은 1964년 초 비무장지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소규모 전투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1966년 10월 유엔사의 동의 없이 보복에 나섰다. 북한군 역시 보복에 나서 11월 2일 존슨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6명의 미군과 1명의 카투사 병사를 살해했다. 급기야 1967년 4월 12일 한국군은 휴전 이후 최초로 비무장지대에서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북한군 124군 부대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 사건 바로 이틀 후 1월 23일 발생한 미군 합정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8년 10월 30일 120명의 124군 부대원들이 울진과 삼척에 침투한 사건, 1969년 4월 15일의 미군 경찰기 EC-121M 격추 사건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발생했다. 특히 1·21사태를 계기로 124군이라는 특수부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1968년 겨울, 북한은 특수전 부대를 재정비하여 1만 5,000명 규모의 특수 8군단으로 확대 재편성했다.
- 11 고경민, 2007, 「DMZ 평화지대화과 남북 관계」, 『북한학 연구』 제3권 제2호, p. 24.
- 12 고경민, 2007, 「DMZ 평화지대화과 남북 관계」, p. 31.
- 13 제성호, 2000, 「한국전쟁협정의 이행실태」, 『법학』 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p. 244.
- 14 손기웅, 2011, 『DMZ 총람 :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서울 : 통일연구원, pp. 65-66.
- 15 고경민, 2007, 「DMZ 평화지대화과 남북 관계」, p. 25.
- 16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최초의 제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평화적 이용이라기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에 가까웠다. 주요 내용은 1) 쌍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 인원 철수, 2) 군사시설 파괴, 3) 전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4) 무장 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 등이다. 다만 민간 작업원에 의한 농토 복구 허용 등은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류제갑, 2007, 「남북한 간 주요 합의 사항」,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DMZ 평화·생태공원의 기본구상과 조성방향』, 경기개발연구원 남북포럼 학술토론회 자료집, p. 153.
- 17 고경민, 2007, 「DMZ 평화지대화과 남북 관계」, p. 25.

| 참고문헌 |

-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DMZ 평화·생태공원의 기본구상과 조성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남북포럼 학술토론회 자료집.
- 고경민, 2007, 「DMZ 평화지대화과 남북 관계」, 『북한학 연구』 제3권 제2호.
- 고경민, 2008, 「DMZ 생태계 보전과 활용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자료집,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2008년 2월 1일).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전쟁(下)』,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 김영호,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무장지대」, 김재한 편, 2004, 『DMZ V』, 서울 : 소화.
- 김재한, 2011,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6호.

- 김학준, 1992,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 류재갑, 2007, “남북한 간 주요 합의사항”.
- 손기웅, 2011,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 제성호, 2000, “한국 정전협정의 이행 실태”, 『법학』 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 통일연구원, 2011, 『남북 관계 연표, 1948년-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조선신문」(1970. 6. 27).
- Don Oberdorfer, 1997, The Two Koreas, Basic Books.
- Hamm Taik-young, 1999, Arming the Two Koreas : State, Capital and Military Powe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John Keegan, 1989, The Second World War, 류한수 역, 2010, 『제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 Jost Delbrück, 1992, “Demilitarization”,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 Amsterdam :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국방부 6·25전쟁 및 국군의 날 행사단 블로그 웹사이트(<http://koreanwar60.tistory.com/584>).
- 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 웹사이트(<http://www.the-monitor.org/>).





DMZ ^{2부}
따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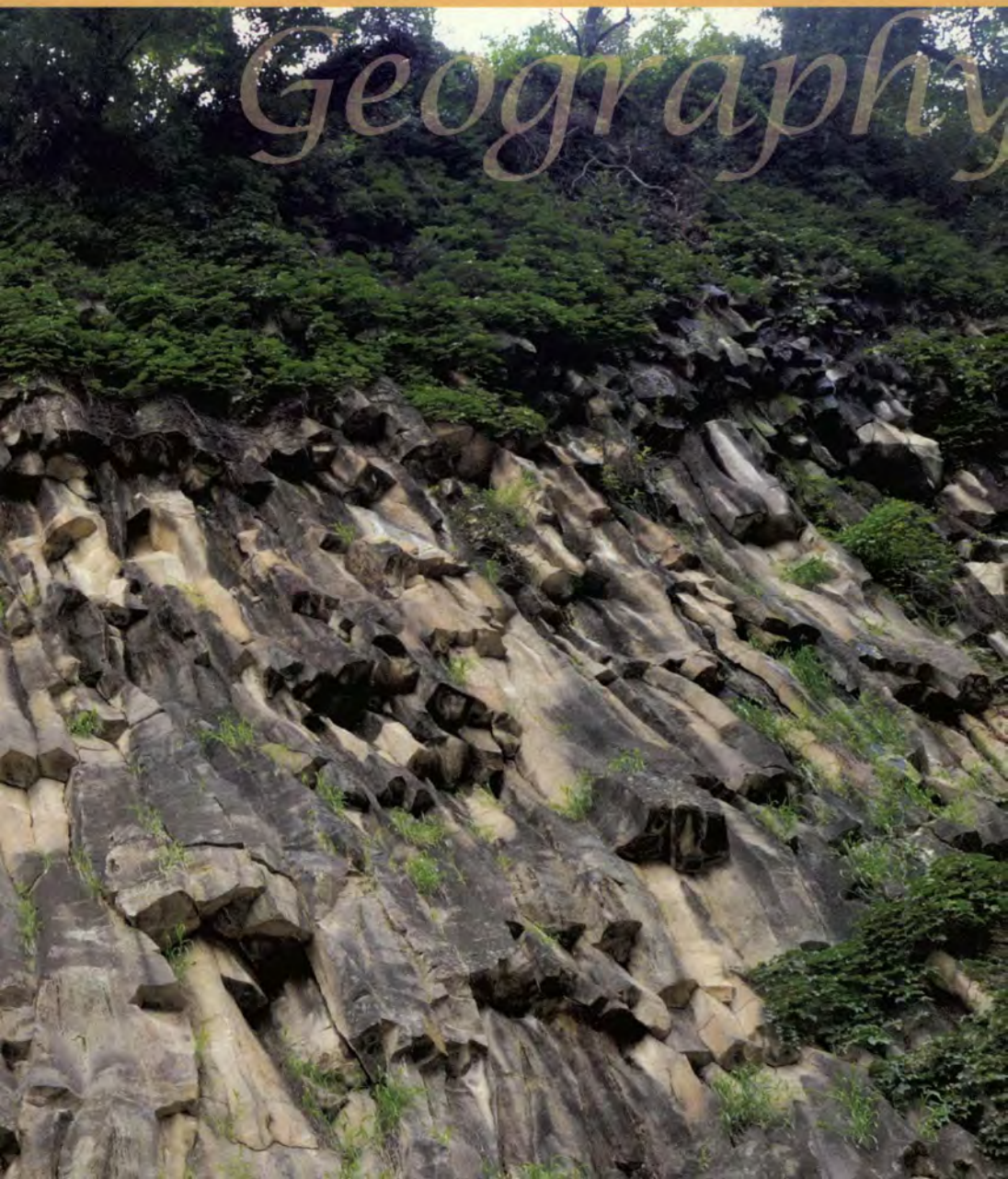
과거 고통의 산실이자 아픔을 간직한 땅이었던 DMZ. 지금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의 회복력으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전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DMZ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나 오갈 수 없는 땅',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DMZ를 비롯하여 그 주변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DMZ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 즉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장 |

DMZ 일원의 자연경관

Geography



김창환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소장, DMZ 메디컬 지오피아 사업단 단장,
(사)한국 지오피아 연구원 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
원. 저서에 『자연지리학 사전』(공저), 『생활과 지리』(공저), 『김창환 교
수의 DMZ 지리 이야기』 등이 있다.

DMZ 일원의 다채로운 지리경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 일원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급하고, 서쪽은 완만한 형태의 고도 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서에서 동으로 범람원을 이룬 드넓은 평야, 용암대지와 그 사이를 흐르는 현무암 협곡, 높이 솟은 산지와 태백산지의 하곡을 따라서 발달한 하천, 파도가 모래를 쌓아올려 만든 동해안의 석호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DMZ 일원의 지역별 경관을 편의상 서부 도서지역, 서부 평야지역, 서부 내륙지역, 중부 내륙지역, 중부 산악지역, 중동부 산악지역, 동부 해안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DMZ 일원의 경관 파악을 위한 지역 구분



서부 도서지역 - 웅진군, 강화군

DMZ는 임진강변에서 동해안까지의 공간이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포함하는 서해 5도 지역에는 DMZ 대신에 직선으로 그어진 NLL 북방한계선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웅진군은 서해 5도를 비롯한 110여 개의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섬의 대부분은 산지나 구릉지로 이루어져서 경지율이 낮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은 반농반어의 형태로 영위된다.

백령도는 '서해의 해금강'으로 일컬어질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파식대와 해식애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두무진명승 제8호와 세계에 단 두 곳에 불과한 천연 비행장인 사곶 해변천연기념물 제391호가 있으며, 콩돌 해안 천연기념물 제392호,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천연기념물 제393호, 남포리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507호 등이 있어 지형·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대연평도는 최고봉이 127m이며, 소연평도는 최고봉이 214m로 섬의 면적에 비해 산지의 고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청도는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섬으로 삼각산 343m을 중심으로 북부에 주요 취락이 발달했다.

웅진군의 주요 섬들이 고도가 높은 것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과정에서 저지대와 골짜기의 낮은 부분이 침수되고 고도가 높은 산정 부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전반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비교적 고도가 높은 서부지역의 산지들은 판상절리 등 화강암 풍화 지형들이 잘 발달해 있다. 반면 동부의 낮은 산지들은 연대가 오래된 암석들로 선캄브리아기 호상편마암 綫狀片麻岩이 주를 이룬다.

강화 해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간석지갯벌이다. 강화도·석모도 인근에는 넓은 간석지가 분포하는데, 특히 장화리에서 초지리에 이르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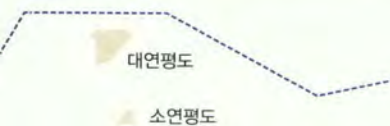
강화 해안의 갯벌



강화군 석모도의 눈썹바위



강화군의 간척지



웅진군

NLL

인천광역시



백령도의 콩돌 해안



웅진군 백령도의 천연 비행장 사곶 해변



도 남단의 갯벌은 그 면적이 약 300km²로 매우 광활하다. 강화 일대에 간석지가 잘 발달한 것은 한강·임진강·예성강 등에서 운반되어온 토사들이 황해의 조류를 따라 강화 일대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본래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었지만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해안 간척공사가 이루어져 하나의 섬으로 연결됐다. 또한 강화도에는 마니산^{468m}·월구산^{466m}·고려산^{436m} 등이 솟아 있지만 간척으로 충적지가 넓게 형성되었다. 반면 하천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큰 규모로 발달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높은 산지가 분포함으로써 산간 계곡수를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웅진군과 강화군의 기후는 서해안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대체로 서늘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낮은 기온을 보인다.

서부 평야지역 -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고양시·파주시는 DMZ와 그 일원 지역에서 가장 평탄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의 하류이자 합류하는 곳으로 넓은 범람원이 자리 잡고 있다. 김포시는 문수산^{376m}·장릉산^{150m}·수안산^{147m} 등 일부 낮은 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 지역을 '김포평야'라고 일컫는다.

한강 남안의 김포평야와 그 북안의 일산평야는 경기지방 유수의 곡창지대이다. 김포평야는 한강 연안에서 남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굴포천 유역과 그밖에 한강 남안의 충적지를 통틀어 가리킨다. 김포평야의 핵심부인 굴포천 연안의 평야는 부천에 속한 부분이 넓고 인천과 서울에도 많이 편입됐다. 자연습지^{배후습지}가 넓고 저습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초에 쌓은 제방이 한강의 범람을 막아주는 한편, 1920년대 중반에 설치된 굴포천 하구



굴포천 유역의 김포평야



김포평야와 일산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산평야



의 신곡리 양수장으로부터 한강물을 관개용수로 풍부하게 공급받게 되면서 옥토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와 마주보고 있는 고양시는 북동부가 높고 남서부가 완만하며 한강에 이르는 곳까지 평탄한 평야지대로 '일산평야'라고 불려진다. 중앙 지역은 구릉성 지대이며, 북한산에서 발원한 공릉천과 창릉천 등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고양시의 일산평야는 행주산성의 덕양산^{125m}에서 심학산^{193m}까지 약 16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 북안의 평야로서 김포평야보다 개발이 훨씬 늦어졌다. 지금은 파주의 통일동산을 거쳐 임진각으로 가는 자유로의 건설로 대폭 보강됐지만, 1990년 한강 홍수 당시 터져서 일산 지방에 큰 수해를 일으켰던 한강제방은 1930년대 중반에 쌓은 것이었고, 일산평야에 관개용수를 보내주는 행주양수장은 해방되던 해에 처음 설치된 것이다.

일산평야 전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 관개용수호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김포평야나 일산평야나 땅의 높이가 해발 10m 이하로 매우 낮아 집중호우 시에는 내수(內水)에 의한 침수 피해를 면치 못한다.

파주시 일원은 대략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세를 하고 있다. 양주와 접하고 있는 동쪽으로 해발 400m 이상의 산지가 솟아 있을 뿐, 대부분은 해발 50m 내외로 구릉지와 곡릉천·문산천의 범람원으로 이루어진 낮고 편평한 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부 전선의 최북단, 임진강이 한강 하구로 흘러드는 지점에 솟아 있는 오두산^{118m}의 전망대에 오르면 김포평야와 일산평야 일대를 관찰할 수 있다.

김포·고양·파주시 일대의 기후는 비슷하다.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연간 1,100mm 안팎을 기록하며 7, 8월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특히 9월에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영향을 받아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편이다.



서부 내륙지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일대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동쪽으로는 국사봉을 주봉으로 왕방산, 해룡산이 둘러쳐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천보산의 회암령에서 서쪽으로 칠봉산이 솟아 그 지맥이 여러 갈래로 높고 잦은 봉우리를 펼쳐 남계(南界)를 형성한다. 서쪽으로는 마차산이 에워싸고 북으로 뻗으며 옥녀봉이 북계를 이루고 있다. 동북쪽은 높이가 400~5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산들로 꽤 험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양주시는 신천 상류 지역으로, 동두천 남쪽의 신천 상류 지역에는 하천변의 범람원과 함께 화강암의 차별 침식에 의한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성 지형이 넓게 펼쳐진다.

의정부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고속화 도로의 축석령^{158m}을 넘어가면 시원하게 트인 포천분지가 펼쳐진다. 영평천의 지류인 포천천 상류의 이 분지는 해발고도 100~150m에 걸쳐 너비 7km, 길이 10km 범위의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포천천은 축석령에서 북동 방향으로 곧바르게 흘러가는데, 분지의 상류 쪽에 송우리, 하류 쪽에 포천읍의 신읍리가 자리한다. 분지 동쪽의 산줄기는 한북정맥의 주맥이고 서쪽의 산줄기는 그 지맥이며, 이들 산줄기 사이에 위치한 포천분지는 경기 북부 화강암대의 침식분지이다. 포천천은 신읍리를 지난 다음 좁은 골짜기를 통해 포천분지를 빠져나간다. 영평천은 광덕산과 운악산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을 합쳐 서쪽으로 흐르다가 호국로변의 양문리에서 포천천을 만나며, 한탄강은 포천시 북부를 부분적으로 관류한다.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강수량은 7~8월에 집중되는 전형적인 한국 중부지역의 기후이다.



영평천의 지류인 포천천 상류의 포천보지



동두천시의 전경과 그 뒤로 보이는 양주의 구릉성 지형



중부 내륙지역 - 연천군, 철원군

연천군은 추가령구조곡이 지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동부의 산지(지장봉 877m, 고대산 832m)는 높고 서부의 산지(천덕산 477m, 고왕산 355m)는 그에 비해 낮다. 이들 사이로는 평탄한 평지가 나타난다. 연천군 일원은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철원-평강에서 용암이 흘러내려 용암대지를 이루었고, 한탄강과 임진강은 이 용암대지에 다시 약 10~30m 깊이의 협곡을 파놓았다. 연천군은 임진강과 그 주요 지류인 한탄강이 만나는 물길을 따라 용암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놓인 경원선이 지나가며, 서쪽으로 파주와 동쪽으로 철원으로 이어져 DMZ를 이루는 지역이다. 용암대지의 상부는 현무암 풍화토가 아닌 하천과 호소성(湖沼性) 퇴적물로 덮여 있는데, 임진강과 한탄강이 협곡을 이루기 전에 용암대지를 덮어 흐르며 쌓아놓은 것이다. 비옥한 용암대지는 오늘날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철원군의 동부는 해발고도가 1,000m에 이르는 높은 지역이며 주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철원의 중·서부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신생대 제4기의 화산 활동에 따른 화산 지형의 발달이 우세한 지역이다. 특히 신생대 제4기에 열하분출(裂隙噴出)한 용암류의 매곡작용으로 용암대지가 형성된 이후, 하천의 변화된 침식작용에 의한 협곡 형성 등 2차적인 지형 발달이 두드러진다. 용암대지 상부는 용암류에 매적되지 않은 낮은 산지가 스텝토(Steptoe, 용암에 둘러싸여 고립된 언덕이나 산)를 이루고 있으며, 개석(開析)으로 드러난 협곡의 하부에는 현무암층 아래로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 지역은 용암대지를 기준으로 상·하 사면의 지질·지형적인 차이를 보이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다.

연천과 철원은 내륙지방이면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지형적으로 바람받이 지역이 되어 지형성 강우가 야기되므로 여름에 강우량이 가장 많다.



화산 활동의 흔적인 연천의 주상절리



현무암과 화강암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철원 고석정 일대



용암 대지 위에 형성된 철원평야





추가령구조곡

추가령구조곡은 서울과 원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를 말하며, 원산 주변에 있는 추가령을 통과하기 때문에 추가령구조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추가령구조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좁은 골짜기로 그 길이가 무려 180km에 달하며,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골짜기의 편평한 지역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가 놓여서 전쟁 이전까지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됐다. 과거에는 추가령지구대 또는 추가령열곡이라고도 불렸지만, 발생 원인에 있어 단층작용에 의해 지구대가 형성됐다기보다는 골짜기 좌우에 있는 편마암층에 끼어 있던 화강암 지대가 남대천과 임진강의 차별 침식에 의해 무너지며 형성된 침식계곡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추세다.

한반도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는 단층선에 의해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지형은 단층선을 따라 형성된다. 그중 DMZ에 형성된 추가령구조곡은 지질적·지형적으로 남과 북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 되고 있다. 또한 추가령구조곡은 신생대에 분출한 현무암을 중심으로 선캄브리아대의 변성암과 쥐라기에 형성된 화강암, 백악기에 형성된 화산암 등 과거 여러 시대의 지층이 드러나 있어 지질 학습을 위한 교육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강변의 깎아지른 절벽, 주상절리 적벽

DMZ 주변의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에는 하천 지역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수직 적벽이 강 곳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포천과 연천 일대의 한탄강과 임진강의 적벽 지역에는 작은 폭포 및 주상절리, 판상절리, 못 등 다양한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27만 년 전에 북한의 평강 지역 오리산에서 10회 이상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분출된 용암은 남쪽으로 흘러내려 한탄강의 물길을 메우고 연천을 거쳐 임진강의 하류인 파주까지 95km를 흘러내렸고, 총 641km²의 대지를 덮어 용암 평원을 형성했다. 용암으로 형성된 대지가 식으면서 응고와 축소를 반복하며 4~6각 모양의 기둥으로 굳어졌다. 그곳에 비가 내리면서 중앙 지역을 침식해 깎아내거나,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계가 약한 지역을 따라 침식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길이 막힌 물줄기는 새로운 물길을 찾게 됐고, 이것이 지금의 한탄강과 임진강을 만들었다.

용암 지역의 가운데가 침식되면서 골짜기 양쪽이 모두 수직 적벽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생성됐고, 서로 지질이 다른 암석들의 경계면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화강암이 있는 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현무암이 있는 지역은 급한 경사를 이루어 비대칭형 계곡이 형성됐다.



중동부 산악지역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이 속한 중동부 산악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평지가 적고 대부분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태백산맥 분수계를 따라서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서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골짜기는 좁다.

이들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은 북한강과 소양강이다. 화천·양구군은 북한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제군은 소양강의 영향을 받으며, 이 두 하천은 춘천에서 합류하여 경기도로 흘러든다.

춘천분지는 의암호 건설로 저지대가 상당히 수몰됐으나 소양강 북안에 '우두벌'이 남아 있고 중도(中島) 농업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지 주변에는 화강암의 구릉지가 나타나며, 전체 분지는 대룡산 899m·금병산 652m 등 변성퇴적암 춘천층군의 산지로 둘러싸였다. 한편 춘천의 중심 시가지는 소양강변의 봉의산 302m 기슭에 형성되어 있는데, 봉의산은 춘천분지 중앙에 원추 모양으로 우뚝 솟아 춘천을 상징한다.

인제군에는 고층습원인 '용늪'으로 유명한 대암산 1,304m이 솟아 있고, 대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높은 산지가 양구군과의 경계를 이룬다. 양구군은 서쪽의 화천군과도 높은 산지로 가로막혔고, 남쪽에 소양호가 생긴 뒤 외부로의 통행이 불편해져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게 되었다. 화천댐의 파로호로 유입하는 서천은 화강암 지대를 흘러 골짜기가 넓고 연안에 범람원도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다.

화천군은 대성산 1,175m·광덕산 1,046m 등 한북정맥의 주봉들이 북서쪽의 철원군 및 경기도 포천시와의 사이에 솟아 있고, 화악산 1,468m·용봉 1,436m 등 한북정맥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연봉들이 경기도 가평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원은 대륙 충돌에 의한 변성 작용과



대륙 충들의 증거인 화천 백립암복합체



자벌 통화 침식의 결과인 양구 해안분지(편치불)



국내 최초의 람사르 습지인 인제 대암산 용늪

이후의 중생대 화성 활동 및 신생대 조산 활동과 관련된 지형·지질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춘천분지와 양구 해안분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식분지로 화강암과 변성암류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다. 화천군과 양구군 일대에는 임진강 습곡대를 한반도의 대륙 충돌대로 추정하는 가설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한편 이 지역들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형성된 한반도 지형의 중심축인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일대에는 한반도가 융기 전 전체적으로 낮았음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질·지형 요소가 다수 분포한다. 해발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를 따라 다양한 산지 지형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감입곡류 하천[●]의 발달에 따른 하천 지형의 발달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의 지형적 조건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한편 뗏목, 민요, 목기, 먹거리 등 독특하고 고유한 산촌 문화를 탄생시킴으로써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다양성의 원천이 됐다.

중동부 산악지역의 기후는 비교적 북쪽에 자리 잡았음은 물론, 고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내륙성 기후를 띤다. 겨울에는 매우 낮은 기온을 보이는 반면 여름에는 매우 무덥다. 특히 춘천에는 인공호수가 많아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경동성 요곡운동 한쪽은 높고 급한 면을 이루고, 다른 한쪽은 낮고 완만한 면을 이루는 지형을 경동성 지형이라 하고, 이런 지형에서 지각의 넓은 부분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휘면서 변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산지나 지형은 좌우 비대칭을 이룬다.

감입곡류 하천 대하천의 상류에 해당되는 산간 지역 골짜기를 깊이 파면서 흐르는 곡류 하천. 평탄한 곳에서 자유 곡류하던 하천이 지반이 융기된 후 본래의 유로를 따라 더욱 깊은 협곡을 만들며 곡류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감입곡류 하천은 고위평탄면과 함께 과거 한반도 지형이 융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질공원(Geopark)으로서의 DMZ

지질공원? 지오파크? 어떤 이는 새로 지은 거대한 놀이공원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질공원이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마련한 3대 자연 환경보전제도(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여러 곳을 지정할 수 있으며, 행위 제한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지질공원은 지형·지질유산과 함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보급에 활용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유산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안 내와 해설을 통해 전문적 지식까지도 습득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한탄강의 경관을 보고 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아, 멋있다!” 하고 탄성을 올리고는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좀 더 호기심을 갖고 깊이 이해한다면 더욱 알차고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관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면 보존해야 할 가치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 DMZ는 ‘세계 유일의 냉전 유산’으로서 이 일원은 다양한 특성과 유형의 지형·지질 경관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6·25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독특한 역사·문화유산과 생태유산을 보유하고 된 공간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DMZ는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장소, 희망을 주는 장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장소로 다가올 것이다.



주요 지형·지질유산인 연천 재인폭포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동부 해안지역 - 고성군

고성군의 서부는 비로봉 1,638m-선창산 1,224m-오봉산 1,264m-월출봉 1,580m-차일봉 1,529m 등이 백두대간의 줄기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고지대는 해안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져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와 낮은 구릉들이 나타난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고성군은 남한의 가장 북쪽 끝 지점 최북단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는 화강암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풍화작용과 바위를 깎아내고 모래를 쌓아올리는 파도의 작용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지질과 해안 지형을 만들었다.

특히 석호는 고성 지역이 보유한 대표적인 지형·지질유산이다. 석호는 신생대 제4기 지질시대의 기후 변화와 해수면 변동으로 탄생한 지형으로 바다로부터 분리된 호소(湖沼)를 말한다. 대부분의 석호는 모랫더미에 가로 막혀 민물이 차오른 담수호를 이루는데, 고성의 화진포는 모랫더미가 물길을 완전히 막지 않아 바닷물과 민물이 자유로이 드나들어 해양과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성의 운봉산은 국내의 대표적인 신생대 제3기 현무암 분포 지역이다. 이곳의 현무암은 다양한 종류의 맨틀 포획암[●]과 하부 지각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각 모양의 기둥인 주상절리(柱狀節理)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부서진 현무암 조각이 산비탈을 따라 쌓인 애추[●]와 암괴류가 발달하여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영동 지방에 속하는 고성군은 태백산맥과 동해 바다의 영향을 받아 영서 지방에 비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편이다. 특히 겨울에는 습윤한 북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설량이 많다.

맨틀 포획암(mantle xenolith) 마그마가 냉각·응고되어 이루어진 암석 속에 들어 있는, 다른 종류의 암석 조각
애추(talus) 풍화된 바위 부스러기가 가파른 낭떠러지 밑이나 경사진 산허리에 떨어져 퇴적한 반원추형 지형



남한 최대 규모의 석호인 고성외 화진포



신생대 제3기 현무암이 나타나는 고성의 운봉산



지형·지질로 보는 ‘한반도 자서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 하고, 땅 밑의 암석이나 지층의 상태를 지질이라고 한다. 지형·지질은 지구의 내·외적인 작용에 의해 형성됐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땅과 땅이 만난 터전에 우리 선조들이 평화를 누렸던 만남의 땅, 그리고 미래를 기약하는 약속의 땅 DMZ 일원에는 한반도의 지형·지질유산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 그렇기에 DMZ는 살아 있는 ‘한반도 자서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로 이어진 DMZ에는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색다른 바윗덩이들이 마치 두꺼운 벨트처럼 층층이 지나간다. 그렇기에 철원에서 고성 of 동해안까지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다 보면 현무암, 변성암, 화강암 덩이들이 각기 다른 특징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과주에는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철원과 연천 일대에는 신생대 제4기 초 홍적세 때 지각의 틈을 따라 분출한 용암에 의해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탄강과 임진강 양안으로 이어진 현무암 협곡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절경에 속한다.

DMZ와 군사분계선을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면 전체적인 경사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급하고 서쪽은 완만한 형태를 나타낸다. 신생대 제3기와 제4기에 걸쳐 동해 지각이 확장되며 육지가 솟아올랐는데 그 축이 동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원을 지나 화천과 양구, 인제로 접어들면 높이 솟은 태백산맥과 고위평탄면, 태백산지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발달한 갑입곡류 하천과 침식분지 등이 나타난다.

동해안에 위치한 고성에는 긴 해안선을 따라 모래 해안인 사빈이 연속

발달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해수면 변동의 결과 생겨난 석호가 자리를 잡고 있다. 암석 해안을 따라서는 장기간에 걸친 침식과 풍화로 기이한 지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DMZ 일대는 다양한 특성과 유형의 지형·지질 경관을 포함하고 있지만, 6·25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정전협정 이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손상된 삼림이 복원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천이 과정을 겪고 있다. 이제 DMZ는 '냉전이 낳은 새로운 생태계 공간'으로서의 한반도 자서전을 기록해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청 웹사이트(<http://www.provin.gangwon.kr/>).
- 경기도청 웹사이트(<http://www.gg.go.kr/gg/>).
- 국토지리정보원 웹사이트(<http://www.ngii.go.kr/>).
- 권혁재, 2003, 『지형학』 제4판, 법문사.
- 권혁재, 2003, 『한국지리-총론』 제3판, 법문사.
- 권혁재, 2005,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 김주환, 2009, 『지형학-구조지형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주환, 2009, 『지형학-기후지형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창환, 2011, 『김창환 교수의 DMZ 지리 이야기』, 살림.
- 문화재청 웹사이트(<http://www.cha.go.kr/>).
- 인천광역시청 웹사이트(<http://www.incheon.go.kr/>).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자연지리학사전』, 한울아카데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웹사이트(<http://www.kigam.re.kr/>).
- Richard John Huggett, 2013, 윤순옥 외 10인 역, 『지형학 원리(Fundamentals of Geomorphology)』 제3판, (주)시그마프레스.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보호되고 있고,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생태계 보전이 목적은 아니며, 통일이 되면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생태계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전 정책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됐을 때 그로 인한 혼란 속에 생물의 서식처가 급격히 파괴될 위험이 있다. DMZ 일원은 과거 전쟁의 폐허로부터 생태계가 복원되고 생물다양성의 그린벨트가 됐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60년에 걸쳐 복원된 이곳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과 같은 국내법상의 자연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호지역 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4장 |

DMZ 일원의 생태계

Ecosystem



조도순 |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한국생태학회 회장, 유네스코 MAB(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부
위원장,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IACBR) 위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보호지역포럼 위
원장, 중앙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분과)을 역임했다. 논저로 "Natural
Protected Areas of Republic of Korea" 외 다수가 있다.

한반도 3대 생태축이 만나는 DMZ

한반도의 DMZ를 두고 흔히 역설의 땅이라고 말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기도 하고, 그 참혹한 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곳이지만 지금은 평화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곳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폐허였으나, 생성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원시 생태계가 복원되어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희망의 땅으로 변했다.

DMZ 일원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3대 핵심축인 남북생태축, 동서생태축, 연안생태축을 모두 포함한다.

동부 해안지역의 향로봉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연결되는 백두대간 남북생태축에 위치하고, 강원도 고성군의 동부 해안지역과 김포·강화·옹진의 서부 해안지역은 연안생태축의 일부 분이다.

또한 DMZ 일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및 도시화로 끊어지지 않고 녹색 생태계가 동서 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된 동서생태축이다.





멸종위기종의 피난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DMZ 일원은 향로봉-건봉산-대암산의 원시림을 비롯해, 용늪의 고층 습원, 묵논이 자연 상태로 복원된 자연습지·초지·하천습지, 평지에 형성된 산불의 피해를 받은 천이 초기 산림,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염습지, 서해안의 무인도, 대청도의 사구,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월동지인 민통선 지역의 논 등 매우 다양한 생태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울릉도나 제주도처럼 고립된 생태계가 아니므로 고유종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식물의 40% 이상이 발견될 정도로 DMZ 일원은 생물 다양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자연생태계의 비율 또한 매우 높다. 즉, 도로와 주거지, 공장 등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의 면적이 매우 낮으며 농경지, 목장, 조림지 등 인공생태계의 비율 또한 매우 낮아 높은 자연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며, 습지가 농경지로 이용되지 않고 보전되어 많은 종의 어류·양서류·파충류도 서식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식생의 가장 큰 차이는 소나무이다^{이일규, 1968}. DMZ 설정 후 처음 15년 동안 민통선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산불에 약한 소나무가 거의 다 사라졌고, 그 대신 맹아[※] 발생 능력이 뛰어나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대체된 것이다. 현재 민통선지역에서 소나무는 주로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산능선이나 남사면 등 건조한 곳에 자라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에 이곳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짧은 시간에 성숙한 자연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빈번한 산불로 식생이 2차 천이의 초기나 중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은 충분한 먹이가 제공되어 오히려 성숙한 산림에 비해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포유류 및 조류의 개체군



을 유지시킬 수 있다.

DMZ에 인접한 생태환경 특징은 지형과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서부 해안지역, 중서부 내륙지역, 중동부 산악지역, 동부 해안지역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산림청 2000).

서부 해안지역은 한강 및 임진강 하구를 비롯하여 대규모 습지가 많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기도 하다. 100m 내외의 구릉이 나타나고 비옥한 평야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다. 한강 하구는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로서, 서해 연안습지 생태축을 구성하고 있다.

중서부 내륙지역은 한탄강 유역의 화산지대인 철원평야와 연천을 포함한다. 임진강과 한탄강 등이 자유롭게 굽이치는 가운데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겨울을 난다.

중동부 산악지역은 백두대간부터 한북정맥까지의 북한강 유역으로,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사향노루가 서식한다.

동부 해안지역은 백두대간 동쪽 지역으로, 향로봉에서 건봉산에 이르는 구역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DMZ 일원의 식생 분포

DMZ 내부 - 2차 천이 초기 산림이나 습지

비무장지대의 대부분이 60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DMZ 내부의 식생은 군사적인 목적의 주기적 벌채와 산불로 인해 대부분 단순한 2차 천이 초기의 산림이나 습지로 되어 있다.

소나무는 아주 건조한 능선 지역과 해안의 사구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맹아 발생 능력이 뛰어나 산불에 강한 콩과의 교목인 외래종 아까시나무와 콩과의 관목인 외래종 족제비싸리가 매우 흔히 발견된다.

과거의 묵논은 오리나무, 신나무나 버드나무가 우점하는 숲이거나 물억새, 달뿌리풀이나 줄이 우점하는 습지, 또는 역세의 초지로 덮여 있고, 습지는 하천형 습지, 묵논 습지 외에도 범람원 지역과 평야 지역에도 형성됐다.

DMZ 내부에도 외래종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0년 경의선 철도 공사 구간의 경우 돼지풀, 미국쭉부쟁이, 개망초, 서양민들레, 미국개기장, 달맞이꽃, 아까시나무, 족제비싸리 등 8종의 외래종이 출현했다. 건설교통부 2002, 중부지역의 DMZ 내부 조사²⁰⁰⁹에서도 돼지풀, 단풍잎돼지



강원도 고성군 동해안의 석호(감호) 및 사구 식생. 사구에 형성된 2차림과 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의 습지. 물억새의 습지와 산불의 피해로부터 재생 중인 2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 미국쭉부쟁이, 미국개기장, 미국가막살이 등 모두 21종의 귀화식물이 조사됐다.

서부 해안지역 - 웅진, 강화, 김포

한강 하구에 위치하는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해발 200~300m 이하의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산지와 한강 하구의 염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김포시와 강화군의 저지대 삼림 식생의 대부분은 상수리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소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다 산림청 2000. 강화군 일대의 여러 갯벌에는 해홍나물 등의 염습지 식생이 비교적 넓게 발달해 있다.

경기도 웅진군의 백령도와 대청도의 삼림 식생은 소나무-소사나무 군락이 대표적이며, 해안가에는 곶솔 군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웅진군 대청도의 옥죽동 일대 해안에는 해풍의 영향으로 사구가 크게 발달해 있으며, 해당화 군락, 순비기나무 군락, 갯쇠보리 군락, 통보리사초 군락, 줌보리사초 군락, 갯그렁 군락, 갯메꽃 군락, 도깨비사초 군락 등의 사구 식생이 발달해 있다 문화재청 2006.

강화도 교동의 갯벌, 강화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를 흐르는 한강 하구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청도 목죽동의 사구. 남한 최대의 사구로서 사구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조림으로 인하여 원형이 훼손되어 있다.

중서부 내륙지역 - 파주, 연천, 철원

철원군의 철원평야 일대에는 과거 농경지였던 저지대에 지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우리나라 충적지대의 대표적인 식생인 버드나무-신나무 군락이 흔히 나타난다.

경기도 연천군의 고대산^{832m} 일대는 굴참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의 비교적 잘 발달된 삼림 식생이 나타난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야월산^{487m} 일대에는 상수리나무 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천덕산^{477m} 역시 상수리나무 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이 발달해 있다(환경처 1992).

파주시의 민통선지역은 대부분 500m 이하의 야산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작지, 초지, 아까시나무림, 천이 초기의 2차림, 조림지 등으로 덮여 있다. 남북 연결도로가 건설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일대 민통선 지역의 식생은 물박달나무림, 신갈나무림, 상수리나무림, 아까시나무림 등으로 구성됐다(건설교통부 2002).

중동부 산악지역 - 화천, 양구

강원도 양구군의 대암산, 대우산, 두타연 지역은 동쪽으로는 향로봉 산맥과 연결되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무산^{1,319m}을 통하여 금강산 권역에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동서 남북 각 방향에서 침입한 식물종이 혼생하여 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암산 정상부에 있는 용늪은 남한 최대의 고층습원으로 많은 희귀식물과 함께 개마고원과 백두산 등지의 고산지대의 습지나 초지에서 나타나는 북방계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환경부 1995}.

양구의 수입천은 북한 지역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서 두타연을 거쳐 파로호로 유입된다. 이 하천의 가장자리에는 전형적인 하반림 ^{河畔林}이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남방경제선 부근에서는 하천의 중심부로부터 달뿌리 풀 군락, 갯버들 군락, 버드나무-신나무 군락이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어

양구군 대암산의 용늪. 남한 최대의 고층습원으로 사초 기둥이 잘 발달되어 있다.



DMZ 일원의 식생

지역 구분	행정구역	장소	대표 식생(우점종)
서부 해안 지역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신갈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문수산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상수리나무, 소나무, 아까시나무
		강화도 갯벌	염습지
		교동도	상수리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소나무, 소사나무, 곰솔, 신갈나무
		대청도 옥죽동	사구 식생
		백령도	소나무, 소사나무, 곰솔
중서부 내륙 지역	강원도 철원군	적근산, 대성산	신갈나무
		안암산	굴참나무
		금학산	신갈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팽야지대	버드나무, 신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	굴참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야월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천덕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대성리	상수리나무
		장단면 거곡리	염습지
		장단면 군내리	물박달나무,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중동부 산악 지역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	고층습원
		수입천 상류	허반림
		백석산	신갈나무
	강원도 화천군	흰바우산	신갈나무, 소나무
		재안산	신갈나무, 소나무
동부 해안 지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향로봉 산맥	신갈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굴참나무, 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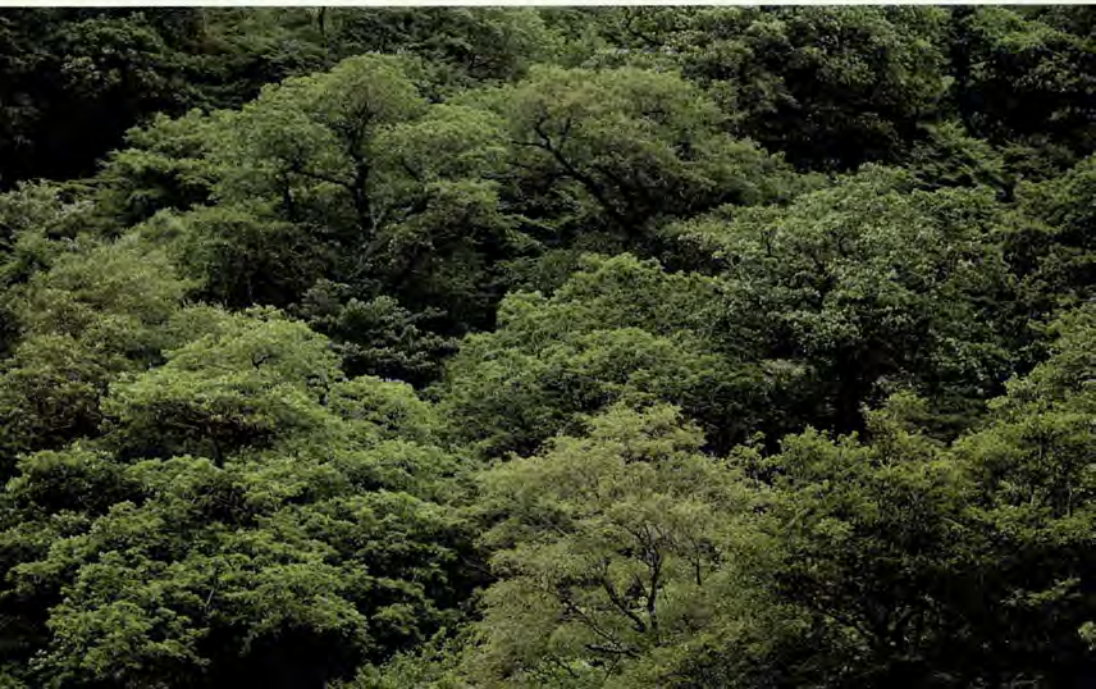
하천 식생 및 하반림의 대표적인 발달 형태를 보여준다 문화재청 2007a.

화천군 흰바우산^{1,179m} 지역의 산림은 인간의 간섭이 정지된 뒤 2차적으로 발달한 식물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갈나무 군락이고, 그 외에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혼재한다. 재안산^{955m} 지역의 산림도 인간 간섭이 정지된 뒤 2차적으로 발달한 신갈나무, 소나무 등을 우점종으로 하는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문화재청 2005.

동부 해안지역 - 고성

금강산 동남쪽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일대의 해안지대는 전체가 해발 400m 이하의 저지대이므로 해송과 소나무로 덮여 있어야 하지만, 남북의 군인들이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산불로 인해 소나무숲이 모두 파괴됐다 이일구 1968. 산지에는 움이 잘 나는 참나무류

고성군 서화면 향로봉 부근(큰굴)의 원시림. 계곡 부근에 위치해 있어 산불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 원시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숲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과거의 논과 밭이었던 계곡의 습지대는 버드나무와 오리나무, 물오리나무 등이 상층 수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조 2001, 문화재청 2007.

향로봉 1,293m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건봉산 977m, 남쪽으로 칠절봉 1,172m으로 이어지는 향로봉 산맥 지역은 자연이 잘 보존된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이곳에는 고진동계곡이나 오소동계곡 등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 많으며, 특히 향로봉 남서쪽의 큰골계곡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원시림을 볼 수 있다 환경부 1995, 문화재청 2007a,

DMZ 일원의 식물상

DMZ 일원^{실제로는 민통선지역}의 식물상은 142과 629속 1,499종 4아종 294변종 57품종 10잡종, 총 1,864종류이며, 이는 한반도 전체 식물종의 거의 50%에 해당한다.

DMZ 일원의 식물상을 동부 고성, 인제, 양구와 중부 화천, 철원, 연천, 서부 포천, 김포, 강화, 용인로 나눠 비교해보면 동부지역은 총 1,570종류, 중부지역은 총 1,102종류, 서부지역은 총 1,278종류로 나타나는데, 동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2007b.

동부지역은 산악지역으로서 특히 향로봉 산맥을 중심으로 산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원시림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상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중부지역은 산이 비교적 낮거나 평지로 산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인위적 영향을 많이 받아 동부지역에 비해



DMZ 일원의 우수 생태계

DMZ 일원의 일부 우수한 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구군 대암산의 용늪은 국내 최초로 국제습지협약(람사르 협약)의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됐다. 인제군과 고성군에 걸쳐 있는 칠절봉-향로봉-고성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DMZ 일원에는 많은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제-고성의 향로봉-건봉산 일대(천연기념물 제247호)와 양구의 대암산-대우산-가칠봉 일대(천연기념물 제246호)는 각각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 외에도 강화군의 강화 갯벌 및 저어새 서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웅진군 신도의 노랑부리백로와 갯이갈매기 번식지(천연기념물 제360호), 김포시와 파주시의 한강 하구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거울철 두루미의 식수 공급원인 철원군 샘통 일대의 천통리 철새 도래지(천

DMZ 일원의 습지 분포와 주요 서식 동식물



연기념물 제245호), 양구군의 개느삼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2호),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천연기념물 제412호), 화천군의 황쏘가리 서식지(천연기념물 제532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한강 하구는 천연기념물 외에도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3년 7월 19일 환경부는 DMZ 생태계 가치의 중요성과 효율적 보전 방안을 알리기 위한 '생태 환경대회'를 열고 DMZ 깃대종으로 두루미를 선정했다. 깃대종은 그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가리킨다. 또 DMZ 일원의 대표 생물 12종으로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수달, 점박이물범, 사향노루, 두루미, 독수리, 산양, 재두루미, 닳꽃, 날개하늘나리, 금개구리를 소개했다.





DMZ 일원의 한국 특산속 식물인 금강초롱(맨 위)과 개느삼

식물상이 상당히 낮다. 서부지역은 중부지역에 비해서 식물상이 조금 더 다양한데, 이는 임진강-한강 하구의 저습지와 서해 도서의 염습지가 포함되어 다양한 서식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DMZ 일원의 한국 특산식물은 36과 70속 87종 10변종 5품종의 총 102종류인데, 동부지역에 82종류, 중부지역에 57종류, 서부지역에는 32종류가 분포한다.

DMZ 일원의 한국 특산식물 중에는 개느삼 *Echinosophora*과 금강초롱 *Hanabusaya* 등 2종의 한국 특산속 식물이 포함되는데, 개느삼은 양구군, 금강초롱은 향로봉 산맥의 동부지역에 자란다. 한국 특산식물로는 호랑버들, 매자나무, 참배암차즈기, 회양목, 금강분취, 솔나리 등이 있다. 한국 특산종은 아니지만 대청붓꽃은 우리나라에서 대청도와 백령도의 해안 절벽에서 소수로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DMZ 일원의 동물상



포유류

서해 도서를 포함한 DMZ 일원실제로는 민통선지역의 야생 포유동물은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개, 고양이, 염소 등 야생화된 가축을 제외하고 모두 6목 17과 51종이다(윤성일 등 2007, 문화재청 2007b). 이 가운데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 등 6종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늑대, 시라소니, 호랑이, 표범은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지역 15종, 중부지역 32종, 동부지역 31종이다.



DMZ 철조망 사이에 서 있는 다람쥐

서부지역의 야생 포유동물 종이 적은 것은 농경지가 많아 민간인의 출입이 잦고, 먹이는 풍부하지만 은신처가 되는 산림의 발달이 적어 야생동물의 서식 여건으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부지역에서 언급할 종은 점박이물범이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 부근에서만 수백 마리가 서식하지만, 겨울 서식지인 중국의 급격한 서식 환경 변화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중부지역과 동부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삥,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한다.

조류

지금까지 기록된 DMZ 일원의 조류는 모두 15목 52과 263종으로서 비교적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문화재청 2007b}. 포유류와는 달리 서부지역이 180종으로 가장 많고, 중부지역이 175종, 동부지역이 142종으로 가장 적다. 행정 단위별로는 바다와 해안이 있는 서해의 강화군과 동해의 고성군, 그리고 중부 내륙지역의 철원군에서 다양한 조류들이 출현한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 31종이 있다^{문화재청 2007b}.

DMZ 일원은 멸종위기종 조류의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에 약 1,400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는 한강 하구에 위치한 유도김포시, 서해안 무인도인 비도와 석도^{강화군} 등에서 번식하고 있다^{산림청 2000}. 즉,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는 강화도 인근 해역이며, 이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어새 서식지로서 강화도 인근 해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DMZ 일원은 또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월동지로 매우 중요하다. 두루미는 여름에 러시아에서 번식하지만 겨울에 남하하여 월동하게 되는데, 전 세계 약 2,500마리의 두루미 가운데 약 1,000마리는 DMZ 일원인 철원, 연천, 파주 등지에서 월동한다. 이 가운데 철원평야가 가장 중요한 월동지인데, 이는 철원평야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 논농사와 낙곡이 많이 떨어지는 기계를 이용한 수확 방법, 겨울에도 얼지 않는 온천인 샘통의 물,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비무장지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가장 알맞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는 철원평야와 임진강 하구 및 한강 하구에서 월동한다. 한편 독수리는 몽골 등지에서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서식 중인 저어새 무리

찾아오는데, 특히 임진강 하구 부근의 장단반도가 주된 월동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해안에는 많은 석호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동해안의 비무장지대 일원은 고니, 큰고니, 흑고니, 저어새 등 많은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 또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타 동물

민통선지역의 동물로서 담수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도 여러 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왔다. 비무장지대 내부에서도 이런 동물들이 확인됐으나 조사의 제약으로 인해 그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이런 분류군의 종 목록 자료는 모두 민통선지역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담수어류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옹진군과 강화군으로부터 임진강 및 한강 수계인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동해안 수계인 고성군을 합쳐 총 출현 종은 13목 41과 156종이다(문화재청 2007b).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은 어름치와 황쏘가리의 2종이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는 모두 10종이 있다. 과별로는 잉어과^{47종}와 망둥어과^{30종}가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종 어류의 중요 서식지로는 연천군 임진강 상류의 꾸구리 및 돌상어 서식지, 철원군 한탄강 상류의 어름치 서식지, 화천군 북한강 상류의 황쏘가리 서식지, 양구군 두타연의 열목어 서식지, 고성군 고진동 남강 상류의 벼들가지 서식지, 고성군 명파리의 칠성장어 서식지를 들 수 있다

문화재청 2007b,

DMZ 일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양서류와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대체로 한 시·군에서 약 20여 종의 양서파충류가 발견된다. DMZ 일원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 I급 양서파충류로는 구렁이가 있으며, 멸종위기 II급에는

국내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인 두타연과 열목어. 두타연은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50여 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원시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금개구리, 땃꿩, 남생이, 표범장지뱀, 까치살모사가 있다. 이런 양서류와
류의 높은 다양성과 함께 이들 멸종위기종의 존재는 DMZ 일원이 양서류
충류의 보전에도 매우 중요한 서식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문화재청 2007b).

DMZ 일원의 곤충도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되어왔으나, 곤충 역
시 DMZ에서는 조사된 종수가 크게 제한되어 대부분의 자료는 민통선지역
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DMZ 일원의
곤충은 육상 곤충 1,912종, 수서 곤충 166종이며, 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곤
충 종수의 약 16%에 해당한다. DMZ 일원에 서식하는 곤충 가운데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종으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로 연
천군의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다(문화재청 2007b).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자체를 보전하
는 것이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보호되고 있
고,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생태계 보전이 목적은 아니며, 통일이 되면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생태계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전 정책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됐을 때 그로 인한
혼란 속에 생물의 서식처가 급격히 파괴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정전협정
과 군사시설보호법을 대신해서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거나, DMZ와 아직 보호되고 있지 않은 생태적 가치가 큰 우수

민통선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과 같은 국내법상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DMZ 일원은 과거 전쟁의 폐허로부터 생태계가 복원되고 생물다양성의 그린벨트가 됐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60년에 걸쳐 복원된 이곳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보호지역 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DMZ에는 판문점 인근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살지 않지만 민통선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DMZ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환경부와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2011년에 철원의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남한의 DMZ 일원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했으나, 2012년의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보 판정을 받아 재신청을 추진 중이다. 특히 두루미와 겨울 철새의 보전에는 주민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이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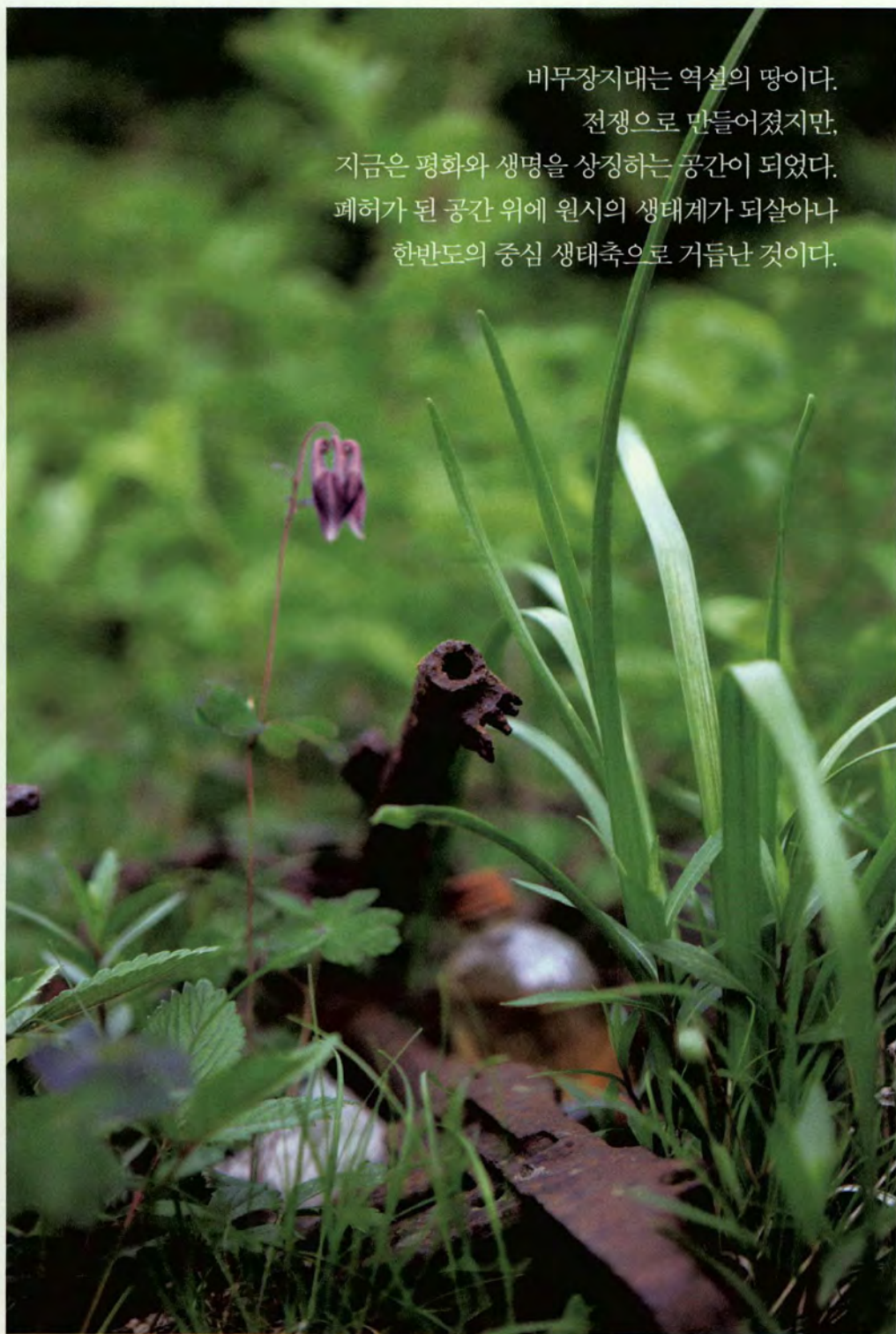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강원도, 1987, 「민통선 북방 지역자원 조사보고서(자연보호중앙협의회 용역 보고서)」, p. 695.
- 경기도, 1987, 「민통선 북방 지역자원 조사보고서(자연보호중앙협의회 용역 보고서)」, p. 553.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2,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환경영향 결과 보고서」.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 종합학술 조사 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 보고 제7호, p. 316.
-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 자연 종합학술 조사 보고서」, p. 291.
- 문화재청, 2005, 「군사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 조사 보고서(중부지역)」.
- 문화재청, 2006, 「군사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 조사 보고서(서부지역)」, p. 463.

- 문화재청, 2007a, 「군사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 조사 보고서(동부지역)」, p. 378.
- 문화재청, 2007b, 「군사집경지역 자연유산 기초자원 조사 보고서(종합요약)」, p. 139.
- 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 및 인접 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1995-2000」, p. 625.
- 윤성일, 계명찬, 이흥식, 2007, 「DMZ 및 군사 집경지역의 포유류상」, 『한국환경생물학회지』 25, pp. 215-222.
- 이우철, 조도순, 2001, “강원도 고성군 송원리 일대의 식물상.”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고성군)의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 이일구, 1968, 「DMZ에서의 소나무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식물학회지』 11, pp. 21-29.
- 환경처, 1992,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민통선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
- 환경부, 1995, 「'95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민통선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보고서(1)」, p. 605.
- 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2009, 「DMZ 서부지역 생태·산림·문화재 현황 조사·연구 보고서」, p. 311.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0, 「DMZ 중부지역 생태계 조사 보고서」, p. 278.



비무장지대는 역설의 땅이다.
전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폐허가 된 공간 위에 원시의 생태계가 되살아나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으로 거듭난 것이다.



DMZ 일원을 동서로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은 화산 폭발의 산물이었다. 신생대 제4기 홍적세 때 강원도 평강 오리산과 검불량 680고지 등에서 여러 차례 용암이 분출했다. 느린 속도로 흐른 용암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절경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 형성된 용암대지는 고인류가 터전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굴된 유물·유적은 30만 년 전에 고인류가 살았음을 증명한다.

DMZ 일원은 역사시대에도 동북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유서 깊은 곳으로, 정전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덕분에 문화유산의 보고로 남아 있다. 현재 이곳은 남북한의 요새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양쪽의 중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쟁과 분단, 냉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DMZ 일원은 살아 있는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철원 승일교

| 5장 |

DMZ 일원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이기환 | 경향신문 선임기자

한양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 논저에 「비무장지대 일원 유산의 보전 방안 연구」(석사 논문), 『분단의 섬 민통선』, 『한국사 미스터리』(공저), 『코리아만 루트를 찾아서』(공저), 『성산 장기려』, 『한국사 기행』(공저), 『아버지의 얼굴』, 『우리 큰형 이야기』, 『끝없는 도전』 등이 있다.

문명의 태줄

- 자연유산으로서의 비무장지대

한반도의 배꼽, 오리산

한반도는 안정된 지괴를 갖고 있어서 신생대에 이르러서도 격심한 조산 운동 造山運動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임진강과 한탄강은 신생대 제4기 홍적세 200만 년 전~1만 년 전 때 지각 변동이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화산 폭발이 있었다. 이 폭발은 증기와 용암이 폭발하는 ‘중심분출’이라기보다는 벌어진 지각 틈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열하분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폭발이 일어난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거대한 화산체가 생기지는 않았다.

오리산 453m과 검불랑 680고지 등에서 적어도 11회 이상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렸고,¹ 이로써 평강과 철원, 이천, 김화, 회양 등에 걸쳐 무려 650km² 약 2억 평에 달하는 지역이 용암의 바다로 변했다. 흘러갈 낮은 곳을 찾은 용암은 포천과 연천을 지나 검불랑에서 흘러온 용암과 합류해서 경기도 파주시 화석정 부근에 이르러 긴 여정을 끝냈다.

화산 진원지인 오리산이 있는 평강 330m에는 두꺼운 현무암층이 형성돼 평강고원을 이루었고, 용암은 평강에서 철원 220m을 지나 포천, 연천, 파주

철원 동주산성에서 바라본 평강고원과 오리산.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광활한 철원평야와 임진강, 한탄강이 조성됐다.



로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두께가 얇아졌다. 또 평강 및 철원 일대를 뒤덮은 용암이 식으면서 광활한 현무암 대지가 형성됐는데 이것이 철원평야이다. 용암이 흘러간 포천, 연천, 파주 지역에도 좁은 용암대지가 생겼다.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되자 고도가 높은 평강과 철원에서 녹기 시작한 빙하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렸다. 녹아버린 빙하 때문에 액체 상태의 용암이 현무암으로 굳어지면서 수축작용이 일어났다. 용암과 맞닿았던 원래 지형과 수축한 현무암 대지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흐를 곳을 찾은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했다. 오리산 쪽에서 흐른 물은 한탄강이 됐고, 검불랑 쪽에서 내려온 역곡천과 평안천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도감포에서 다시 임진강과 합쳐진다.

용암 분출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지형과 지모(地模)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강은 심한 곡류를 이루고, 강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는 주상절리 현상에 따른 현무암 단애(斷崖, 즉 적벽(赤壁)을 형성했다. 단애는 900~1200℃에 이르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에 있는 구라이 현무암 협곡 큰 가마소, 주상절리가 일품이다.



공기 중에 노출되는 용암이 다른 물질과 접촉하여 급속히 식는 과정에서 용암 내부에 있던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는 암석 속에 기포로 남아 현무암이 된다. 지금도 철원, 연천, 포천, 파주 등지에는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이 지천에 널려 있다.

이 현무암 내부의 절리 현상은 임진강·한탄강 유역에 수직단애라는 환상적인 풍광을 빚어냈다. 현무암은 원래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침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특히 침식 원인이 있는 취약한 곳에서 급속하게 무너지는데, 수직절리 현상이 있는 곳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절벽을 만들어낸다.²

수직단애의 절경은 <선덕여왕>과 <신돈> 등 사극의 촬영 무대가 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의 비둘기낭, 한적한 논두렁 바로 곁 수폴 너머에 펼쳐진 영북면 윤천리의 부소천 단애, 창수면 운산리의 도리못 주상절리와 구라이 현무암 협곡, 관인면 중리의 명우리 주상절리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 일원의 임진강과 한탄강에도 절경의 주상절리를 자랑하는 협곡이 많다.³

강가와 고산 분지에서 선사의 세계를 만나다

1978년, 주한 미 공군 예후대 소속 그레그 보웬 병사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변을 산책하다가 사람이 깎은 듯한 흥미로운 돌을 발견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보웬 병사가 찾아낸 돌은 바로 아슐리안 Acheulian 형 주먹도끼였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구석기시대에 다용도 칼로 쓰인 도구이며, 약 30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선사시대 고속도로'인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도구로,⁴ 150만 년 전~10만 년 전 고인류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세계 고고학계에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근거로 고인류 단계에서부터 서구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가 문화적으로 뒤쳐졌다고 주장하는 미국 모비우스 H. Mobius 교수의 가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가설을 뒤엎은 일대 사건이었다.

2001년 전곡리 주먹도끼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30만 년 전이라는 추정값이 나왔다.⁵ 이로써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은 세계 고고학 지도에 등재됐고, 미국 고고학 전공서적 내용에도 포함됐다. 이후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20여 곳의 구석기 유적이 더 확인됐다.

한편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는 8,000년 전의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됐다. 이곳에서는 동북아 초기 신석기 문화의 양대 토기라 할 수 있는 덧띠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등이 나왔고,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옥결옥으로 만든 귀고리가 출토됐다.⁶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는 가칠봉 1,242m, 대우산 1,179m, 도솔산 1,148m, 대암산 1,304m, 달산령 807m, 먼맷재 730m 등 험산 준령이 남북 방향 11.95km, 동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 분지가 산에 둘러싸여 오목하게 들어앉은 독특한 지형이 화채 그릇과 닮았다 하여 한국전쟁 때 '편치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 길이 6.6km의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분지가 산에 둘러싸여 오목하게 들어앉은 독특한 지형이 화체 그릇과 닮았다 하여 한국전쟁 때 ‘편치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U자형인 분지의 단면 맨 밑바닥의 고도가 400~500m이니 주변 산보다 400~800m 낮은 셈이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차별 침식의 결과 생겨났다. 즉, 분지 중심부는 중생대 쥐라기¹ 800만 년 전~1억 3,500만 년 전에 지각을 뚫고 올라온 화강암이고, 분지 바깥쪽은 선캄브리아기⁵ 4,000만 년 전의 변성퇴적암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심부의 화강암이 고온 습윤한 기후 때문에 주변의 퇴적암보다 훨씬 빨리 침식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지형으로 바뀐 것이다.⁷ 고산 지역에 생긴 이 천혜의 분지는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어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을 연상케 한다.

1986년부터 이곳 해안분지에서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시대의 표지 유물인 고인돌 20여 기와 덧띠무늬 토기, 그리고 철도자 鐵刀子, 쇠손칼 등 철기시대 유물이 나왔다.⁸ 이를 통해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대를 이루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난세의 여울

- 역사유산으로서의 비무장지대

한성백제와 태봉국의 도읍을 찾아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강은 고속도로의 역할을 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그랬다. 더구나 용암대지가 낳은 강 유역엔 야트막한 구릉지대



와 드넓은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어 한반도 경영의 야망을 품고 있던 세력에게는 자신의 근거지를 건설하기에 더없이 좋은 터전이 됐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 세력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태자 유리에게 “용납되지 않을까 두려워” 추종자들을 이끌고 남하한다(기원전 18년).

당시 역사를 웅변해주듯, 개포 장학리·연천 횡산리·삼꽃리·삼거리·우정리·동이리·파주 학곡리 등으로 임진강변을 따라 백제 적석총이 일정 간격으로 이어진다. 이 적석총들은 압록강 중·하류 및 혼강(渾江) 본·지류에 분포하는 고구려 적석총과 분포 양식이 비슷하고, 연대도 1~2세기경으로 판단된다.

파주시 주월리 육계토성도 심상치 않은 유적이다. 한성백제[●]의 도읍인 하남위례성(하남포성)과 비슷한 형태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풍납토성(둘레 3.5km, 한강과 육계토성 1.858km, 임진강은 모두 강기슭을 따라 축조된 평지성이고, 배후에 산성(남한산성, 칠층성)이 버티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백제 적석총이 분포하고 있다. 한강변에는 석촌리 고분군이, 임진강변에는 학곡리 적석총 등 7곳의 고분군이 밀집돼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를 보면, “낙랑과 말갈이 영토를 침략하므로 도읍을 옮겨야 했다. 한수 남쪽의 땅이 기름지므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해야겠다. 기원전 6년 정월 천도했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백제가 건국된 기원전 18년부터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기원전 6년까지 만 12년 동안 한수 이북에 초기 백제의 도읍이 존재했다는 얘기다. 한수 이남에 천도한 도읍이 하남위례성이라면, 한수 이북의 도읍은 하북위례성이라 할 수 있다. 육계토성이 바로 그 하북위례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한성백제 백제가 건국된 때부터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하남위례성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500년간(BC 18~AD 475년)을 가리킨다.



삼곶리 적석총. 임진강 유역에는 백제 적석총 77가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돼 있다.

강원도 철원의 군사분계선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 태봉국 도성 터. 휴전선과 경원선 철로가 동서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다.⁹

후삼국시대 궁예가 강원도 철원군 풍천원 별관에 쌓은 '태봉국 도성'도 의미심장한 유적이다. 태봉국 도성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따르면 도성의 규모는 외성이 12.5km, 내성이 7.7km에 이른다. 백제의 풍납토성^{3.5km}, 고구려의 국내성^{2.7km}보다 훨씬 크고, 조선의 서울성곽^{17~18km}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¹⁰

『주역』에 의하면, 태봉의 '태^泰'는 "천지가 어울려 만물을 낳고 상하가 어울려 그 뜻이 같아진다"는 뜻이며, '봉^封'은 '봉토'를 의미한다. 궁예는 '영원한 평등 세계를 꿈꾸는 대동방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풍천원 별관을 도읍지로 삼은 것이다.¹¹ 태봉국 도성은 905년부터 918년까지 13년간 궁예의 도읍지였다.

역사적 위기의 현장들

1592년 4월 임진왜란을 맞이한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파천길에 오르면서 건넜다는 파주시 문산읍의 임진나루도 유서 깊은 곳이다. 이곳은 파주-개성-평양-의주로 이어지는 1번 국도의 관문이었다. 선조가 밤의 어둠을 뚫고 임진나루를 건너 동파역^{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서 하룻밤 묵을 때 임금을 호종하던 호위병은 물론 사관^{史官}들까지 도망쳤다. 한양에서 의주에 이르는 피란길에 임금을 끝까지 수행한 문무관은 겨우 17명뿐이었다 『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 1일,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발을 매던 백성들이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시면 누구를 믿고 사느냐' 울부짖었다"고 고발했다.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반정군의 비밀 훈련장이었던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덕진산성도 의미 있는 유적이다. 장단부사 이서는 1622년 무렵부터 덕진산성을 쌓고 반정군을 훈련시켰다. 1623년 3월 12일 이서가 이끄는 700명의 정예병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은 창의문을 뚫고 창덕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파천길에 오른 선조가 건넜다는 일화로 유명한 임진나루

병자호란 때 전사한 조선군 병사들을 묻은 전골총.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



궁으로 진격해 광해군을 몰아냈다『인조실록』 1623년 3월 13일.

또 육군사관학교 조사단이 지뢰 지대를 뚫고 개척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성산성과 생창리 일대는 병자호란¹⁶³⁶의 2대 승첩^{용인}인 광교산 전투, 김화저구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이 전투에서 문관 출신인 홍명구가 이끄는 근왕군은 전멸했지만, 무관인 유림이 이끄는 근왕군은 청나라군을 대파한 뒤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왔다. 이때 전사한 조선군의 유해를 모아 묻은 곳이 바로 전골총^{戰骨塚}이다.¹² 전골총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

신앙의 성지들

호국불교의 성지인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건봉사는 758년 발징 스님이 만일선원^{萬日禪院}을 연 이래 국가 위기 때마다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가 열린 곳이다. 만일선원이란 결사를 통해 모인 스님과 신도들이 1만 일²⁷년 5개월 동안 아미타불 염불을 외며 신행을 닦는 모임을 일컫는다. 발징 스님의 염불만일회 때는 덕행이 높은 수행승 31인과 향도계원 1,280명이 참가했다. 785년 1만 일이 되던 어느 날, 아미타 부처님의 가호로 31인의 육신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961인의 향도와 함께 극락왕생했다고 한다. 또한 건봉사는 1593년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 700명을 모아 조련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조련된 승병들은 평양성, 개성,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¹³

경기도 연천시 보개산 군^群의 하나인 환희봉^{877m} 정상 바로 밑에 터만 남은 석대암^{石臺庵}은 이른바 지장신앙^{*}의 성지이다. 고려 말의 학자 민지^{閔漬} 1248~1326가 지은 『보개산 석대기』에 석대암 창건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지장신앙 자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는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을 믿는 보살신앙이다.

720년경 신라 성덕왕 19년, 사냥꾼인 이순석·순애 형제가 금빛 뱀돼지를 보고 활을 쏘았다. 화살에 맞은 뱀돼지는 피를 흘리며 환희봉 쪽으로 달아났다. 형제가 쫓아가 보니 혈흔이 멈춘 곳에 금빛 뱀돼지는 없고, 샘물 가운데 머리만 살짝 내놓은 석상이 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상 왼쪽 어깨에 형제가 쏜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형제는 그곳에 석대암을 창건하고 지장보살상을 모셨다.

이순석·순애 형제가 석대암에 모셨다는 지장보살상은 현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심원사에 봉안돼 있다. 신기하게도 보살상 왼쪽 어깨에는 정말 화살 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백학산 고지 229m는 군사분계선에서 2km 정도 떨어진 남방경계선에 접한 곳이다. 2005년, 육군 1사단 주임원사인 임종인 씨가 이 고지 부근의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 거대한 석불을 발견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가지런히 놓인 거대한 불상이었다. 몸통은 3m 34cm, 머리 높이는 1m 34cm이니 전체 크기가 4m 68cm에 달한다.¹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불상의 조성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고려 초기 광종재위 949~975 시대 때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석불 巨石佛의 계보일



이순석 형제의 화살이 박힌 흔적이 남아 있다는 석대암 지장보살상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 발견된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석불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15세기 조선시대의 무덤에서 보이는 문관석文官石의 형태를 모방한 불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 어떻든 미확인 지뢰 지대 사이에서 발견된 거석불의 존재는 신비롭기만 하다.

삶과 죽음의 공간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는 남방경계선임을 알리는 철책을 병풍 삼아 고즈넉이 누워 있는 왕릉이 있다. 신라의 1000년 사직을 고려 왕조에 바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능묘이다. '신라 경순왕릉 新羅敬順王之陵'임을 알리는 비석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6발의 총탄 세례를 받았으니, 마치 경순왕의 기구한 사연을 알려주는 듯하다.

935년 10월, 경순왕은 “죄없는 백성들의 간과 뇌를 땅에 바르도록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며 고려에 투항한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을 정승공政承公에 봉하고, 신라를 경주로 칭한 뒤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전 신라 땅은 모두 정승공의 식읍이 됐고,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가 경순왕의 신부가 됐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순왕조’에 의하면, 경순왕이 신라 백관을 이끌고 경주를 떠나 송도로 향할 때 “수레와 보배로 장식한 말이 30여 리를 이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두른 듯했다”고 한다. 경순왕은 나라가 망한 뒤 43년이나 더 살았고, 왕건보다 35년이나 장수했다. 그런 그가 천수를 다하고 978(경종 4년), 윤구가 경주를 향해 가자 신라 유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속전인 『계림문헌록』은 “왕의 윤구가 경주로 향하고 유민들 전원이 양식과 침구 일체를 들고 따라나서자 송도가 텅 빌 정도였다”고 기록했다. 그러자 당황한 고려 조정은 긴급 군신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운다. 급기야 “왕의 윤구는 100리를 넘지 못한다 王輿不車百里外”는 구실로 윤구의 경주행을 막는다. 경순왕은 결국 고랑포를 떠나지 못하고 묻힌 것이다.



민통선 이북에서 우연히 찾아낸 조선시대 의성 허준의 무덤

남방경계선 철책을 병풍 삼아 자리 잡고 있는 신라 경순왕릉.
비석에는 한국전쟁 당시 총탄을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991년 7월 어느 날, 민통선 이북 지역을 헤매던 고문헌 연구가 이양재 씨가 파주시 장단면 하포리에서 도굴된 무덤을 발견했다. 조선시대 의성^{醫聖} 허준의 무덤을 찾아다니던 그에게 느낌이 왔다. 땅속을 급히 파보니 비석이 나왔다. 두 쪽으로 동강난 명문 비석이었다.

명문은 '陽平○○聖功臣 ○浚', 즉 '양평○○성공신 ○준'이었다. 허준이 분명했다. 허준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1604년 호성공신^{威聖功臣}에 오른 바 있다. '호성공신'은 서울에서 의주까지 임금의 가마를 모신 공신을 뜻한다.¹⁵ 불후의 명작이자 동양 최고의 의서로 자리매김한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자취는 이렇게 극적으로 세상과 마주했다.

고려시대 벽화가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서곡리 벽화묘도 기구한 사연을 담고 있다. 12지신을 의미하는 동물 형상의 관모를 쓰고 있는 12명의 인물상과 성신도가 그려진 벽화묘였다. 문제는 무덤의 주인이었다. 무덤의 비석은 분명 여말선초의 문신인 한상질^{1350?~1400}의 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덤 바로 앞의 흙에서 무덤 원주인의 것이 분명한 묘지석이 발견된 것이다.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공이 고려 말 문신인 창화공 권준^{1280~1352}임을 알려주고 있었다.¹⁶ 그러니까 한씨 집안이 600년 가까이 엉뚱한 분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다.

이밖에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해종}이라고도 함의 황후로 원제국을 쥘락 쪼락했던 기황후의 무덤이라 알려진 전^傳 기황후 묘는 경기도 연천군 상리에 있다.



파주 서곡리 벽화묘에서 확인된 묘주인의 그림

또 조선조 태종 이방원의 절친이지만,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외치며 몸을 숨긴 은둔자 이양소^{1367~?}의 무덤은 연천군 중면 적거리에 있다. 이양소는 자손들에게까지 “앞으로 12대까지는 벼슬할 생각을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전하는데, 가히 지독한 은둔이라 할 수 있다.

1619년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요동 파병군을 이끌고 후금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은 김응하 장군^{1580~1619}의 빈묘가 강원도 철원군 대외리에 있다. 김응하 장군은 철창이 가슴을 관통한 상황에서도 활을 놓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다고 한다. 『광해군일기』에는 “후금군조차 김응하의 분전에 감탄하고 애석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19년 3월 12일, 명나라 신종 재위 1572~1620도 김응하 장군에게 ‘요동백(遼東伯)’이라는 작위를 내릴 정도였다. 『광해조일기』. 이들 모두 비무장지대 일원에 있는 우리의 역사문화 유산이다.¹⁷

전쟁의 추억

- 전쟁유산으로서의 비무장지대



시공을 초월한 전투의 흔적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는 비무장지대 일원은 2000년 전부터 전략 요충지로 으뜸가는 곳이었다. 용암이 빚어낸 수직단애가 연속 발달하기도 했지만, 단애가 없는 곳은 강폭이 넓어지면서 강수량이 적고, 간조 시기가 되면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여울과 나루터가 많은 특징이 있다.¹⁸

그런 지점들은 동아시아 패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요처 중의 요처이다. 삼국 시대에는 백제-고구려, 고구려-신라, 신라-당이 접전을 펼쳤고, 1950년 한국전쟁 때도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지형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전략 요충지의 개념은 2000년 전이나



관미성 터로 비정되는 파주시 오두산성

지금이나 다를 수가 없다. 이것이 임진강·한탄강에서 고대의 전쟁 유적과 현대의 전쟁 유적이 중첩되는 까닭으로,¹⁹ 칠중성·파주 캐슬고지와 매소성·연천 대전리 산성, 관미성·파주 통일전망대 등이 대표적이다.

파주시 적성면의 칠중성 148m은 553년에서 675년 사이 고구려-신라·당, 신라-당·말갈 연합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다. 1951년 4월 22일, 영국군-중국군이 역시 이곳에서 혈투를 벌였다.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는 뿔피리와 팽과리를 불고 치며 진격하는 중국군 3개 사단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궤멸했다. 하지만 영국군은 중국군의 진격을 3일간이나 지연시켰으므로써 중국군의 서울 재점령을 막았다는 평을 받는다. 영국인들은 칠중성을 '캐슬고지'라 불렀다.²⁰

지금은 성벽의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경기도 연천군 대전리 산성도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전쟁터이다. 이곳은 675년 당과 말갈 연합군이 신라의 반격에 군마 3만 380필을 잃었던 곳인 매소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²¹ 당나라는 이 패배로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면서 한반도 경영의 꿈을 접었다. 이 대전리 산성 일대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개전 때 북한군 4사단과 105전차여단이, 1951년 4월 22일 중국군의 공세 때는 중국군 12·15군이 도설했던 곳이기도 하다.

임진강·한강 합수부에 자리 잡고 있는 파주시 오두산성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396년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략하여 얻은 관미성(關彌城) 터로 비정되는 곳이다.²² 이때 백제는 58성과 700촌을 잃었다. 지금 관미성 터에는 통일전망대와 함께 북한군을 감시하는 벙커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의 호로그루(狐蘆古壘)²³는 남진정책을 펼 고구려가 조성한 최전방 사령부라 할 수 있다. 남쪽 강기슭에는 신라의 최전방 성으로 비정되는 이잔미성(二殘眉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 6세기 중반 이후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대치했던, 지금으로 치면 ‘군사분계선’이라 할 수 있다. 얇은 여울 지역이라 도강 장소로도 적합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가 중무장 대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이유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전차부대는 개성-문산을 통하지 않고 20km나 우회하여 이곳 호로그루 여울목을 통해 강을 건넜다. 고구려군의 기마부대가 건넜던 곳이 북한 전차부대의 도하 장소가 된 것이다.

고지에 뿌린 피

한국전쟁 발발 후 1년 남짓 지난 1951년 6월쯤, 전쟁은 임진강-연천-철원-산양리-장평리-서화-간성을 잇는 38도선 부근의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²⁴ 중국은 1951년 4월 춘계대공세를 펼쳤지만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소련이 약속한 60개 사단분의 전투 장비와 보급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도 국내외의 반전 여론과 동맹국들의 휴전 압력, 그리고 중국군의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전쟁 수행 능력 등을 절감하고 있었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한반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경우 미국의 최대 관심 지역인 유럽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²⁵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951년 6월,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대규

모 공격 대신 국부적인 공격, 즉 아군의 관찰 범위를 확대하고 적의 관찰 범위를 축소하는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로써 한국 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지루한 고지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을 벌였다. 하지만 회담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었다.

전투는 지금의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벌어지는 기동전과 산악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리한 전초기지 확보를 위한 국지적인 고지 쟁탈전의 양상으로 빠졌다. 고지 쟁탈전으로 입은 유엔군의 병력 손실은 해마다 3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였다.²⁶

이 같은 전투 양상은 1951년 6월 23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25개월 4일이나 지속됐다. 한국전쟁은 전 기간 1,127일 중 2/3를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을 중심으로 치른 특이한 전쟁이었던 것이다.²⁷ 전선의 변화는 중심縱深 20km 정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일상적인 고지 쟁탈전에서 참전국 19개국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지루한 전투 속에서 전투의 성격이나 특징, 고지의 형태를 적절하게 표현한 작전 명이나 고지명이 쏟아졌다.

티본 스테이크처럼 생겼다는 티본 고지 T-bone Hill·경기 연천와 갈빗살이 붙은 돼지 갈비뼈를 닮았다는 포크칩 고지 Porkchop Hill·경기 연천, 육체파 여배우 제인 러셀의 풍만한 가슴을 연상시킨다는 제인 러셀 고지 Jane Russell Hill·강원 김화, 맹포격으로 고지의 나무가 모두 쓰러진 뒤 산의 형태가 마치 백마처럼 보였다 해서 이름 붙은 백마고지 White Horse Hill·강원 철원 등이 유명하다.

또 저격당하기 일쑤인 지형이라는 저격 능선 Sniper Ridge·강원 철원, 피아의 치열한 전투로 피바다가 됐다는 피의 능선 Bloody Ridge Line·강원 양구,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단장의 능선 Heartbreak Ridge·강원 양구, 십자포화로 고지 정상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다는 아이스크림 고지·강원 철원,

크리스마스 휴무일 1951년 12월 25일에 공격을 받았다는 크리스마스 고지(강원 양구와 대머리처럼 벗겨졌다는 불모고지 Old Baldy·경기 연천, 손가락 형태라는 지형 능선 Finger Ridge·강원 금성 등도 대표적인 고지 이름이다.²⁸ 이 과정에서 세계의 수많은 젊은 넋이 피를 뿌리며 스러졌다.

한국전쟁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이었다. 남북한 병사 90만~110만 명과 유엔 16개국 병사 약 32만 명, 중국군 약 97만 명 등 220만 명을 웃도는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²⁹

유엔군 가운데 미군은 연인원 178만 9,000명을 파병해 14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특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원수의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 육군 소령을 비롯해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 가운데

철원 백마고지 기념탑



전투 전후의 백마고지 모습. 십자포화를 맞은 정상 부분이 편평해졌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데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³⁰

중국도 연인원 300만 명이 출병,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순망즉치한(舜亡則商興 호파즉당위(戶破則堂危),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현관문이 깨지면 집안채가 위험하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출병을 결정했다.³¹ 지원군 가운데 자원 참전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아들인 마오안잉(毛岸英이 유엔군의 소이탄 공격에 희생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글로스터 대대의 선전으로 유명한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과 함께 영연방 제1사단을 구성했다. 연인원 1만 7,000명이 참전해서 4,500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벨기에 파병군 중에는 전 상원의원이자 당시 국방장관이던 모로 드 멜랭이 소령으로 출전해 연락장교를 맡기도 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이었던 몽클라르가 한국전 참전을 위해 계급을 낮춰 중령(中將)으로 현역 복귀한 일화로 유명하다. 여단급 규모인 5,090명을 파병한 터키는 언어 소통 문제로 남북한 병사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전하면서도 금량장 전투 등에서 선전했다. 남미의 콜롬비아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대대



치열한 전투로 피바다가 됐다는 뜻의 피의 농선



파주 적성의 영국 글로스터 대대 기념비



황제 근위병 중에서 선발된 에티오피아 파병군의 모습

급 규모의 파병군을 보내 금성지구와 불모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파병군 가운데 에티오피아군의 선전이 돋보였다. 당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황실 근위대에서 1,200명을 선발, 한국과 비슷한 지형에서 맹훈련을 시킨 뒤 파병했다. 에티오피아군은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명의 포로도 집계되지 않았다. 황제를 향한 충성심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군은 부대가 포위되면 전멸할 때까지 싸웠다.

타이군도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용맹을 발휘했다. 타이군은 1952년 11월 1일 연천 역곡천 북쪽의 포크잡 고지^{234m} 전투에서 세 번에 걸친 중국군의 공세를 막고 고지를 지켜냈다. 포크잡 전투는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8일까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철원의 노리고지, 420고지, 313고지에서 활약한 그리스 대대와 공군 부대를 파견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한국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펼쳤다.³²

이처럼 DMZ 일원은 세계 19개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곳이다. 즉, 이곳의 모든 산과 들과 강은 동서 냉전, 남북 대결의 역사적인 현장이자 유적지이며,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산 교육장이다.

지하 만리장성을 아시나요

승냥이와 이리가 침략하면	若是那豺狼來了
엄총으로 맞이할 것인데	迎接它的有獵槍

중국인들이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 다음으로 애창해온 '나의 조국 我的祖國', 이 곡은 1956년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상감령 上甘嶺>의 주제가이다.

상감령은 강원도 철원군의 오성산^{1,062m} 동북방에 이어진 고지군^群을 일



중국군이 쌓은 지하 만리장성, 총연장이 4,000km에 육박했다.



지하 만리장성 공사를 벌이고 있는 중국군 병사들(출처 : 중국해방군화보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삼강령(출처 : 중국해방군화보사)

권는 지명이다. <상감령>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14일부터 42일간 중국군이 미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싸운 전투를 그린 영화이다. 그러니까 이 곡의 가사에 나오는 '승냥이와 이리'는 미국을 가리킨다.

중국이 말하는 '상감령 전역戰役'은 한국군 전사에서는 '저격 능선 전투'로 알려져 있다. 40일이 넘는 작전 결과 유엔군은 삼각고지를 빼앗는 데 실패하고, 저격 능선의 일부인 A고지와 돌바위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만 족해야 했다.³³

반면 중국에서는 '상감령 정신'이 풍미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과 인민의 승리를 위해 봉헌하는 정신'이라는 것이다.³⁴ 그런데 중국이 이 상감령 전투를 승전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 1951년 8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연장 250~287km, 폭 20~30km 규모로 건설한 지하갱도 때문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제원을 보면 총 갱도 수 9,519개, 엄채호 78만 4,600개, 엄채호 총 길이 3,683km, 그리고 각종 시설물 10만 1,500개 등이었다.³⁵ 갱도와 참호, 교통로까지 합한다면 총연장 길이가 4,000km에 이르며, 단순 계산할 경우 총면적은 5,000~7,500km²에 달한다. 중국은 이 갱도를 '지하 만리장성地下萬里長城'이라 지칭했다.³⁶

1952년 말 완성된 지하장성을 두고 마오쩌둥 주석은 "어떤 사단도 3개월간의 식량을 보관할 지하창고가 있었고, 강당도 있어 생활은 대단히 편했다"고 말했다.³⁷

지하장성은 상감령 전투저격 능선 전투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중국군 45사단은 오성산 일대에 총연장 8.8km의 갱도 306개와 엄채참호 160개, 교통호 53km, 대전차호 4개를 구축했다. 여기에 참호 2,400개와 동굴 양식창고 61개, 동굴 탄약창고 65개, 갱도와 연결된 엄폐식 취사장 140개, 각급 지휘소 및 관측소 204개를 건설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설령 원자폭탄을 사용했다 해도 저격 능선과 오성산의 공산군 부대를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³⁸ 중국 측이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구축한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서부방벽을 능가하는 ‘지하 만리장성’을 쌓자, 유엔군 측도 제1차 세계대전의 방벽에 가까운 방어선을 구축했다.³⁹

이로써 한국전쟁은 팽팽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길고 지루한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는 채로 휴전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군이 쌓은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은 지금도 중무장의 상태인 거대한 단일 요새로 남아 있다.

‘중무장지대’가 된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일원에는 중국군이 주도해서 쌓은 지하 만리장성 외에도 분단·전쟁·냉전을 상징하는 흔적들이 집중돼 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한반도 중부는 임진강변에서 동해안까지 248km에 걸쳐 이른바 군사분계선을 그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은 ‘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표지물 제0001호부터 동해안의 제1292호까지 모두 1,292개의 표지물이 200m 간격으로 찍은 ‘점’의 개념이다. 표지판 가운데 696개는 유엔군이, 596개는 북한군과 중국군이 관리하고 있는데,⁴⁰ 이 1,292개의 표지판은 전쟁과 냉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다.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적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제1조 제1항이며, ‘쌍방은 모두 비무장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떤 적대 행위로 감행하지 않는다’ 제6항고 규정했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7항고 했다.⁴¹

하지만 비무장지대는 지금까지 중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북측의 정



경기도 연천군 동이리의 유엔군 화장터



지역 주민들의 강제 모금과 강제 동원으로 건립된 철원 노동당사.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증언하는 유물이다.



파주시 장단면에 멈춰 선 증기기관차

다리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남북한이 각각 다른 공법으로 시공한 철원 송일교



우 철책선 260km, 감시초소GP 158곳, 관측소OP 124곳, 막사 등 지원시설 3,362동, 기타 선전물 314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경우는 철책 290km, 감시초소 87곳, 관측소 13곳, 막사 등 지원시설 1,209동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⁴²

전쟁의 상흔도 깊게 남아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화력이 집중된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마을과 건축물이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문화재청은 2002년부터 한국전쟁이 낳은 흔적들을 근대문화유산, 즉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08년에 등록문화재가 된 경기도 연천군 동이리의 유엔군 화장터(등록문화재 제408호)가 눈에 띈다. 이 화장터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되어 휴전 직후까지 사용한 곳이다. 건물벽과 지붕은 훼손됐지만 시신을 태운 연기가 빠져나간 화장장 굴뚝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기관총과 소총 세례를 맞고 비무장지대 내인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에 멈춰 선 증기기관차 제78호와,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는 파주 구 장단면 사무소 제76호와 장단역 터 제77호, 다리 주변에서 미군들이 피살당했다 해서 이름 붙은 죽음의 다리 제79호·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도 유명한 한국전쟁 관련 유물이다. 또한 1946년 공산 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력동원과 모금으로 건립된 철원 노동당사 제22호와 남북한의 서로 다른 공법으로 완성된 철원 승일교 제26호 등도 있다.⁴³

| 주 |

- 1 원종관·이문원·우준기, 1987, “추가령구조대의 지형발달과 화산 활동-민통선 부근을 중심으로”, 『휴전선 일대의 자연 연구』, 강원대 출판부, pp. 28-29.
- 2 배기동, 2003, “전곡리 구석기 연대관의 변화와 전망”, 『전곡리 유적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동아세아 구

- 석기, 제2회 전곡리 구석기 유적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천군·한양대 문화재연구소.
- 3 이기환, 2009, 『분단의 섬 민통선』, 책문, pp. 18-25.
- 4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2003, “전곡리 구석기 유적 관련 자료집”, 『전곡리 선사유적 종합정지 기본계획 보완 용역 프로젝트』.
- 5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2003, 「전곡리 유적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동아세아 구석기」, 제2회 전곡리 구석기 유적 기념 국제학술회의.
-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고성 문암리 유적』, pp. 228-239.
- 7 최영선, 1995, 『자연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pp. 92-97.
- 8 김동구, 1987, 『해안분지의 선사유적과 유물 조사』, 해안중 부설 향토자원연구실.
- 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학술 조사 보고서』 제38책, pp. 204-206. ; 경기도박물관, 2006, “파주 육계토성”, 『경기도박물관 유적 조사 보고서』 제24책, pp. 37-38.
- 10 이재·강성문·이우형·권순진, 2006, 『철원의 성곽과 봉수』, 철원문화원, pp. 56-57.
- 11 조유전·이기환, 2004, 『한국사 미스터리』, 황금부엉이, p. 329.
- 12 육군사관학교, 2000, 『철원 성상성 지표 조사 보고서』, pp. 75-88.
- 13 한보광, 1996, “진봉사의 만일열불길사”, 『불교학보』 3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pp. 73-95. ; 동산법문·전국염불만일회, 『금강산 진봉사 사적』, pp. 93-95, 140-142.
- 14 최선일, 2006,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 입상”, 『문화재 심의자료』, 문화재청.
- 15 이기환, 2009, 『분단의 섬 민통선』, pp. 362-365.
- 1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 발굴 조사 보고서』.
- 17 필자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재 국방문화재연구원장과 이우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을 답사한 바 있다.
- 18 이준선, 2004, “적성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 19 이기환, 2008, 「비무장지대 일원 유산의 보전 방안 연구-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한양대 석사 논문.
- 20 안소니·파라 호커리, 2003,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The Edge of The Sword)』, 한국언론인협회, pp. 43-45.
- 21 육사 육군박물관, 1995,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 조사 보고서』, pp. 72-83.
- 22 윤일영, 1987, 『관미성 위치고』, 국민대 석사논문.
- 23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
- 24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6, 『한국전쟁 요약』, p. 126.
- 25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4, 『한국전쟁 전투사-7. 백마고지 전투』, p. 12.
- 26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4, 『한국전쟁 전투사-7. 백마고지 전투』, p. 15.
- 27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p. 16.
- 28 이기환, 2009, 『분단의 섬 민통선』, 책문, pp. 429-430.
- 29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6, 『한국전쟁 요약』, pp. 358-359. ;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pp. 143-146.

- 30 국가보훈처. 2005. 『6·25전쟁 미군 참전사』, pp. 155-159.
- 31 서상문. 2006. 『모택동과 한국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258-274.
- 32 국가보훈처. 2005. 『6·25전쟁 미군 참전사』, pp. 211-252 ; 국방군사연구소. 1999. 『유엔군 지원사』.
- 33 국방부 전사편찬위.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 편-11권』, p. 659.
- 3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pp. 457-459.
- 3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역, pp. 280-281.
- 36 홍학지. 1992.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 고려원, p. 329.
- 37 毛澤東. 『모택동 선집』 제15권.
- 3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pp. 444-459.
- 39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전쟁 하』, pp. 231-233.
- 40 김재한. 2006. 『DMZ 평화답사』, p. 21.
- 41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9. 『휴전사』, pp. 361-363.
- 42 김영봉 외. 2003. 『경의·동해선 연결과 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방안』, 국토연구원.
- 43 이기환. 2009. 『분단의 심 민통선』, 책문, pp. 455-473.

| 참고문헌 |

- 경기도박물관. 2006. "과주 유계토성", 『경기도박물관 유적 조사 보고서』 제24책.
- 국가보훈처. 2005. 『6·25전쟁 미군 참전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 조사 보고서-강원도 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 조사 보고서-경기도 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중공군의 전략전술 변천사』.
-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 국방군사연구소. 1998. 『UN군 지원사』.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73.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79. 『한국전쟁사 제10권-유엔군 참전 편』.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0. 『한국전쟁사 제11권-유엔군 참전 편』.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4. 『한국전쟁 전투사-7. 백마고지 전투』.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6. 『한국전쟁 요약』.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8. 『한국전쟁 전투사-14. 지격 능선 전투』.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89. 『휴전사』.
- 국방부 전사편찬위. 1990. 『미 합동참모본부사-한국전쟁 상』.
- 김재한. 2006. 『DMZ 평화답사』, 오름.
- 김학준. 1989.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 안소니·파라 호커리. 2003.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원제 : The Edge Of The Sword)』, 한국언론인협회.

- 안소니-파라 호커리, 2003,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원제 : The Edge Of The Sword)』, 한국언론인협회.
- 윌리엄 스톡(김형인 외 옮김), 2001,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 육사 화랑대연구소, 2004,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분석 및 평가』(군사연구총서 49).
- 이기환, 2008, 「비무장지대 일원 유산의 보전 방안 연구-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한양대학원 석사 논문.
- 이기환, 2009, 『분단의 섬 민통선』, 책문.
- 이재 외, 2006, 『철원의 성곽과 봉수』, 철원문화원.
- 이호왕, 1999, 『한탄강의 기적』, 시공사.
- 조유전·이기환, 2004, 『한국사 미스터리』, 황금부엉이.
- 조지프 쿨든(김패상 옮김), 1982, 『한국전쟁』, 일월서각.
-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군사편찬연구소 역),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원제 : 抗美援朝戰爭史)』.
- 중국해방군화보사(노동환 외 역), 2005,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눈빛.
- 최영선, 1995, 『자연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 洪學智, 1992,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 고려원.
- Cha-Han Kim, ed, The Korean DMZ-Reverting beyond Division, Seoul : Sohwa.
- ICOMOS-Korea/ICOM-DEMIST, 2004, 『DMZ의 유산적 가치와 보존』.
- Pfennig, Werner, 2001, The Rise and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Korean DMZ.



DMZ 일원의 역사 유산

선사시대-삼국시대

선사시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연천군 전곡리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지이다. 1977년 한탄강변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세계 구석기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즉,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된다는 이유로 아시아가 유럽과 아프리카보다 구석기 문화의 발전이 늦다는 모비우스의 가설이 무너진 것이다.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DMZ 일원의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특히 임진강 주변에는 당시의 산성터, 고분, 사찰 등이 남아 있어 삼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일대의 주인은 백제-고구려-신라의 순서로 바뀌었는데, 신라는 675년 나당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에서 당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후삼국시대에는 공예가 철원의 흥원리, 월정리, 증강리 일대에 성곽 둘레 11km에 달하는 도성을 쌓고 이곳을 태봉국(후고구려)의 도움으로 삼았다.



파주 덕진산성

4~5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산성. 내성 성벽 기단부에서 고구려 계통의 와편이 많이 발견된다.

연천 호로고루 성지

임진강 북쪽 현무암 절벽 위에 호로고루성이 있던 곳. 성의 규모는 작지만 행정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관광공사



파주 오두산성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오두산에 쌓은 백제 산성. 일부 학자들은 이 성이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의 관미성이라고 주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백제의 관미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주 월릉산성

임진강과 한강 하구 지역을 통제하던 초기 백제의 산성. 성의 외벽은 20m 높이의 수직 절벽, 내부는 평지처럼 된 천연의 요새이다.



파주문화원





연천 당포성

당포나루로 흘러들어오는 셋강과 임진강 본류 사이의 절벽 위에 쌓은 석성. 고구려가 임진강 남쪽의 백제나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



연천 삼국리 돌무지무덤

임진강가에서 500m쯤 떨어진 모래언덕 위에 쌓은 백제 돌무지무덤. 예로부터 삼국리 마을에서 '소산 이동치'로 불려왔고, '애기무덤' 또는 수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라고 전해진다.



양구 해안 선사유적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의 유물이 다량 출토된 곳으로, 철기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유적이다.



연천 학곡리 고인돌

현무암 덮개돌(상석)과 곶돌(지석) 1개, 화강암 지석 1개로 되어 있다. 최근까지 마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 동네굿을 벌였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한탄강변에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 직립원인 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주먹도끼가 대표적 유물이다.



연천 은대리성

한탄강과 치탄천이 만나는 삼각형 지대에 쌓은 성. 연천 지역 고구려 성 가운데 가장 크며, 축조 방식이 호로고루성이나 당포성과 흡사하다. 성 안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DMZ 일원의 역사 유산

고려시대~조선시대

고려시대

DMZ 일원은 지리적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가까워서 수도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고려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왕경을 둘러싼 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게 된 것도 고려시대이다.

1231년 몽고의 침입 때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30년 이상 항쟁했다. 개성에서 서울로 이 어지는 이 지역은 몽고군의 침입로였고, 격렬한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파주 지역에서는 초적이라고 불리는 농민군이 몽고에 맞서 싸웠다. 불교를 장려한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사찰과 탑이 만들어졌으나, 몽고와의 전쟁으로 많이 소실되었다.



파주 반구정

조선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였던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 임진강 기슭 낙하진에 인접해 본래는 낙하정이라 했다.



파주 허준 묘

조선시대 명의 허준의 묘.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을 1991년 고문헌 연구가 이양재 씨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나 묘비에서 허준의 이름을 확인했다.



파주 황희 묘

방촌 황희의 무덤. 모역은 넓은 3단이고, 묘 앞에는 화강암으로 ㄷ자 모양의 3단 호석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독특한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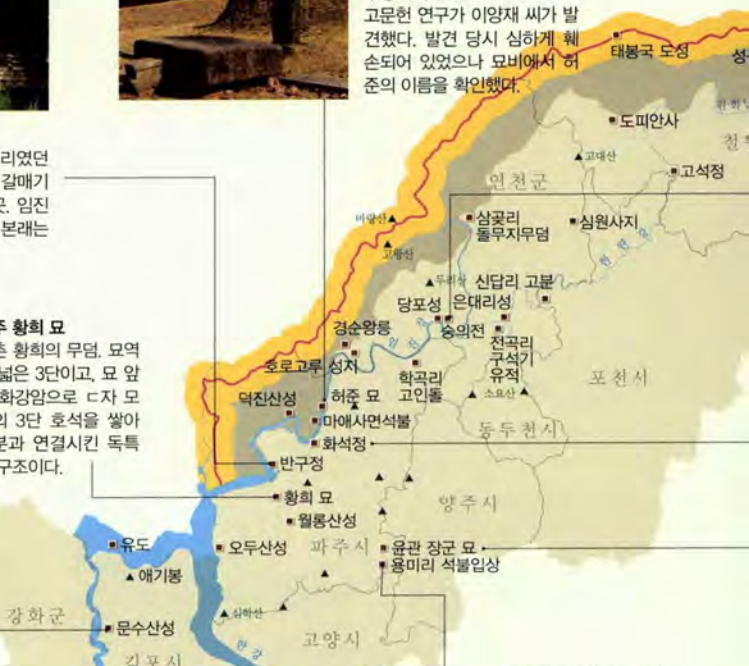
김포 문수산성

김포 문수산에 해안지대를 성채로 연결한 조선시대의 산성. 한강으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고려시대의 거대한 석불입상. 천연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우람하게 새겼는데, 머리 위에 얹은 돌것이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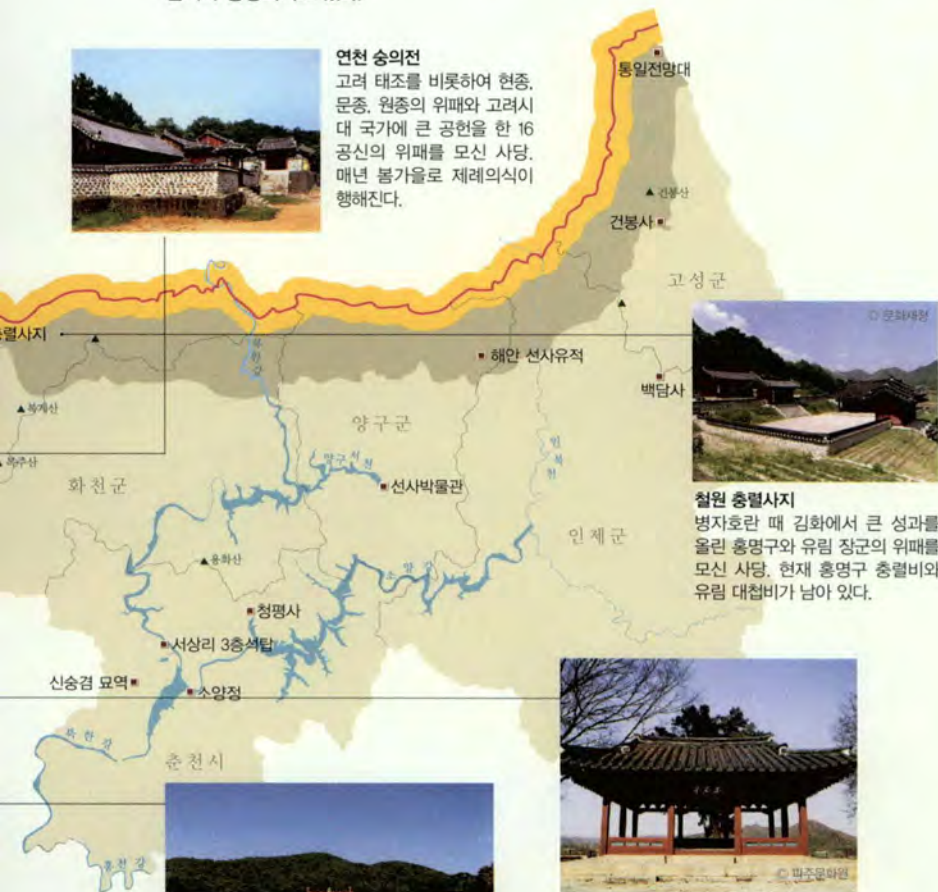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임진강이 교통로 및 운송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장단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던 임진강은 당시에는 호로탄(鰐鰔潭)이라고 불렸다. 또한 강화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한강의 관문을 지키는 군사시설들이 세워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DMZ 일원은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고, 주요 격전지가 되었다. 특히 18~19세기에는 중요한 하천 통상로인 나루를 통해 크고 작은 화물선과 인마가 왕래하는 곳이었으며, 상류 강기슭에는 상업 중심지가 형성되기도 했다.



연천 송의전

고려 태조를 비롯하여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와 고려시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 매년 봄가을로 제례의식이 행해진다.



철원 충렬사지

병자호란 때 김화에서 큰 성과를 올린 홍명구와 유림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 현재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남아 있다.



파주 화석정

율곡 이이의 고향인 파평면 율곡리 임진강변에 세워진 정자. 이이가 관직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말년을 보내던 곳이다.



파주 율관 장군 묘

고려시대의 명장 율관의 묘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율관은 별무반을 창설하고 9성을 쌓아 여진을 정벌한 공을 세워 파평윤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 지점

DMZ, 3부
경계와 접경
사이에서



비무장지대의 환경 및 상징적 가치로 인해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전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의 추후 관행에 의해 성립된 지역관습법 체제로 접근하여 우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 6장 |

국제법으로 살펴보는 DMZ의 법적 쟁점들

Legal Issues



소병천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 환경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DMZ 및 습지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에 "A Study of Establishing an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International Areas Review," vol.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2005), 「접경생물권보전 지역에 대한 법적인 고찰」(환경운동연합, 2005) 등이 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 공방의 현주소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체결된 한국군사정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 이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되었다.¹ 1953년 이후 인간의 개발이 멈춘 비무장지대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자연적 가치로 인해 세계 환경과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또한 민족상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갖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 및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무장지대 및 인근 지역을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있어왔다.³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위원회의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무장지대 사용 및 법적 지위에 대한 권한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는 북한 및 유엔사를 포함한 정전위의 동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남북한 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남북한 간 또는 북한과 유엔사 간에 체결된 합의문에서도 비무장지대의 이용 및 진출입에 대해 남북한 간의 협의를 기초로 하는 등의 변경된 입장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때보다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무장지대 및 인접 지역의 법적 지위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 지역의 법적인 범위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의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하여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적대 쌍방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비무장지대로부터 남북 방향의 경계선인 북방경계선 및 남방경계선을 각각 정전협정에 첨부되는 지도에 의해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은 남북한 모두 각각의 국내법을 통해 자국 군사정책 등을 고려하여 통제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 민간

파주 임진강변의 민통선 경계



인통제선을 지정하고, 이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대부분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정하고 있다.⁵ 북한 역시 자국 법률에 근거하여 북방경계선에 인접한 이북 지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지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환경보호를 도모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은 대상 지역을 비무장지대에 제한하지 않고 그 이남 지역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비무장지대 인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개념 및 범위 7

접 지역이라고 한다.

현재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내의 비무장지대, 남북한 국내법에 따른 제한구역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위의 지도와 같다.

정전협정에 의해 관리되는 비무장지대의 법적 권한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근거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된다. 즉, 비무장지대는 국제법인 정전협정,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국내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 역시 정전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을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주권 사항이며 관할권 범주에 해당하지만, 비무장지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지위를 결정할 수 없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유보지역을 정의함에 있

어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⁸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의 보전 및 활용 정책의 핵심은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에 달려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사업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군사사업의 목적으로 군인 또는 민간인이 출입하는 경우 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⁹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경우 남측 지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북측 지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¹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는 5인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 임명하는 5인 등 총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로서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¹¹

비무장지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우선 해당 지역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고, 군사정전위원회 및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대표되는 유엔사령부가 군사 및 민사행정 등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이해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조약에 의해 자국 영토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교 면책을 다루는 조약이나 SOFA 등을 통해 외교 공관이나 외국 군대의 주둔지역 내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

사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경우,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영토 관할권이 배제되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정전협정 체제에 대한 핵심 쟁점 세 가지

쟁점 1: 정전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정전협정은 무려 2년에 가까운 정전협상을 통해 체결된 조약이다.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제안과 미국의 수락으로 정전협상이 진행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강력히 반대하자 미국을 대표하는 유엔사가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북한 및 중국 대표와 함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¹²

정전협정은 정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위원회가 1990년대 이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 측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 때문이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종료를 선언하고 정전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1991년 2월 13일 제459차 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군국 장성인 황원탁 소장이 내정된 것에 반대하며 퇴장한 이후이다.

북한 측의 주장은 이렇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성이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에 임명된 것은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전협정은 유엔사 측의 위반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북한은 1994년 12월 정전위의 중국 대표단을 정식으로 철수시키고, 이후 정전협정상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북측 중립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마저 철수시켜 1995년 정전체제의 공식적 종료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런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는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종전협상을 하겠다는 소위 통미 봉남(通美封南) 정책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후 정전위원회 대신 임시 채널이 가동되었다. 북한은 북미 간 공동군사기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은 정전협정 체제를 복구하기 위해 유엔사와 북한 간의 장성급회담을 제안했다. 결국 장성급회담이 1998년 6월부터 정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후 장성급회담은 2009년까지 총 16회 개최되었는데,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 등 사안별로 회담이 개최되어 정전체제 위반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¹³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운영될 당시인 2000년



196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 대표 사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11월에 열린 제12차 회담에서는 DMZ를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관리, 관할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기도 했다. 2000년 6·29 서해교전 이후 그해 8월에 개최된 제13차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 방지를 논의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유엔사 간의 채널 외에 남북한 군장성 간의 공식 채널로서 남북한 장성급회담이 운영되기도 했다.

남북은 총 6차례의 장성급회담 중 제2차 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3차 회담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양측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¹⁴

정전협정은 종료된 것인가? 정전협정의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비무장지대의 관할권과 관련 정전협정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법적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질적으로 정전위원회가 기능 마비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신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북한과 유엔사 간 장성급회담과 남북한 장성급회담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전협정 종료 및 정전체제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전위를 포함하여 정전협정의 상당수 조항들이 기능 정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정전협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제61항에 의하면 쌍방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폐지에 합의하거나 제62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만 정전협정이 실효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사와 북한 및 중국이 정전협정 폐지에 동의한 바도 없고, 이

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 체결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정전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¹⁵

쟁점 2 :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비무장지대가 정전위원회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무장지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정전체제의 관리기구인 정전위원회와의 관계,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비무장지대 활용 문제에 있어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엔사 사령관인 클라크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 미국이 자국의 개입을 호도하기 위해 유엔을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이다.¹⁶ 이런 주장은 남한 정부가 자주성이 없는 미

남측 관측소에서 국군과 미군이 북쪽을 감시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괴뢰정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통치세력이 미국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¹⁷

북한은 1975년 9월 제30차 유엔총회에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므로 양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¹⁸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통미봉남의 전술하에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함께 핵무기 등 군축 문제를 다루며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받으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제법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 국적의 클라크 유엔사 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 S/1588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장으로 임명된 후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인 유엔군 사령부의 장으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즉, 서명권자의 국적은 조약의 당사자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클라크 사령관은 미국이 아닌 유엔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일 뿐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실질적 당사자를 논의하자면 교전 당사자이자 전후 정전체제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이론적 견해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유엔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당사자라는 견해,¹⁹ 둘째, 한국과 유엔의 참전 16개국 그리고 북한 및 중국이 당사자라는 견해,²⁰ 셋째, 한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당사자라는 견해²¹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정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쟁점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당사자인지의 여부로 나뉜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와 연합군을 구성한 16개국을 함께 당사자로 간주하거나 우리나

라와 유엔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간주한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는 견해는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당시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인 유엔사령부 단독으로 체결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뿐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참전 16개국이 모두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견해는 소위 연합군 이론(coalition army theory)에 근거한다.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모든 교전 당사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경우, 연합군을 구성하는 국가는 모두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가 1950년 8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을 당시 정전협정 체결권도 이양되었고,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나라가 위임한 권한에 근거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정전협정에 위임 서명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²²

둘째, 대한민국과 유엔을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 보는 견해는 참전 16개국이 개별적인 지위에서가 아닌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으

군사분계선 표지판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로서 단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와 차이가 있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가 초기 정전에 반대했으나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를 전제로 정전협정 반대를 철회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정전협정에 대한 동의와 협정 준수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정전협정에 서명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한국의 동의가 북한 측에 전달되어 서명했다는 것을 정황상의 근거로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반대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²³

마지막으로 유엔만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가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여 유엔사령부가 한국군 작전을 통제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를 정전협정의 간접적 적용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⁴ 즉, 주 교전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체결에 완강히 반대해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사실과, 유엔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대신해 서명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간주한다.²⁵ 물론 이 견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평화협정 당사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⁶

세 견해 모두 나름 타당성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해에서 참전 16개국의 지위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이들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을 창설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²⁷ 유엔사령부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조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엔사령부 사령관 서명의 법적 효력은 유엔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도외시했다.

두 번째 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전협정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한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인 1954년에 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전협정 준수를 약속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해당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있다.

세 번째 견해는 논리적으로는 가장 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게 되어 정전체제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도모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쟁점 3 : 지역관습국제법 체제에서는 우리의 관할권이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북한 역시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거에도 정전위의 유엔사 측에 우리나라 장성 1인이 참가해온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를 조망함에 있어 현 정전체제를 정전협정의 기준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발효 이후 한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포괄적인 정전체제의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정전체제란 정전협정뿐 아니라 이후 국가 관행에 의해 성립된 체제로 일종의 정전협정 이해 관계국의 관행으로 성립한 지역관습국제법 region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s에 의해 규율되는 정전체제를 뜻한다.

관습국제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s은 국가들의 관행으로 성립된 국제법으로 보편적 효력, 즉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관습법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지역관습국제법 또는 특별관습국제법 speci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관계의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에 의해 성립된 관습법을 의미한다.²⁸ 국제사회는 지역관습국제법을 관습국제법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비호권 사건 Asylum case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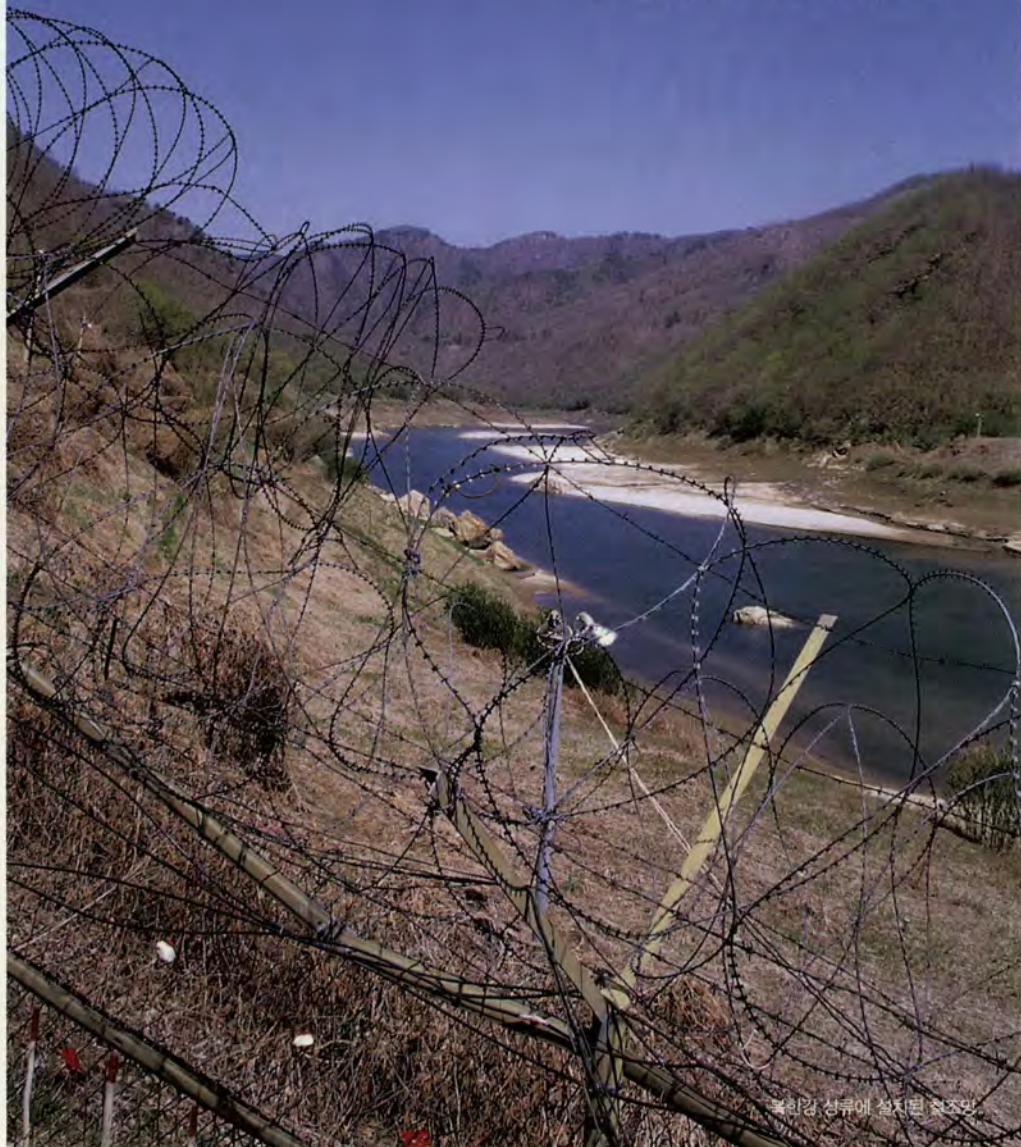
통하여 지역관습국제법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했으며, 인도 통행령 사건(Rights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case)에서는 양자간의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²⁹

국제사회에서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인 문제들을 지역관습국제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프레비허 사원(Preah Vihear Temple) 지역의 경계 문제를 둘러싼 특수한 지역관습국제법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견해,³⁰ 구 유고 해체 시 세르비아 등 제 분리된 국가들의 정체성에 대해 지역관습국제법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견해,³¹ 1981년 아프리카 인권 선언(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이 지역관습국제법이라는 전제하에 아프리카에서 환경권을 주장하는 견해,³² 유럽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형벌권의 문제를 문화적·종교적 관점에서의 지역관습국제법으로 해결하려는 등의 시도가 그것이다.³³

지역관습국제법 역시 일반 관습국제법과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고 확실적인 관행과 이에 대한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요구한다.³⁴ 비호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역관습국제법이 문제 되는 국가의 일관되고 꾸준한 관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지역관습국제법의 형성에 요구되는 관행은 일반 관습국제법과 달리 특정 이해 관계국들만의 국가 관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일반성(*generality*)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지역적 보편성(*local universality*) 수준만을 요구한다.³⁶ 즉, 지역관습국제법의 성립은 관련 당사국 모두의 묵시적 수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³⁷

이제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한 및 유엔사의 관할권과 관련된 관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전체제를 정전협정이라는 조약에 의한 체제가 아니라 추후 관행들로 성립한 지역관습국제법 체제로 구성하

과거 민족상잔의 부산물인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 및
생태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 세대의 의무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으로
비무장지대를 민족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행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정전협정 발효 후 북한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유엔사와 함께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방경계선을 중심으로 경계근무를 담당해왔으며, 정전체제 초기인 1954년 3월부터 정전위원회에 한국군 장성 1인을 참여시켜 실질적 당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정전체제의 주체로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1958년 이후 군대를 철수했으며, 1994년 12월 정전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전체제'에서의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유엔사의 수석대표에 대한민국 장성을 임명하는 등, 대한민국이 정전체제의 실질적 주요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의사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어떠한가? 때때로 우리나라의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과거 1991년 우리나라 장성이 정전위의 유엔사령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이전에는 정전위의 유엔사 측에 우리나라 장성이 참가해온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전체제의 당사자로서는 인정하고 대응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⁸

남북한과 유엔사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해왔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남북한 간의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추진할 것에 동의했다.³⁹ 또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한강 하구 남북 공동이용 등에 합의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

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0년 9월 개최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5개 항을 발표했다. 이 공동보도문의 제3항에서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각측의 비무장지대 내 인원과 차량, 기재가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 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를 남북한이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했다.

2003년 1월 27일 채택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역시 DMZ의 일부 개방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 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고 하여 정전위의 특별한 허가 없이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의 진출입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 29일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서명 및 합의문 교환으로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비무장지대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 특히 인원 및 차량의 통행을 명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간접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차와 제14차 유엔사-북한군 조선인민군 간의 장성급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채택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도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을 남북의 관리구역으로 인정,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 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도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문제를 남북한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요컨대 정전협정하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북한과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유엔사의 권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 북한 및 유엔사 등 정전체제 당사자들의 추후 관행에 의해 성립된 정전체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이 남북 합의하에 있어 그 관할권이 남북한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정전체제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11일 MAB 국제조정위원회는 비무장지대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대해 지정을 유보했다.

공식적인 유보 사유는 철원 지역의 완충 내지 전이지역이 부재하다는 등의 용도구역 설정 기준 미비였지만, 북한 측이 이사회에서 유엔사령부의 서명이 없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공식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 결정적 일 것이라고 추론된다.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유엔사는 비공식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서명은

불가함을 표명했다.

2013년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시아 협력 구상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단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환경보호 및 국제평화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기존의 정전협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한 기존 정전협정 체제를 지역관습국제법에 의한 정전체제로 이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953년 성립된 정전체제는 그간 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전위원회, 남북한 장성급회담 및 북한과 미국의 장성급회담에 의해 관리 감독되어왔다. 이런 장성급회담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정전체제가 초기 정전협정 체제에서 변화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들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이제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에 의한 체제라기보다 관련 국가들의 추후 관행에 의해 성립된 지역관습법 체제로서의 정전체제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세계평화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경색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비무장지대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 간 채택한 여러 합의문에 근거하는 등 지역관습국제법 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 |

- 1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 2 원시림과 같이 처음부터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과 달리 비무장지대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생태계에 의한 자연 복원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Hall Healy, 2005. "The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In DMZ Conservation", 「DMZ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MZ and Surrounding Areas : Ecocity International Symposium」, 강원도, pp. 33-35.
- 3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프레스, pp.19-52.; 김명기, 1999,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pp. 68-73.; 손기웅 외, 2009, 「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 : 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pp. 4-34.; 장용운, 200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군사적 신뢰 조성", 「북한 조사 연구」 제9권 제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pp. 379-385.; 소병천, 2005, "A Study of Establishing an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International Areas Review」, vol. 8(1), 한국의국외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pp. 65-83 등.
- 4 동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 참조.
- 5 동법 제2조 제1항: 비무장지대 내 집단 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 6 이규창, 201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안보학술논집」 제21집 제2호, 국방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p. 68-69.
- 7 김영봉·이승복·김은정, 2009,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 3.
- 8 동법 제2조 제13호.
- 9 동 협정 제1조 제9항.
- 10 동 협정 제1조 제10항.
- 11 동 협정 제2조 제20항 및 제25항 참조.
- 12 하재평, 2003,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의 역할", 「전사」 제5호, 국방부, p. 34.
- 13 통일연구원, 2011, 「남북 관계 연표(1948-2011년)」, 통일연구원.
- 14 Id.
- 15 특히 남북이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도 평화체제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6 통일연구원, 1988,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제I집: 4기 1차 회의-5기 7차 회의), 국토통일원, p. 858.
- 17 이를 소위 실질적 당사자론이라고도 한다. 제성호, 2000, "한국 정전협정의 법적 재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제4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pp. 220-221.
- 18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p. 12.
- 19 김명기, 1999,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pp. 58-60.; 이병조·이종범, 2000, 「국제법 신강」, 일조각, p. 1014-15.

- 20 배제식, 1993, “남북한의 UN 가입과 법적 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 논총』 제2권, 한국통일연구원, p. 19.; 이장희, 1994,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방안”, 『국제법학회 논총』 제39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pp. 55-56.; 백진현, 1991, “휴전협정 체제의 대체에 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평화문제연구소, pp. 62-63.
- 21 유병화, 1998, “한국 통일에 관련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pp. 8-10.; 제성호, 2000, “한국 정전협정의 법적 재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제4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p. 223.
- 22 배제식, 전개논문, p. 19.; 이장희, 전개논문, pp. 55-56, 백진현.; 전개논문, pp. 62-63.
- 23 제성호, *supra* note 25, p. 223
- 24 김명기, 전개서, pp. 58-60.; 이병조·이중범, 전개서, p. 1014-15.
- 25 *id.*
- 26 김명기, 2007, “정전협정 당사자 아니라도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작전지휘권 환수와 정전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 『자유공론』 제42권 제7호, pp. 28-37.
- 27 유병화, 1990, 『국제법 II』, 진성사, pp. 651-652.
- 28 정인섭, 2013, 『신 국제법 강의』, 박영사, pp. 33-35.
- 29 Asylum case, ICJ Reports 1950, p. 266.; Rights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case, ICJ Reports 1960, p. 4.
- 30 Andreas Buss, 2010, The Preah Vihear Case and Regional Customary Law,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1), pp. 111-126.
- 31 Robert J. Delahunty, 2009, The Kosovo Crisis : A Dostoevskian Dialogue on International Law, Statecraft, and Soulcraft,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2, p. 15.
- 32 Koriambanya S. A. Carew, 2002, David and Goliath : Giving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Niger Delta a Smooth Pebble-Environmental Law, Human Rights and Re-Defining the Value of Life, Drake Journal of Agricultural Law, vol. 7, p. 493.
- 33 Suzanne Michelle, 2010, A Prohibition on Antisodomy Laws through Region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ew York : Plenum Press, pp. 95-135.
- 34 김대순, 2013, 『국제법론』, 삼영사, p. 62.
- 35 Asylum(Col/Peru), Judgment, 1950 I. C. J., p. 266, 276(Nov. 20).
- 36 김대순, 전개서, p. 63.
- 37 Antonio Cassese, 2005,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 164.
- 38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91년 이전까지 유엔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정전협정 위반을 83만여 건 이상 주장해왔다. 제성호, 2004, “정전협정 체제에 관한 연구”, 『전략 연구』 통권 3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 99.
- 39 제12조 :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

진한다.

- 40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k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 측 지역으로 들어 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 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 군 측과 조선인민군 측 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 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함참정보본부, 2003,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6집(2000~2003), 대한기획인쇄, pp. 58, 93~94.

참고문헌

- 김대순, 2013, 『국제법론』, 삼영사.
- 김명기, 1994,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국제법출판사.
- 김명기, 1999,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제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제』, 도서출판 소화.
- 김명기, 2007, “정전협정 당사자 아니라도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작전지휘권 환수와 정전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 『자유공론』 제42권 제7호.
- 김영봉·이승복·김은정, 2009,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김재철, 2011, 『DMZ 탄생 과정의 제조명과 평화적 활용 방안』, 『동북아연구』 vol. 26 No. 2, 동북아연구소.
- 배제식, 1993, “남북한의 UN 가입과 법적 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 논총』 제2권, 한국통일연구원.
- 백진현, 1991, “휴전협정 체제의 대체에 대한 소고”, 『통일문제 연구』 제3권 제4호, 평화문제연구소.
- 소병천, 2005, “A Study of Establishing an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International Areas Review』 vol.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 손기용 외, 2009, 『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 : 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 유병화, 1990, 『국제법 II』, 진성사.
- 유병화, 1998, “한국 통일에 관련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 이규창, 201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안보학술논집』 제21집 제2호, 국방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원.
- 이병조·이중범, 2000, 『국제법 신강』, 일조각.
- 이상희, 1994,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방안”, 『국제법학회 논총』 제39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 장용운, 200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군사적 신뢰 조성”, 『북한 조사 연구』 제9권 제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 정인섭, 2013, 『신 국제법 강의』, 박영사.
-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프레스.
- 제성호, 2000, "한국 정전협정의 법적 재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제4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 제성호, 2004, "정전협정 체제에 관한 연구", 『전략 연구』 통권 3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통일연구원, 1988,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제I-II집 : 4기 1차 회의~5기 7차 회의), 국토통일원.
- 통일연구원, 2011, 『남북 관계 연표(1948~2011년)』, 통일연구원.
- 하재평, 2003,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의 역할", 『전사』 제5호, 국방부.
- 합참정보본부, 2003,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6집(2000~2003), 대한기획인쇄.
- Andreas Buss, 2010, The Preah Vihear Case and Regional Customary Law,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1).
- Antonio Cassese, 2005,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Healy, 2005, "The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In DMZ Conservation", DMZ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MZ and Surrounding Areas : Ecody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 Koriambanya S. A. Carew, 2002, David and Goliath : Giving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Niger Delta a Smooth Pebble-Environmental Law, Human Rights and Re-Defining the Value of Life, Drake Journal of Agricultural Law, vol. 7.
- Robert J. Delahunty, 2009, The Kosovo Crisis : A Dostoevskian Dialogue on International Law, Statecraft, and Soucraft,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2.
- Suzanne Michelle, 2010, A Prohibition on Antisodomy Laws through Region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ew York : Plenum Press.



DMZ에는 소유 불명의 토지가 많아 통일 후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DMZ의 뛰어난 생태계와 역사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DMZ의 생태·역사적 가치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사회·정서적 통합을 위해 통일 후 합리적인 DMZ 토지소유권 정책이 꼭 필요하다. 1990년 통일된 독일에서 유사한 선행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통일 후 동서독 접경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구 동독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던 토지 문제의 처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DMZ 토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르츠(Harz) 국립공원 브라운라게(Braunlage) 근처의 그뤼네스반트. 사진에 보이는 보데(Bode) 강의 지류는 동서독 국경에 위치한 덕분에 거의 자연천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BUND, Klaus Leidolf 제공)

| 7장 |

독일 그뤼네스반트가
DMZ 토지 문제에 주는 교훈

Case of Germany



심숙경 |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지리학연구소 박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 개발연구원에서 근무.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위원, IUCN 접경보전 전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전문위원, 환경부 MAB(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DMZ 관련 연구로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2012),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2011),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1997) 등이 있다.

통일 독일의 토지 문제 해결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한반도는 중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으며, 남북한 관계는 화해보다는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 현재 통일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나 느낌을 갖는 이는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통일과 같은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가 독일처럼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군사·정치적 대립이 사라진 뒤에 역사의 굴곡과 아픔 속에 만들어진 DMZ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 현명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하나가 DMZ 일원의 토지 문제이다.

DMZ에는 소유 불명의 토지가 많아 통일 후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DMZ의 뛰어난 생태계와 역사자원의 보전과 활용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DMZ의 생태·역사적 가치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사회·정서적 통합을 위해 통일 후 합리적인 DMZ 토지소유권 정책이 꼭 필요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가 더욱 짙어진다. 구 동독 측 접경지역^{통일 후 '그뤼네스반트'로 불림}은 DMZ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토지소유권이 잠자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아 사회적 갈등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랜 갈등과 시행착오 끝에 통일 후 약 15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서야 전체 접경지역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연방 토지가 '국가자

연유산'이라는 공유지로서 장기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와 한반도의 DMZ는 오랜 기간 동안 이태올로지 대립과 민족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상징적 현장으로 역사·생태·사회·정서적인 공통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DMZ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기 위해 그뤼네스반트의 경험을 선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 동독 접경지역에서 토지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후 발생 가능한 DMZ 토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튀링겐 주-니더작센 주 경계에 있는 마켄로데(Mackenrode) 근처의 그뤼네스반트, 집악농지 한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연결하는 그뤼네스반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BUND, Klaus Leidorf 제공)





통일 후 동서독 접경지역의 공간과 가치 변화

동서독 분단 시기 : '죽음의 지대'

1949년 5월과 10월, 서독과 동독이 각각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별도 국가를 설립하면서 독일의 민족 분단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393km에 이르는 동서독 접경지역이 한반도 DMZ와 같이 본격적으로 무장되고 통제된 것은 1961년 8월 3일 새벽, 베를린을 가로질러 장벽이 건설된 이후부터였다. 서독으로 이탈하는 동독 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동독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베를린에는 3.6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동서독 접경지역에는 이중 철조망, 지뢰, 감시탑 등 수많은 무장 감시 시설물을 설치했다.

동독 정부는 국경지역에 감시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1952년, 1961년 두 차례에 걸쳐 12,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규모 소개시켰다. 집은 물론 마을 전체가 헐린 경우도 있었다. 동서독 국경선(①)과 검문소(②) 사이의 '봉쇄지대Sperrzone'¹는 우리의 민통선지역과 유사하게 거주 주민과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² 허가 없이 서독으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총과 지뢰에 희생된 이곳은 '죽음의 지대Todesstreifen'로 불렸다. 1949~1990년 동안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에서 약 474명이 목숨을 잃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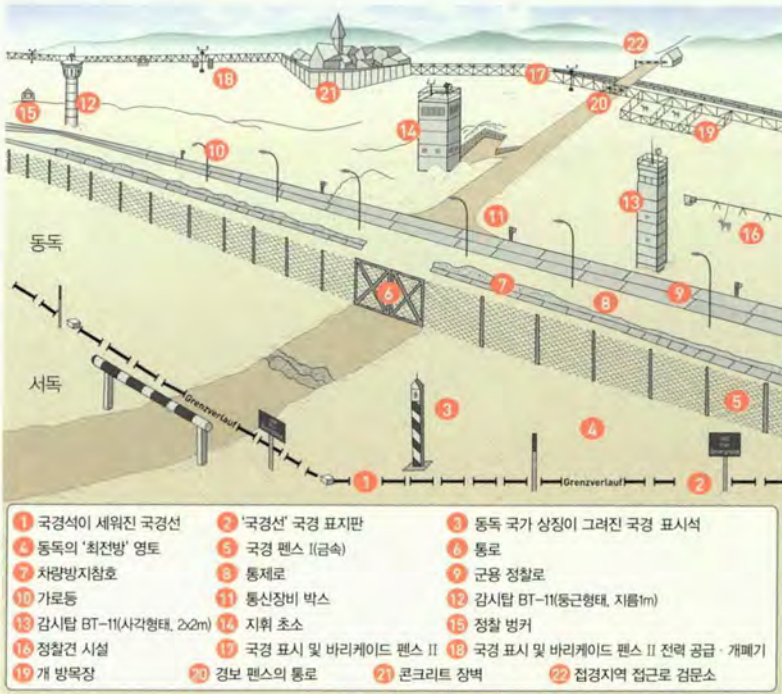
국경 시설물 배치도를 보면 동서독 국경의 무장 시설은 한반도 DMZ와 달리 동독 측 국경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독 쪽에서는 국경선 앞까지 농사와 거주가 가능했고 접근도 자유로웠다. 서독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Zonenrandförderungsgesetz'을 제정하고 동서독 국경에서 약 40km에 이르는 지역에 세제 혜택, 공공



국경 표지판(심숙경 제공)



차량방지 참호(H. Naderer 제공)



1984년 무렵 동서독 국경 시설물 배치도(Lebegern 2002의 자료를 각색)



정찰로와 감시탑
(BUND 제공)



국경 표시석
(H. Naderer 제공)



동서독 접경 감시 시설(BUND 제공)

사업 우선 발주, 기반시설 개발 등을 지원했다. 통일 후 1994년 접경지역 지원은 중단되고 구 동독 전체를 대상으로 '동독 경제재건Aufbau Ost' 정책이 추진되었다.⁴

동서독 통일 이후 : '생명의 띠'로 거듭난 그뤼네스반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서독 통일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었다. 통일과 함께 동서독 국경지역의 위상은 급격히 변했다. 한반도 DMZ 일원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수십 년 냉전 시기 동안 사람의 접근과 토지 이용이 극도로 통제되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었다.

분트BUND, 독일환경자연보전연합의 바이에른 사무소BN는 통일 이전부터 접경지역의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뒤인 12월 9일 동서독-체코 국경에 위치한 작은 도시 호프Hof에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전역에서 400여 명이 넘는 자연보전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동서독 접경지대를 중앙 유럽의 생태적 중추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분단 시절 국경선 또는 죽음의 지대로 불렸던 이곳이 환경 NGO들에 의해 처음으로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⁵라는 통일시대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⁵

그뤼네스반트는 길이 1,393km, 폭 50~200m의 길고 좁은 띠 형태로 독일 국토를 가로지른다. 폭의 범위는 동서독 국경선①과 군용정찰로② 사이이다. 철조망, 감시탑 등 많은 국경 감시 시설물들이 통일 후 신속히 제거되었으나 콘크리트 길인 군용 정찰로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

그뤼네스반트? 그린벨트? 그뤼네스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여 'Green Belt(그린벨트)'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도시 주변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는 연관성이 없다. 국내에서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 이 글에서는 독일어 명칭 그대로 부르는 것으로 한다. 독일어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용어는 'Grüngürtel'이다.



구 동서독 국경을 따라 형성된 그뤼네스반트

어 그뤼네스반트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뤼네스반트 자체는 폭이 좁은 편이지만 109가지의 다양하고 중요한 서식지 유형을 포함한다. 절반 정도의 서식지 유형이 독일 서식지 적색목록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에 위기 서식지로 분류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 먹황새Black Storks, 유럽수달 European Otters, 유럽살쾡이European Wildcats, 복주머니란

Cypripedioideae 등 독일 적색목록에 오른 600종 이상의 희귀 및 멸종위기종들이 발견된다.⁶

또한 엘베Elbe 강 생물권보전지역, 하르츠Harz 국립공원, 뢰른Rhön 생물권보전지역 등 150개의 크고 작은 보호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해 있어 이들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서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뤼네스반트의 지리적 기본 사항

구분	내용
길이	1,393km - 북쪽 끝 : 발틱 해의 트라베(Trave) 강 하구 - 동쪽 끝 : 바이에른 주, 체코와 접한 작센 주의 포크트란트(Vogtland)
너비	50~200m(평균 127m)
넓이	- 그뤼네스반트 자체 : 17,656ha(전 국토 면적의 약 0.05%) - 인근 보호지역 포함 : 223,211ha(전 국토 면적의 약 0.63%)
관련 행정기관	9개 연방주, 38개 군, 2개 광역시 - 구 동독 주(5)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엔, 작센 - 구 서독 주(4)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더작센, 헤센, 바이에른

그뤼네스반트의 중요성은 생태적인 가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은 과거 잘 무장된 '철의 장막'의 핵심 지역이자 민족 분단의 최전방이었다. 국경을 넘으려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국경지역 무장을 위해 주민들이 강제 이주당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역사의 기억이 있는 자연 경관 Erinnerungslandschaft'으로 불린다.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개념과 보전활동은 구 '철의 장막' 전체로 확대되어 2004년 유럽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협력 사업을 태동시켰다.



그뤼네스반트의 토지 문제 전개 과정

독일 통일 후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가 토지였다. 그뤼네스반트의 토지 문제는 동독 정부가 접경지역에 국경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의 토지와 집을 몰수하고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통일 후 독일이 20여 년간 토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처리되었는지를 주요 시기별로 나눠 살펴보자.

1990년 통일 직후 : 동독의 접경토지가 연방정부로 귀속

서독 중심으로 흡수통일된 독일은 1990년 8월 31일 제정된 '통일협약 Einigungsvertrag'과 1991년 3월 22일 제정된 '전前 구 동독 정부 소유의 재산귀속 규명에 관한 법률 재산귀속법'⁷⁾에 따라 접경토지를 비롯한 구 동독 지역의 몰수재산 94%가 토지를 연방재정부로 귀속⁸⁾하여 국유화된 재산의 시장성이 형성되도록 했다. 1945년 분단 이후 여러 조치와 법률에 의해 토지를 강제

몰수당한 사람들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것을 요구했고,⁹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반환 원칙'이 채택되었다.¹⁰

그러나 동독의 국방법(Verteidigungsgesetz)에 의해 몰수된 베를린 장벽을 비롯한 동서독 접경지역의 토지 상황은 달랐다. 국방법에 몰수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소유자는 '반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원 소유자들은 분단으로 인한 부당한 조치에 반발했고, 이는 격렬한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¹¹ 일부 토지는 구 동독 지역의 개발 추진을 위해 투자자에게 매각되었다.

1996년 이후 : 접경토지법에 의한 토지 사유화와 매각으로 갈등 고조

1996년 7월 15일 연방의회에서 전前 소유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전 소유주에게 베를린 장벽 및 접경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일명 접경토지법'¹²이 제정되었다. 전 소유주가 관련 증거서류와 함께 토지 반환을 청구하면 현 시가의 25%를 지불하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단, 이미 매각되었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의 경우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었고, 시가의 75%를 지급했다. 연방재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신청 마감일인 1997년 1월 30일까지 총 4,053건의 반환 청구가 접수되었고, 그 처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연방 예산 규정에 따라 반환 요청이 없는 토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었다. 매각 수익금¹³으로 토지보상금을 지불했고, 남은 수익금은 구 동독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었다.¹⁴

접경토지법은 환경단체, 지역의 역사문화재 기관, 전 소유자 등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역사문화재 기관들은 그뤼네스반트 토지를 연방 정부 소유로 두어 역사 유물이 잘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사유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토지 소유권과 관리 주체가 조각보처럼 나뉘어 생태계 보전은 물론 토지 활용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 소유자들의 경우, 자기 토지를 되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¹⁵

토지 반환과 매각이 진행되던 2002년 그뤼네스반트 토지 소유 실태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는 연방정부 65%, 개인 20%, 시·군 및 기타 공공기관 13%, NGO 2%로 소유권이 이미 상당히 나뉘어 있었다.¹⁶

분트를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은 남아 있는 연방 토지를 주정부나 자연보전단체로 이양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유지 증가를 막고, 주정부¹⁷나 민간이 그뤼네스반트의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이유에서였다.¹⁸ 민간의 토지 이양 요구가 계속되는 동안, 1998년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결합한 연정이 들어서면서 생태 네트워크를 비롯한 자연보전 정책이 강화되었고,¹⁹ 연방 정치인들 사이에 그뤼네스반트에 대한 인식과 관

독일 북부 엘베 강 102km를 따라 형성된 그뤼네스반트(BUND, Klaus Leidorf 제공)



심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의 생태계 보전 요구²⁰에 Natura 2000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렇듯 내부적 요구와 정치적·사회적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2003년 7월 연방재정부와 연방환경부가 그뤼네스반트의 연방 토지를 자연보전 목적으로 주정부에 이양하기로 진격적으로 공표했다. 주정부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구 동독 주들이 그뤼네스반트 토지 매각 수익금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몇 달 후 대부분의 주들이 이양 제안을 받아들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토지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만을 앞두게 되었다.

2005년 이후 : 자연보전 목적의 공유화 제도를 위한 노력

먼저 토지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다. 2005년 11월 기독교사회당-사회민주당 연정이 그뤼네스반트를 비롯한 구 군사훈련장, 폐광 지역 내 보전 가치가 높은 연방 소유의 육상 및 수계 지역을 '국가자연유산(Nationales Naturerbe)²⁰'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적인 자연보전을 위해 주정부 산하 재단 포함, 독일연방환경재단(DBU)을 비롯한 자연보전 기관에 무상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토지 매각은 즉시 중단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의하여 첫 이양 대상 토지목록을 만들어 2006년 5월 약 100,000ha를 이양하기로 했다. 그뤼네스반트 7,000ha가 이 목록에 포함되었다.²¹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비용 부담을 꺼리는 구 동독 주정부들과 연방정부 기관(연방환경부, 연방부동산청 등)에 지난한 논의와 협상이 이어졌다. 2008년 4월이 되어서야 튀링엔 주와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양받은 토지를 주정부 산하 재단에 귀속시켜 관리

하르츠 국립공원의 가파른 절벽
아래 보이는 정찰로, 침엽림 한가
운데를 가로지르는 정찰로는 가
장 사랑받는 탐방로가 되었다.
(BUND, Thomas Stephan 제공)



하고 있다. 튀링엔 주의 경우 2011년 1월 약 4,000ha의 토지를 튀링엔자연
보전재단에 귀속시켰고, 재단은 그뤼네스반트의 자연·경관 관리, 홍보, 교
육 등 사업을 튀링엔농촌개발협회와 같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추
진하고 있다. 튀링엔 주정부는 토지 이양에 따라 발생한 비용 52만 유로를
8년간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했다.²²

토지공유화 제도의 정착과 남은 문제들

그뤼네스반트의 연방 토지가 국가자연유산으로 보전 및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되었지만, 사유지 등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타 토지는 보전과 관
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관리 주체가 작
은 단위로 분할되어 생태계 연결, 교육, 관광 등 그뤼네스반트의 활용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토지를 보전·관리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농지 개혁 정책과 연계
된 토지 매입, 대토代土, 농지 정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²³ NGO들도 사유지
를 매입하여 직접 보전·관리하는 사업을 벌여 현재 NGO 소유 토지 비율
이 2%를 넘어섰다.

그뤼네스반트 보전을 위한 환경NGO의 사유지 매입 사례

그뤼네스반트 보전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분트, 나부 NABU, 독일자연보호연합과 같은 환경NGO들은 보전에 필요한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유지 매입 비용은 시민들의 기부금과 관련 재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분트의 '초록주식 Grüne Anteilschein' 기금 모금사업으로, 그뤼네스반트 보전을 홍보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초록주식' 기금으로 사유지 매입

초록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분트가 그뤼네스반트 보전기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상징적인 증서이다.



초록주식 증권
(기부 증서)

분트는 '주식' 기부 증서와 '주주' 기부자, 후원자 형식을 활용하여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보고 있다.

65유로 이상을 기부하면 일련번호와 기부자의 이름이 적힌 초록주식 증서를 받고 그 그뤼네스반트의 상징적인 '주주'가 된다. '주주'들은 '주주총회'라는 이름으로 그뤼네스반트 현장 방문 프로그램에 초대받고, 활동 소식지와 토지 매입 계획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²⁴

3,000번째 주주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구 소련 대통령, 현재 국제 그린크로스 대표와 전 독일연방 환경부장관 지그마르 가브리엘도 그뤼네스반트 사업의 적극적인 후원자이다. '주식 투자'로 조성된 기금은 토지 매입과 관리, 그뤼네스반트 보전을 위한 정치적 로비와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²⁵

2000년 10월에 시작된 초록주식 사업은 2013년 기부자 수가 1만 8,000명을 넘어섰고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²⁶ 결혼, 출생, 생일, 졸업 등의 기념일에 초록주식을 선물하기도 한다. 최근엔 65유로를 한 번에 기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소액 기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그뤼네스반트의 대부·대모가 되어주세요'가 그것인데, 매달 5유로 또는 연 60유로를 기부하면 그뤼네스반트의 대부·대모가 되어 대부·대모 증서를 발급받는다.

독일에서 자연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시민운동은 그뤼네스반트가 거의 유일하다. 분트는 2000년 10월 작센안할트 주, 튀링엔 주의 세 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 중반 6개 시범 사업지에서 총 580ha 가량의 사유지를 매입했다.²⁷ 매입 후에는 분트 지역 조직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식지 보전과 복원, 관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뤼네스반트 대부·대모 증서 (BUND 제공)

그뤼네스반트에서 배우는 DMZ의 토지 문제

DMZ 일원의 토지 소유 현황

DMZ 일원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민통선지역에서 이미 발생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철원군 대마리²⁸와 같은 전략촌과 양구군 해안분지에서 원 소유자와 정부 정책에 따라 이주해온 개척민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주민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거나 소작인이 되었다.²⁹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온 것은 1982년 12월 제정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³⁰이다. 등기서류가 사라진 땅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땅을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짜 증인으로 토지를 불법 소유한 사례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졸지에 임대농이 된 개척민들이 크게 상처받고 반발하는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³⁰

DMZ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에 준하는 제한을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며 매수할 수 있게 된다. 2년이 지난 후까지 장기적인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려면 토지 문제 해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DMZ는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토지가 많아 통일 후 소유권 관련 논란과 갈등이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DMZ와 민통선지역 내에서도 38선 이북 지역은 1946년 3월

^{*}수복지역 1945년 이후 38선으로 남북한이 나뉘었던 8년간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6·25전쟁 후 휴전선이 설정되면서 남한으로 귀속된 38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DMZ 및 민통선지역의 토지소유권 현황

(단위 : km²(%))

구분	DMZ			민통선지역		
	파주시	연천군	합계	파주시	연천군	합계
국유지	17.3 (26.3)	12.2 (14.9)	29.5 (20.0)	36.2 (36.8)	35.0 (25.7)	71.2 (30.3)
공유지	0.7 (1.1)	0.1 (0.1)	0.8 (0.5)	2.0 (2.0)	1.0 (0.7)	3.0 (1.3)
사유지	23.2 (35.3)	28.7 (35.0)	51.9 (35.1)	57.9 (58.8)	91.6 (67.3)	149.5 (63.7)
미구분	24.6 (37.4)	40.9 (49.9)	65.5 (44.3)	2.4 (2.4)	8.5 (6.2)	10.9 (4.6)
합계	65.8	81.9	147.7	98.5	136.1	234.6

지적 자료를 GIS로 분석한 면적임 (자료 : 박은진 외, 2011).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지적地籍 자체가 없어졌다.³¹ 38선 이남 지역도 1949년 남한의 농지개혁이 실시되고 6·25전쟁 이후 토지 소유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소유 불명지가 많아진데다 수십 년간 토지소유권이 불능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를 보면 소유 불명인 DMZ 토지가 절반 가까이 된다. 미구분소유 불명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므로 DMZ와 민통선지역 모두 사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MZ 토지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대상이었던 북측 DMZ 내 38선 이북 지역은 북한 토지개혁 무상 몰수, 무상 배분에 의한 몰수토지 처리³²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은 통일 방식합의통일 혹은 흡수통일의 영향을 받아 원 소유주 반환이나 보상을 통한 사유화 혹은 국유화 등으로 수립될 수 있다.³³

그러나 북한 몰수토지 반환에 대한 어떤 원칙이 수립되더라도 DMZ 토지가 갖는 생태적·역사적 특수성과 가치에 기초하여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선 독일의 구 동독 몰수토지 정책이 여러 가지 근거로 예외 규정을 두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뤼네스반트에서 배운다 : 통일 후 DMZ의 토지 정책 방향

통일 후 DMZ 토지 정책의 큰 목표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DMZ 일원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원 소유자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어려움 속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정서 존중,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DMZ 일원의 생태적·경제적 자산 보호, 통일국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합과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뤼네스반트가 주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 후 DMZ 토지 정책은 토지공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관리해야 한다. 60여 년간 토지의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토지가 많아 반환이나 매각 등의 사유화 방안은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38선 이북 DMZ 토지^{북한 지역 물수토지}에 원 소유자 토지 반환 원칙을 적용하여 사유화를 추진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DMZ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토지 소유 관계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소유자 토지 반환 정책과 매각에 의한 사유화 정책은 토지 반환 청구와 처리, 법적 분쟁, 생태계 훼손 등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결국 15년이 지난 뒤 사유화되고 남은 연방토지를 보전 목적의 공유지로 보전하기로 제도를 확립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8선 이북 DMZ 토지는 DMZ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국공유화하고, 이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국공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민간의

투자와 사용이 꼭 필요한 곳은 토지공공임대제³⁴를 도입할 수도 있다. 기존의 DMZ 일원 국공유지와 통일 과정에서 공유화된 토지는 대부분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생태·역사 교육, 관광 등 지속가능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통일 관련법에 명문화하여 차후에 토지 매각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DMZ의 토지공유화 과정을 추진하고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DMZ 토지관리청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민통선지역을 포함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DMZ 일원의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거나 내셔널트러스트^{자연신탁}와 같이 민간 차원의 운동에 의해 공유화한다.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관리 협정을 맺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보전을 위한 제약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자본 가치와 손실된 사용 수익을 보상하여 자연보전이라는 공공목적에 맞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³⁵ 또한 DMZ 일원의 보전 가치가 큰 토지와 외부의 다른 토지와 교환해주는 대토^{代土} 방안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그뤼네스반트의 환경NGO와 주정부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앞서 말했듯이 분트, 나부와 같은 독일의 환경NGO들은 보전과 복원에 필요한 토지를 시민기금을 모아 사들이고 지역 주민, 단체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매입한 토지 면적이 크진 않지만 분트 약 580ha, 나부 약 35ha, 보호가 시급한 서식지나 서식지 연결에 꼭 필요한 비오톱을 보전하여 생태계 보전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시민들의 그뤼네스반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태·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향과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그뤼네스반트 토지 반환 청구가 많았던 튀링엔 주에서는 기초자치

토지공유제 토지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사용권·처분권·수익권을 모두 공공이 갖는 것

토지공공임대제 토지는 국공유로 하고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

단체, 토지 소유주, 농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토를 적극 유도했다. 즉, 농사짓기에는 좋지 않지만 경관 보전 가치가 큰 그뤼네스반트의 땅을 경작하기 좋은 다른 땅과 교환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그뤼네스반트 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개인은 더 좋은 농토를 얻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결과를 가져왔다.³⁶

마지막으로, 통일 후 사회·경제적 변화 환경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DMZ의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여기에 토지 문제 해결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DMZ 내부 토지 정보 파악, 지적 복구, 지적 측량을 적극 추진하여 DMZ 토지 정책의 기초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서독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보전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그뤼네스반트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007년 실시된 그뤼네스반트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그뤼네스반트를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은 5.82%, 다른 지역 시민들은 4.21%에 그친 것은³⁷ 통일 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생태계 보전과 역사자원 보호와 같이 장기적인 목표를 지닌 공익적인 과제가 뒷전에 밀려나지 않으려면 사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또한 독일 그뤼네스반트가 한반도 DMZ에게 주는 교훈이다.



분트의 최다 사유지 매입 지역의 성공 비결



분트 작센안할트 주 그뤼네스반트 사업 담당자 디터 로이폴드

독일 환경NGO 분트의 사유지 매입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작센안할트 주의 잘츠베델(Salzwedel)이다. 2000년 10월부터 계속 매입 활동을 벌여 2011년에는 400ha 이상을 매입했다. 이는 분트가 매입한 총 사유지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잘츠베델의 습지와 습윤림은 수달, 강조개, 습지개구리 등 수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이지만 배수로와 묘지 등으로 인해 물이 마르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변 초지에는 희귀한 검은 황새와 두루미도 서식한다.³⁸

잘츠베델에서 사유지 매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NGO 활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지역 상황과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사업 담당자와 그뤼네스반트 보전에 뜻을 같이한 주민 활동가가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했던 것이다. 물론 이 지역의 여건도 한 몫했다. 분트 작센안할트 주 그뤼네스반트 사업 담당자 디터 로이폴드(Dieter Leupold)의 말을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뤼네스반트 사업의 의미를 공감하고 기꺼이 자기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연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돌려받을 때보다 우리한테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작용을 했어요. 우리는 시장 가격대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땅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보전을 위해 우리에게 파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을 겁니다.”³⁹

습지가 많은 잘츠베델 지역의 토질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토지 이용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NGO 활동가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많은 곳이 그냥 방치되고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주 |

- 1 1972년까지 동독 접경지역, 즉 봉쇄지대에 총 840개 마을에 주민 359,000명(동독 인구의 약 2.1%)이 거주했다. 1972년 새로운 국경 규정에 따라 봉쇄지대가 축소되었고, 통일 당시에는 512개의 마을과 마을의 일부가 남아 약 208,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Bode, V., 1995, Die Raumbedeutung einer Staatsgrenze. In Grimm, F.-D. (Eds), Regionen an deutschen Grenzen, pp. 17-31, Institut für Länderkunde, Germany, p. 25).
- 2 Lebegern, R., 2002, Mauer, Zaun und Stracheldraht : Sperranla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1990. ROLE-Verlag, p. 24.; Becker, A., 2004, Wie Gras über die Geschichte wächst, Orte der Erinnerung an der ehemaligen deutsch-deutschen Grenze. Diplomarbeit, Berlin, Germany, p. 24.
- 3 동서독 국경의 회생자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기관마다 수치가 매우 다르다. 이 수치는 '독일 정부 및 정당 범죄 조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 4 Smith, F. M., 1994, Politics, place and German reunification, A realignment approach, Political Geography, 3, p. 233.
- 5 BUND, 2002a, Das Grüne Band, Ein Handlungsleitfaden, Nürnberg, Germany, p. 10.; Frobel, K., Riecken, U. & Ullrich, K., 2009, Das "Grüne Band" - das Naturschutzprojekt Deutsche Einheit, Natur und Landschaft - Zeitschrift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9/10, p. 400.
- 6 Geidezis, L. & Kreutz, M., 2006, The central European Green Belt, In Terry, A., Ullrich, K. & Riecken, U., (Eds), The Green Belt of Europe, p. 48.
- 7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lseigenem Vermögen(일명 재산귀속법).
- 8 동독 정부가 국경 감시를 위해 토지를 몰수했고 통일 독일 정부가 동독의 법적 후계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 9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 2009, 『통일 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 방향 연구』, KINU 연구총서 09-10, 통일연구원, p. 106.
- 10 1990년 9월 23일 제정된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일명 재산법)에 몰수재산을 반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었다. 몰수토지의 반환 원칙은 투자 부진 등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동독 주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고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외 경우, 보상조치 등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어졌다(한정희, 2006, "구 동독 지역 몰수 부동산의 처리 원칙 및 실태", 『EU학 연구』 제11권 제11호, 한국EU학회, pp. 46-47).
- 11 Law firm of Rowland & Petroff, "Deutschland verabschiedet ein neues Gesetz über den Rückkauf von Mauer- und Grenzstücken".
- 12 Gesetz über den Verkauf von Mauer- und Grenzgrundstücken an die früheren Eigentümer.
- 13 연방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접경토지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약 4,100만 유로가 국고로 들어갔다(Deutschland Radio, "Das Land entlang der Mauer"(13, 08, 2012)).
- 14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p. 92.

- 15 Deutschland Radio, "Das Land entlang der Mauer"(13. 08. 2012). ; Die Welt, "Ein Leben land Kampf gegen das DDR-Unrecht"(27. 02. 2013).
- 16 BUND, 2002b. Eigentumsverhältnisse im Grünen Band, Teiluntersuchung zum E+E-Vorhaben "Bestandsaufnahme Grünes Band", Nürnberg, Germany. p. 2.
- 17 독일 연방제에서는 주정부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초지 관리 등 실질적인 자연보전과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연방자연보전경관 관리법이 한 예이다.
- 18 유럽의 대표적인 생태계 유형의 하나인 초지(grassland, meadow 등)는 주기적인 풀베기, 방목 등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천이가 일어나 특정 초지 환경에서만 서식이 가능한 동식물종들과 해당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초지 비오름이 사라지게 된다.
- 19 예를 들어 2002년 개정된 연방자연보전법에 모든 주가 인접 주를 잇는 서식지 네트워크를 각 주 면적의 최소 10%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 국가자연유산은 보호지역 유형(category)이 아니다. 즉, 보호지역이 아니며 자연보전, 지속가능 농업, 환경친화적 관광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 21 2009년 나머지 25,000ha에 대한 토지이용도 다음 정부(기독사회당-자유민주당)의 연정협약으로 확정되었다.
- 22 Stiftung Naturschutz Thüringen, 2011. Grünes Band Thüringen. ;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 23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p. 89.
- 24 초기에는 모든 '주주(기부자)'들을 초대했지만, 주주들이 많아지자 195유로(초록주식 세 주) 이상 기부자로 한정했다.
- 25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p. 93.
- 26 상에서 p. 93.
- 27 http://www.bund.net/themen_und_projekte/gruenes_band/geschichte_gruenes_band/erfolge_und_gefahren/
- 28 철원군 대마리의 토지 분쟁이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쟁이 격화되자 2007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를 내리고, 2011년 10월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기 시작했다(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 시각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7호, 평화문제연구소, p. 177. ; 본 책 p. 32).
- 29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 시각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7호, 평화문제연구소, p. 177.
- 30 상에서 p. 178. ; 한겨레21, "이 험한 곳까지 오셨네, 땅 투기", 제628호(2007년 9월 20일).
- 31 서희석, 2006,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문당, p. 86.
- 32 통일 이후 북한 물수토지의 처리, 즉 북한 토지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논의가 상

- 당히 이루어져왔다. 북한 지역 토지제도 개편 방안으로 즉각적 사유화, 국공유 유지 후 점진적 사유화, 토지공공임대제 영구적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허문영, 전강수, 남기업, 2009). 『통일 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 방향 연구』, KINU 연구총서 09-10, 통일연구원, p. 71).
- 33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 2009. 『통일 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 방향 연구』, KINU 연구총서 09-10, 통일연구원, p. 129.
- 34 상계서 p. 72.
- 35 김귀곤, 박미영, 최희선, 2006. "DMZ 자연생태계의 현황과 보전",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p. 262.
- 36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Berlin, Germany, p. 89.
- 37 상계서 p. 122.
- 38 www.bund.net
- 39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Berlin, Germany, p. 124.

| 참고문헌 |

- 김귀곤, 박미영, 최희선, 2006. "DMZ 자연생태계의 현황과 보전",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 시각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7호, 평화문제연구소.
- 박은진, 천선희, 남미아, 2011. 『민통선지역 생태계 훼손 요인 및 영향 저감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서희석, 2006.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문당.
- 임춘화, 2008.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합리적 토지소유권 정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제성호, 2005.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향 - 특히 북한 토지의 처리와 관련해서", 『법학논문집』 제29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조영진, 1999.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중앙경제.
- 한겨레21, "이 험한 곳까지 오셨네, 땅 투기", 제628호(2007년 9월 20일).
- 한정희, 2006. "구 동독 지역 물수 부동산의 처리 원칙 및 실태", 『EU학 연구』 제11권 제11호, 한국EU학회.
-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 2009. 『통일 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 방향 연구』, KINU 연구총서 09-10, 통일연구원.
- Becker, A., 2004. Wie Gras über die Geschichte wächst, Orte der Erinnerung an der ehemaligen deutsch-deutschen Grenze, Diplomarbeit, Berlin, Germany :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 Bode, V., 1995. Die Raumbedeutsamkeit einer Staatsgrenze. In Grimm, F.-D. (Eds), Regionen an deutschen Grenzen, pp. 17 - 31. Leipzig, Germany, Institut für Länderkunde, Germany.
- BUND(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2002a, Das Grüne Band. Ein Handlungsleitfaden, Nürnberg, Germany.

- BUND, 2002b, Eigentumsverhältnisse im Grünen Band, Teiluntersuchung zum E+E-Vorhaben "Bestandsaufnahme Grünes Band", Nürnberg, Germany.
- BUND, 2011, Grünes Band, <http://www.bund.net>
- CDU, CSU & SPD, "Gemeinsam für Deutschland – mit Mut und Menschlichkeit –,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11. 11. 2005), Available from : http://www.cdu.de/doc/pdf/05_11_11_Koalitionsvertrag.pdf
- Deutschland Radio, "Das Land entlang der Mauer"(13. 08. 2012), Available from : <http://www.dradio.de/aktuell/1839024/>
- Die Welt, "Ein Leben lang Kampf gegen das DDR-Unrecht"(27. 02. 2013), Available from : <http://www.welt.de/politik/article113961557/Ein-Leben-lang-Kampf-gegen-das-DDR-Unrecht.html>
- Probel, K., Riecken, U. & Ullrich, K., 2009, Das "Grüne Band" – das Naturschutzprojekt Deutsche Einheit, Natur und Landschaft – Zeitschrift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9/10, pp. 399–403.
- Geidezis, L. & Kreutz, M., 2006, The central European Green Belt, In Terry, A., Ullrich, K. & Riecken, U., (Eds), The Green Belt of Europe, pp. 46–60,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 Law firm of Rowland & Petroff, "Deutschland verabschiedet ein neues Gesetz über den Rückkauf von Mauer- und Grenzstücken", Available from : <http://www.rowlandlaw.com/Default.aspx>
- Lebegern, R., 2002, Mauer, Zaun und Stracheldraht : Sperranla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1990, Weiden, Germany : ROLÉ-Verlag.
- Shim, S., 2011,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y, Berlin, Germany.
- Smith, F. M., 1994, Politics, place and German reunification, A realignment approach, Political Geography, 3, pp. 228–244.
- Stiftung Naturschutz Thüringen, 2011, Grünes Band Thüringen, Available from : <http://stiftung-naturschutz-thueringen.de/index.php/gruenes-band-thueringen/>



남북한의 두루미 보호사업과 NGO의 역할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안식처 DMZ

한국의 비무장지대는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멸종위기종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주요 월동지역이며, 두루미는 고대부터 한반도에 서식해왔다. 예로부터 동아시아 사람들은 두루미를 장수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왔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루미는 십장생 중 하나로 인식되어 도자기·그림·건축·자수·병풍 등 생활 속 예술작품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우 친밀한 존재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근래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변화들이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멸종 위기까지 내몰았다. 남한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 개발과 토지 간척사업으로 습지생태계가 파괴되어 두루미들이 점차 농작물이나 인위적 먹이공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기근 사태 이후로 두루미가 월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연기념물 제202호인 두루미의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2,750여 마리이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중 1,000여 마리는 1년 내내 일본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텃새 개체군이며, 나머지는 동아시아-호주 경로를 따라 연간 600마일을 이동한다. 이중 약 850마리가 한반도 지역에서 월동하고, 75% 이상이 철원평야에 10월부터 3월까지 서식한다.

한편 재두루미의 총 개체 수는 세계적으로 5,500~6,500마리이다. 연간 2,0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대를 거쳐 지나가는데, 대부분 월동지역



두루미는 DMZ 일원의 생태환경을 대표하는 깃대종이다. 남과 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두루미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상징한다.

인 일본 규슈로 이동한다.

화려한 외양과 흔히 의인화되는 모습을 갖춘 두루미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 받는 새다. 새 중에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고 인간과 몸집이 거의 비슷한 두루미는 아름다운 구애의 춤을 추며, 한 마리의 짝과 평생을 지내고, 보통 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잡식성으로, 습지에서는 수중의 작은 동물들을 먹고, 농지에서는 잡곡과 곤충을 먹이로 삼는다¹.

한강 하구 지역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남측의 두루미 월동지역은 도시화, 습지 매립, 농지 확대,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으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서부와 중부지역에서는 건설사업, 인삼밭, 비닐하우스 등으로 월동지와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철원 일대의 두루미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농약과 액체비료로 인한 중독과 전기선 충돌로 밝혀졌다². 북한에는 1980년대에 약 250마리의 두루미가 서식했으나, 1990년대 기근이 큰 타격으로 작용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대응하여 철원군은 먹이공급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NGO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늘렸다. 근래에 수백 마리의 두루미들이 찾아오던

DMZ 일원 서부지역이 신도시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연천과 철원의 두루미 월동지역에 대한 보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DMZ는 의도치 않게 두루미들의 안식처가 되었지만, 한반도에서 두루미의 생존을 장담하기엔 역부족이다.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협력과 조율 노력을 통해서만 한반도에 두루미 서식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연계와 생태학적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두 가지 두루미 보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일대와 북한 강원도 안변평야의 비산농장에서는 NGO들의 활동이 보전과 정부의 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통합하도록 이끌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일대의 두루미 보전 프로젝트

겨울철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주된 행선지는 철원군이지만, 연천군 또한 매년 100마리 이상의 두루미들이 거쳐가는 주요 월동지역이다. 임진강의 얇은 여울은 작은 갑어류와 같은 동물성 먹이가 풍부하며, 주변의 논과 울무밭은 낙곡 등의 식물성 먹이를 제공한다. 2008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절적 홍수를 조절하고 상류에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천 두루미 서식지 부근에 홍수 조절용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운동가, 생태학자, 지역 현장의 두루미 보호가들의 염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천군이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두루미 지역 발전협의회'를 결성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생태학자들과 협력하여 댐 건설로 인한 두루미들의 겨울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군남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두루미를 공원의 상징물로 홍보하고 있다.

댐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체 먹이터와 울무밭을 조성했다.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



군남댐을 배경으로 한 두루미 테마파크의
두루미 조형물

이와 함께 인위적 먹이 제공을 위해 수 톤의 잡곡도 지원했다. 연천 지역의 두루미 개체 수가 50%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면 이런 노력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치상의 변화가 실제 개체 수의 증가였는지 혹은 모니터링 활동 증가의 결과인지는 분별하기 어렵다.

2012년 하반기 댐이 완성되었을 때 댐의 영향에 대해 생태학자들과 두루미 보호가들이 염려했던 바는 이내 현실로 나타났다. 연천 지역의 두루미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댐의 저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요 먹이터였던 병애여울과 장군여울이 잠기고 얼어버려 두루미의 월동과 먹이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먹이터도 2013년 3월 수위가 상승하면서 비접근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3월 모니터링 결과 관찰된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 수는 지난 3년(2010~2012)에 비해 저조했다. 감소 추세의 일부는 새들이 북쪽 번식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조류 전문가인 이기섭 박사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3월 중순에 평균적으로 7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관찰된 반면, 같은 시기인 2013년 3월에는 45마리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개별 개체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들에게 생태계의 변화는 새로운 월동 지역과 먹이활동 지역을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댐 건설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먹이공급과 생태 모니터링을 비롯한 프로젝트

트와 생태교육과 관광을 도입하여 두루미 서식지의 보전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자원 관리나 국가안보 등을 위한 정부사업의 우선순위와 두루미 보호 사이의 모순은 국가적인 개발사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방식을 찾고자 할 때 근본적인 도전을 맞게 됨을 보여준다. 충돌하는 사안들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 두루미 서식지에게 미치는 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번 현안은 시민단체들과 생태학자, 과학자, 환경운동가 등이 국가사업이 생태보전 문제를 의식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남북의 지정학적 관계와 물부족 사태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두루미 보호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자원관리 등과 비교했을 때 분명 부차적인 순위이지만, 두루미 생태공원 조성은 두루미 보전활동을 댐의 공공 이미지와 결합시켰다. 이제 천연기념물로서, 멸종위기종으로서 두루미가 갖는 세계적 인지도 때문만이 아니라 군남댐 자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윤리적 의무와 두루미 생존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행저지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재두루미 떼



북한 강원도 안변평야 비산농장의 두루미 보전 프로젝트

북한에서는 매우 다른 종류의 두루미 관련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두루미재단의 지도로 진행 중이다. 국제두루미재단은 북한 SAOS,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 남한본부, 그리고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Bird Life International 아시아 지부와 협력하여 북한 강원도 안변평야의 두루미 월동지를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두루미재단에 의하면, 두루미는 기록이 없는 고대부터 1990년대까지 안변평야에서 월동했다고 한다. 1990년대 말의 기근으로 인해 개체 수의 급감이 관찰되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안변으로 겨울철에 이동하던 240마리 개체군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두루미들은 먹이가 없는 안변 지역을 떠나 보다 풍부한 철원 지역 근처 남측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으로 월동지를 이동했다. 기계화된 농작물 재배와 인위적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풍부한 양의 낙곡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두루미재단의 창립자인 조지 아치볼드 George Archibald는 남한 두루미 서식 지역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걱정을 표명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연간 기온이 상승하면서 새들의 월동지가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2008년 비산농장 공동체 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안변의 두루미 월동지를 복원시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2007년부터 북한 농부들과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농업 교육을 진행한 한스자이델 재단은 안변사업에 적극적인 협력단체로 참여하여 농장을 유기농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관여했다. 북한의 조류학자와 협력한 국제두루미재단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이었던 전략을 적용하여 남하하는 두루미들의 이동 경로를 바꿔 안변에 월동하게 만들었다.

두루미들을 위한 지속가능 서식 지역을 마련하는 데에는 논 조성, 잡곡 분배, 동물성 먹이인 달팽이 번식, 그리고 주민 아이들이 잡은 수천 마리의 메뚜기를 풀어놓는 작업들이 포함되었다. 모형 두루미들을 논밭에 설치했고, 메가폰을 통해 두루미 울음소리를 내보내 새들이 서식지를 발견하고 월동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중국 산림청으로부터 두 마리의 두루미를 확보하여 안변 서식지에 풀어놓았다. 이런



안변 비산농장의 두루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1년 말에는 몇 마리의 재두루미가 며칠 머물렀고, 15마리의 두루미가 한 달간 월동했다.

비산농장은 북한 내에서 모델 농장이 되었으며, 농사 수확량도 화학 비료를 사용했던 기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국가가 지정한 63ha 면적의 안변 두루미 보호구역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들이며 지원을 유지했고, 이에 대해 한스자이텔 재단의 베른하르트 셀리게르 대표는 안변 비산농장이 조류 서식지로서의 명성으로 인해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두루미재단에 의하면, 유기농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식량 확보, 의료사업, 국가적 기념물 보전 등 여러 면으로 북한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 중요한 점은 두루미의 존재가 해외 지원을 유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서식지 보호사업은 경제적·상징적 자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 농업을 통해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두루미 보호의 의미에 대해 농부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주 |

- 1 Bird Life International Species factsheet : *Grus japonensis*, 2012(<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2798>). ;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Species field guide : Red-crowned

Crane(<http://www.savingcranes.org/red-crowned-crane.html>).

- 2 Lee, Ki-sup, 2010. 『두루미 : 천년학을 꿈꾸다』, Seoul : Field Guide. ; Yoo, Seung-hwa, Ki-sup Lee, and Chong-hwa Park, 2010, "Accident Cases and Causes of Electric Line Collision of Cranes at Cheorwon, Korea", Korean Journal of Ornithology 17(Korean). ; Yoo, Seung-hwa, Ki-sup Lee, Jin-Han Kim and Chong-Hwa Park, 2011, "Wintering Avifauna and Community Changes in response to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in Cheorwon, Korea", Journal of Korean Nature 4(4), pp. 287-292.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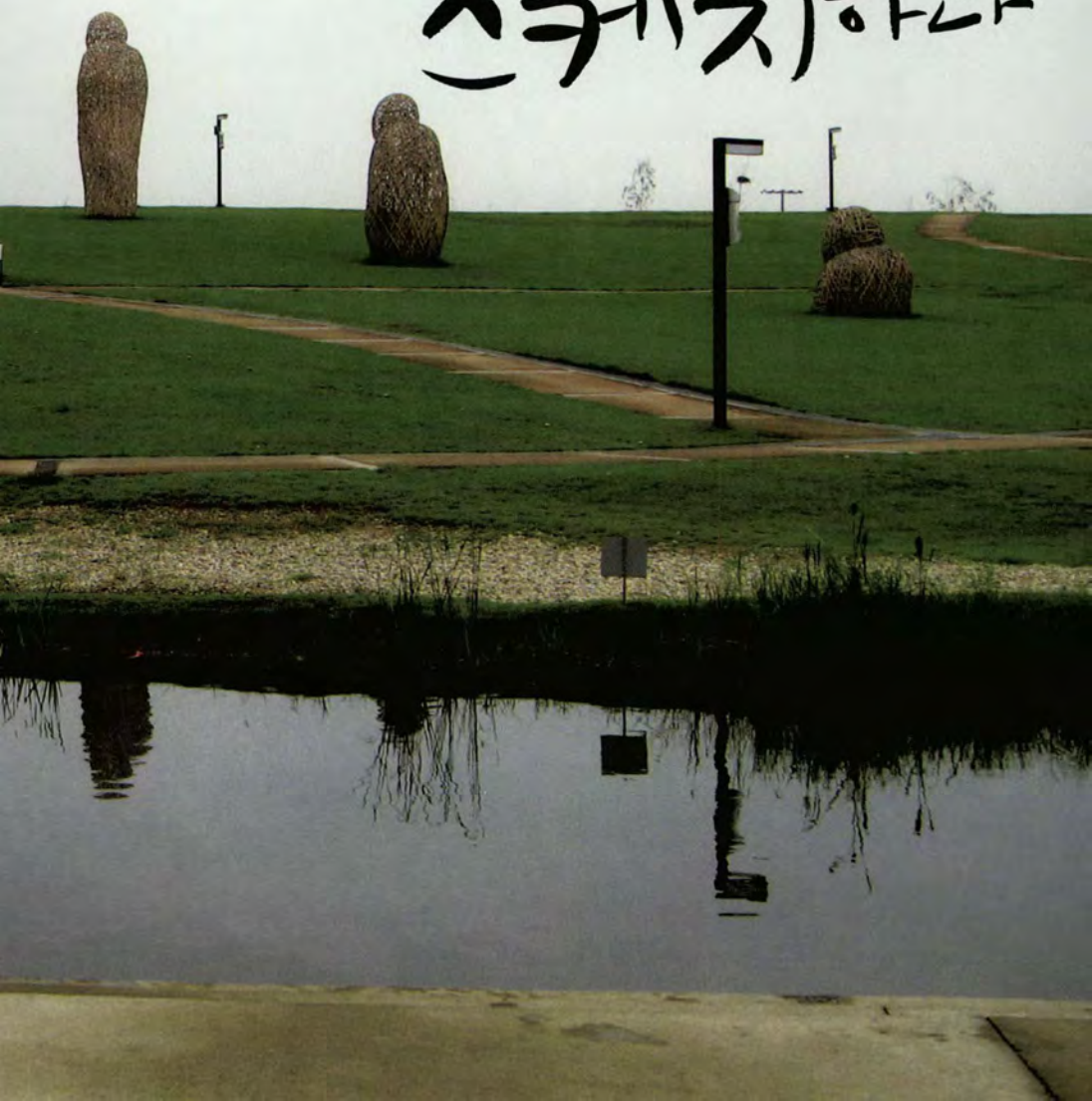
- Archibald, George, "Crane Habitat Restora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 Project, Pisan Farm Cooperative, Anbyon Pla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Progress Report-December 2011",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2011, p. 3.
- Bird Life International Species factsheet : *Grus japonensis*, 2012(<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2798>).
- Gyeonggi-do, 2009, Development of ecological education programs in the Peace-Ecological Park in the DMZ Region, Research report submitted by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Species field guide : Red-crowned Crane(<http://www.savingcranes.org/red-crowned-crane.html>).
- Kim, Eleana, 2012, "Returning Cranes to North Korea", SINO-NK, September 1, URL:<http://sinonk.com/2012/09/01/returning-cranes-to-north-korea-grus-japonensis/>
- Lee, Ki-sup, 2010. 『두루미 : 천년학을 꿈꾸다』, Seoul : Field Guide.
- Yoo, Seung-hwa, Ki-sup Lee, and Chong-hwa Park, 2010, "Accident Cases and Causes of Electric Line Collision of Cranes at Cheorwon, Korea", Korean Journal of Ornithology 17(Korean).
- Yoo, Seung-hwa, Ki-sup Lee, Jin-Han Kim and Chong-Hwa Park, 2011, "Wintering Avifauna and Community Changes in response to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in Cheorwon, Korea", Journal of Korean Nature 4(4), pp. 287-292.

김엘리나(Kim Eleana) | 로체스터대학 시각문화인류학과 조교수

뉴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국제입양에 관한 책 "Adopted Territory :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2010, Duke University Press)"을 출간, 이와 관련한 연구가 Journal of Korean Studies, Anthropological Quarterly 등의 사회과학 학술지에 실렸다. 현재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NEH/SSRC International Area Studies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DMZ와 그 생태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MZ 관련 연구는 SINO-NK(sinonk.com)에 소개되어 있으며, 레이첼카슨센터 저널에도 실릴 예정이다.



PMZ ^{4부} _의
비료를
스케치하라



20세기 세계 냉전의 산물로 한반도에 만들어진 DMZ는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 과정의 매개체로서뿐 아니라 그 생태적·역사적 가치로 인해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남북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DMZ 관련 정책과 연구는 그 주제와 목표, 방법론에서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자칫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이 정책 구상들 간에 상호 연계성을 찾아 정교하게 조정하고 단계적인 접근과 순응적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점진적 발전 과정을 통해 남북 이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 발전의 현장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공간으로서 DMZ의 평화가 상징화되어야 한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철책에 매달린 희망 리본

DMZ의 위상 변화와 통일을 향한 준비



박은진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미시간주립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및 관리, DMZ 일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등 DMZ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논저에 「DMZ 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 가치 추정 연구」(2010), 「DMZ 생태평화마을 조성 및 관리 방향 연구」(2012),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2012), 「DMZ의 미래」(공저, 2013) 등이 있다.

한반도 DMZ의 위상 변화

한반도에 DMZ가 설치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상황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DMZ도 다양한 조명을 받아왔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 개발에서부터 생태·역사문화 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DMZ의 위상을 남북 관계의 발전과 통일 과정의 매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현재의 중무장 상태에서 벗어나 전협정에 명시된 대로 '비무장 완충지대'의 모습을 갖추는 최소한의 변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 비록 제안의 대부분을 반대하거나 무시했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일부 제안에는 호응을 보내오기도 했다.¹ DMZ의 평화적 이용과 위상

병커에서 바라본 남과 북. 왼쪽이 남측 경계 초소, 오른쪽 비무장지대 너머 보이는 곳이 북측 지역이다.



변화는 남북 관계 발전과 협력의 결과로서 매우 필연적이고, 남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DMZ의 위상 변화는 접경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DMZ의 위상이 당장 변하지는 않더라도 DMZ의 활용 구상에 따른 잠재적 변화 가능성이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필연성을 제공한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DMZ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 거점을 개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DMZ의 활용 구상과 관련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미래 지역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DMZ 관련 정책은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고, 상호 연계성을 찾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DMZ 정책과 연구의 시대적 변화

1953년~1960년대 말 : DMZ의 무장화, 요새화

정전협정에 따라 DMZ가 설치된 이후 1970년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냉전의 분위기가 크게 지배했고,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적대적 대립 관계'였다. 휴전 직후에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무장'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3년 남한의 월남 파병과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사건^{1)·2)}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남북한 모두 철책선과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전투병력 배치를 강화하는 등 DMZ를 무장화,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휴전 직후 유엔사 유엔군 통합사령부는 DMZ 인접 지역에 민간인의 농사 활동을 규제하는 귀농한계선¹ 후에 '민간인통제선'으로 변경을 설정하여 관리했다. 이후 한국군이 유엔사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아 1956년부터는 민간인을 이주시키고, 출입 영농 및 입주 영농을 허가했다.

DMZ 일원에 대한 학술조사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 시작한 1965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²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전신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민통선지역을 조사하기도 했다. 1972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원하에 이 지역의 토양과 생태, 동식물을 조사했고, 1974년 『비무장지대의 인접 지역 종합 학술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1970~1980년대 : 세계적 데탕트와 DMZ 비무장화 논의의 시작

1970년대 초반부터 국제 정세는 긴장 완화와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남북의 이념적인 대결과 적대적 대립 관계는 여전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현실적 논의의 진전은 없었지만 DMZ의 '비무장화'에 대해 남북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1년 6월 12일 제31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 소장은 4개 항의 DMZ의 비무장화 방안²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³ 이에 대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발 더 나아간 DMZ의 비무장화와 평화 유지를 제안했다.⁴ 이와 같이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화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상호 체제의 우월성을 경쟁적으로 선전하고자 했다.

남한의 국토통일원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1973년에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개발 방안을 내놓았고,⁵ 1982년에는 북한에 민족 화합을 위한 20개 항의 시범사업을 제의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다.⁶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피살되는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8일 KAL기 폭파 사건 등 세계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속에서 남북의 적대적 대립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까지는 DMZ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대개 민통선지역이나 DMZ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태 조사였는데, 환경청, 문화재관리국, 국토통일원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들이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후 『민통선 북방 지역 자원 조사 보고서』(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87)를 발간했다. 그외 『휴전선 일대의 자연 연구』(조규송 외 7인, 1987) 등의 보고서도 발간되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초보적 합의

이 시기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공산 체제 붕괴와 독일의 통일 등으로 국제 냉전 질서가 무너진 때이다. 국내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여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DMZ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와 제안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Inter Korean Basic Agreement)'를 채택하여 실행을 염두에 둔 진정성 있는 협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DMZ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 교역장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에

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평화구역'으로 더 구체화되었다.⁷

북한 역시 1990년 5월 최고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10개 항 군축안'을 발표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 인원 및 장비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 등을 제안했다.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한에서는 부처별로 더욱 다양한 사업 구상을 만들어냈는데,⁹ DMZ에 코리아평화공단과 교류센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구상이었다. 이와 같이 남한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DMZ를 개발하는 구상을 만들었고, 북한도 군축과 평화지대화를 제의하여 DMZ의 위상 변화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 남북한 간에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는 기초적인 합의에 그치고 실천적 수준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한편 국제기구와 단체는 DMZ를 자연공원으로 조성·보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DMZ에 국제자연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DMZ의 자연공원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DMZ 논의가 비무장화에서 경제적 개발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적극적 활용 수준으로 나감에 따라 DMZ에 대한 연구도 생태 조사 연구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관광 개발 범위로 확장되었다.¹⁰ 동시에 DMZ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도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각각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¹¹ DMZ의 생태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목표로 민통선지역 일부에 대한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¹² 또한 세계적으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개념이 대두되면서 민통선지역에 대해서도 보호지역 지정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구상이 시도되었다.¹³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 남북 교류 활성화, DMZ의 위상 변화 기대 확산

이 시기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때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같은 해 시작된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여 2007년부터 개통되었는데, 이를 위해 DMZ 내 각각 250m와 100m 폭의 공간이 개방되었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2007년 개성 관광 시작 등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등 합의도 이루어졌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DMZ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위상을 변화시키는 제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 또

과거 냉전의 상징이었던 DMZ가 이제는 생명과 상생의 상징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남한에서는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제안이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제안들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¹⁴ 그리고 2006년에는 마침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가 커졌고, 1990년대 말에는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2000년에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남한에서 접경지역 발전과 연계한 DMZ의 활용과 개발 기대는 더욱 커졌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DMZ에 대한 정책 구상도 많아졌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연구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아졌다. 예전에 주로 생태 조사 연구와 일부 관광 개발에 국한되었던 DMZ 관련 연구는 지역 개발과 남북 협력의 범위로 넓어지고 구체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DMZ



포럼이나 국제두루미재단과 같은 국제단체, CNN의 대표였던 테드 터너와 같은 국제 저명인사들이 DMZ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¹⁵ 이로써 DMZ의 상징적 가치와 관심을 높이고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국제기구나 국제단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2000년대 후반 ~ 2013년 :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 DMZ 활용 구상 다변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가는 가운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 국정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DMZ와 인접 지역에 대한 남한의 정책 구상은 더욱 활발해졌는데, 안전행정부는 남북 교류·접경권 초광역 개발 구상²⁰⁰⁹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²⁰¹¹, 환경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²⁰⁰⁹과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²⁰¹¹, 문화체육관광부는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 개발계획²⁰⁰⁹,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구상²⁰¹⁰ 등을 각각 수립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DMZ와 인접 지역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08년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 타당성과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DMZ 인접 지역에 DMZ 평화누리길과 같은 탐방로 조성, DMZ 국제영화제, DMZ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DMZ 체험교육 및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2년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도 2007년 '한국 DMZ 평화 포럼'을 창설하여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DMZ의 평화적 이용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2009년에는 고성과 인제에 각각 DMZ박물관과 DMZ

평화생명동산을, 2010년에는 철원에 평화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DMZ 인접 지역 거점 조성에 주력했다.

이 시기의 흥미로운 점은 이전과 달리 DMZ 자체에 대한 구상보다는 DMZ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인접한 지역에서 DMZ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연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DMZ의 위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미래 DMZ의 변화를 전제로 우선 관할권이 있는 남한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접경지역의 낙후와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2013년 남한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과는 약간 다른 기조의 DMZ 활용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징적 과정이자 결과로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DMZ 인접 지역에서 다시 DMZ 내부로 정책적 관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상징적 결과로서 DMZ의 직접적 이용을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DMZ 세계평화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 군사 대치의 공간 DMZ를 평화·생명의 공간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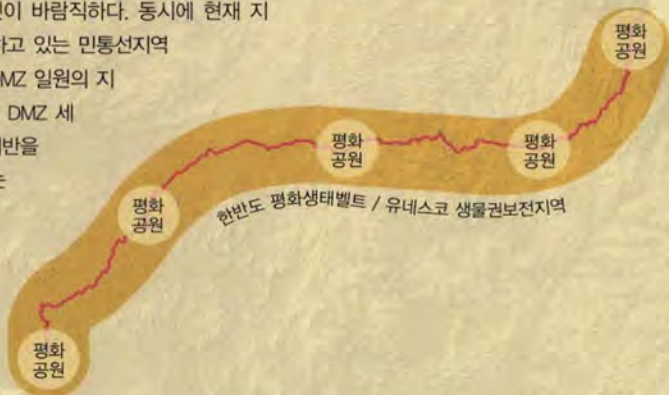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 의회 연설에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논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제안되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다시 정부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쌓으며 DMZ 내부에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고 이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방향을 잡고 강하게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원래 평화공원은 두 국가의 접경에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군사 충돌을 막고 비정치적 협력과 접경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여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27개소, 약 463만km² 면적의 평화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화공원의 많은 사례들 중 한반도 DMZ만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은 없었고, 분단된 국가 내에 평화공원이 만들어져 갈등이 해소된 곳도 없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DMZ에는 새로운 유형의 평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 갈등 해소의 결과로서 DMZ 내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상호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조급함을 버리고 신뢰 형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현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연계 기반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인간과생물권계획(MAB)의 일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976년 처음 57곳이 선정된 이래 2012년 12월까지 117개국 610개소가 선정되었다. 한반도에는 남한에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이 지정되었고, 북한에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이 지정되었다.

한반도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다. 공식적으로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통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DMZ를 남북이 합의하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생물권보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로, 과학적인 연구와 생태관광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체코/폴란드, 프랑스/독일,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등 9개소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남북이 공동 추진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도 북한의 무반응으로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남측 DMZ와 인접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2012년에는 남한 단독으로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때 북한이 DMZ 남측을 포함한 것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으며, 국제조정 이사회는 용도구역 설정 미비를 이유로 유보를 결정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사회가 국제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뛰어난 생태문화 자원을 지키고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곳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자발적 참여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비정기적이고 지역 참여적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DMZ 정책과 연구의 주요 쟁점

초기 DMZ 정책의 주요 목적은 중무장된 DMZ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비무장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DMZ를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DMZ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려는 접경지역의 관심도 커졌다. 이러한 정세 흐름과 함께 DMZ 관련 정책과 연구는 DMZ 내부에서 인접 지역으로, 남북 협력의 제에서 지역 개발 의제로, 보전 활용에서 개발 활용으로 관점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DMZ 내부 vs 인접 지역

남한은 남북 공동으로 'DMZ 내부'의 활용 정책과 조사 연구를 추진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DMZ에 통과로가 놓인 것이 유일한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DMZ 내부에 대한 조사 연구도 2008년과 2009년 환경부 사업으로 DMZ 남측의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에 대해 일부 실시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환경부는 2010년 동부지역의 DMZ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획했으나, DMZ 내 민간인 출입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로 인해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¹⁶

이외에 1965년부터 이루어진 DMZ 관련 생태 조사는 모두 민통선지역 등 DMZ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MZ와 인접한 민통선지역에서의 생태 조사와 멀리서 조망하는 DMZ 내부 경관을 통해 DMZ 생태환경의 특성을 유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단 이후 60년간 DMZ 내부는 연구조사나 정책 실현의 대상 공간이 거의 될 수 없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248km의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단절된 공간 DMZ가 갖는 상징성이 부각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DMZ와 인접한 민통선지역이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실현의 장이 되고 있다.

DMZ 내부가 아닌 인접 지역의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정책도 DMZ 자체보다는 인접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면서 'DMZ 일원'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었다.¹⁷ DMZ 일원은 정전협정에 따른 DMZ,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괄한다. 또한 미래 통일시대에 DMZ와 그 인접 지역을 평화생태벨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하에 정책 실현이 가능한 DMZ 인접 지역에 먼저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DMZ는 철조망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간 범위가 설정된 생태계이다. 하지만 실제 DMZ 생태계는 인접한 민통선지역이나 접경지역의 생태계와 산과 하천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는 철조망에 의해 분리된 공간 DMZ의 역사적 상징성과 자연생태계의 연결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DMZ의 자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인접 지역에서 활용하고 지역 발전 전략 속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남북 협력 의제 vs 지역 개발 의제

DMZ의 위상 변화와 활용 문제는 남북 협력 의제이면서 동시에 지역 개발 의제이다. 초기에는 DMZ의 비무장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적 이용, 즉 남북 협력의 의제로서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거기에는 DMZ 내 평화시 건설과 같은 개발론의 접근과 국제자연공원 조성과 같은

보전론의 접근이 있어 다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⁹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남북 협력 의제로서 DMZ의 보전과 이용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던 김대중 정부 때조차도 DMZ를 남북 협력을 위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남북 협력 의제로서 DMZ에 대한 구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작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 발전 의제로서 DMZ의 보전과 이용 논의가 많아졌다. 특히 DMZ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높아졌다.

남북 협력 의제와 지역 개발 의제로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인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²⁰ 선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잘 보전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자원을 지역의 발전에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과 연구를 기본으로 지속가능 관광, 환경친화적 기업 육성,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녹색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이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본질적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서 도입되고 지역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DMZ에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²¹ DMZ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최우선 목적은 남북이 협력하여 DMZ를 보전하는 일에 주어졌다. 이런 접근은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남북 협력사업으로 의제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DMZ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이후 DMZ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DMZ의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으로 더 크게 인식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협력과 참여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은 간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은 DMZ 내부가 아니라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서 DMZ의 자원 가치를 인

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참여와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지역적 참여와 협력 구조가 활성화된 이후에 남북 전체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보전 vs 개발, 그리고 이의 절충

DMZ의 비무장화와 평화체제 유지가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 가운데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야생동식물에게는 평화의 땅이 된 DMZ'가 역설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DMZ 인접 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로 이 지역의 높은 생물다양성과 희귀 또는 멸종위기 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²² '생태계의 보고'로서 DMZ가 언론매체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DMZ의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더 나아가 군사 대립의 공간을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 데 남북이 협력해야 할 당위성도 커졌다.

특히 DMZ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은 비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주제로서 중립적인 입장의 국제단체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남북한을 중재하고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실제로 접경지역에서 분쟁과 대립이 비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협력을 통해 완화되는 평화공원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사례들이 있으며,²³ 1979년 IUCN이 DMZ에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²⁴

DMZ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대중에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해석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군사지역 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실제로 DMZ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많은 관심에 비해 지역에서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은 그

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995년 환경부가 건봉산과 향로봉 일대, 대암산과 두타연 일대, 철원평야 일대 609.9km²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2000년에는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245호}의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평화시와 같이 DMZ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서 DMZ 일원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실제 북한에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되고 금강산 관광 개발이 이루어져 DMZ 일원의 개발 기대는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 DMZ 일원의



개발 기대와 요구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남북이 여전히 대립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개발 수요는 낮고,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개발의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후 60년간 지속된 남북의 이념과 발전주의의 경쟁은 남북한 모두에서 자연 지배의 세계관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도구화했을 뿐 아니라 남북이 서로 개발과 개조의 대상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만들어 점점 분단을 고착화시켰다.²⁵ 이런 의미에서 DMZ의 보전은 단순히 인간과 분리된 객체화된 자연의 보전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생태계의 보고'로서의 DMZ가 아니라 근대화 발전주의가 만들어놓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 상태와 고착화된 분단 상태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천으로서 DMZ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DMZ의 철조망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딱새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보전' 논의는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객체화된 자연의 보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자연을 황폐화시키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개발사업 논의와 그 차원이 다르지 않다. '보전'과 '개발'의 절충이라 함은 둘 사이의 적절한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양립과 의존성을 의미한다. 자연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문화를 만드는 개발, 이를 통해 자연과 주민들의 삶이 함께 유지되고 보전되는 개발, 소위 지속가능 개발의 실행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을 DMZ 일원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연구와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1997년 환경부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수행한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와 한국산지보전협회가 2005년 수행한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 생태보전과 지속가능 개발 방안 연구』 등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삶을 고찰하고 그 속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역 개발 대책을 다루었다. 이후에도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정책과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²⁶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이 최우선적으로 발전을 의미하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하에서, 특히 다른 곳이 신도시와 빌딩숲으로 빠르게 바뀌는 동안 어떤 변화 없이 상대적 박탈감만을 느꼈던 이 지역에서, 또한 통일 이후 웅비를 꿈꾸고 있는 이곳에서 기존의 경제성장과는 다른 대안적 발전 모델의 수용은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이 DMZ 자연의 '보전'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 물리적·구조적 접근에서 나아가 인문학적·사회학적 접근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미래 전망과 방향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사라진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는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초기 DMZ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무장화와 일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DMZ 생태계 조사와 보전 가치에 국한되었으나, 이제 목표와 방법론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 요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DMZ의 미래 위상 변화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DMZ의 위상 변화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결과로서 가능하다. 과거 수많은 논의와 구상을 살펴보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전제 없이 DMZ를 갖고 남북이 협력하여 보전이든 개발이든 어떤 이용을 하지는 구상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DMZ를 놓고 남북이 협력하여 비무장화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서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DMZ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남북 협력 의제와 지역 개발 의제로서 접근이 혼재되어 무엇이 먼저인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남북 협력을 위해서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정확히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단계적인 접근과 순응적 발전을 위한 연계성과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Z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보전론과 개발론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보전'과 '개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양립과 의존성을 가지는 대안적 발전 모델이 DMZ

일원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도 개념이 이런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데 활용되도록 그 목적과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DMZ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보다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주 |

- 1 비록 실천적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전후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한 협의 추진에 합의했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합의서 채택,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 2 ① 생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 인원 철수 ② 군 정전위 군사시설 파괴 조치 ③ 전체 DMZ의 비무장화 ④ 무장 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 등의 4개 항.
- 3 국방정보본부, 1986, 『군사정전회담 자료집』, p. 168.; 김정수, 2010,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서 재인용.
- 4 ①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 ② 남한 내 신무기 도입 중지 ③ 남한 내 도입한 각종 무기 반출 ④ 군사 도발과 침략 행위 중지 ⑤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철수 및 파괴 ⑥ 공동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⑦ 남북한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월경하여 자유 왕래 허용 등 7개 항.; 국방정보본부, 1986, 『군사정전회담 자료집』, 서울: 국방정보본부, p. 169.; 김정수, 2010,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의 변천과 향후 과제”, p. 67에서 재인용.
- 5 국토통일원, 1973a, 『비무장지대의 공동 개발 방안(안)』.;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시각과 과제”, p. 156 재인용.
- 6 DMZ와 관련한 것은 7개 항으로, ① 서울-평양 간 도로를 연결·개통 ②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 공동 지역으로 개방 ③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 왕래 ④ 자유로운 남북 공동 어획 구역 설정 ⑤ 비무장지대 내 공동 경기장 건설 ⑥ 비무장지대 내의 동식물 자연생태계 공동 학술조사 ⑦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였다. 김정수, 2010,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의 변천과 향후 과제”, 『평화학 연구』 제11권 제1호, p. 68.
- 7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통일 역사’,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관과 남북 학술교류센터 등, 남북 상품 교역장, 운동 경기장, 종교인들의 공동 집회소 등의 평화구역을 남북 간 합의와 성과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 제2, 제3의 평화시를 건설함으로써 DMZ 전제로 확대하는 구상. 국토통일원, 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pp. 27-28.
- 8 김정수, 2010,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의 변천과 향후 과제”, p. 70.
- 9 남한이 판문점 서쪽의 DMZ에 50~100만 평 규모의 코리아 평화공단 설치를 제안했고, 북한에서 해주 일대 300만 평 규모로 수정 제의했다. 그외에 남북 송유·가스관 건설, DMZ 내 남북 합작 정유공장 및 화력

- 발전소 건설, 합작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DMZ 산림자원 이용계획 수립, 남북한 관광 자원 연계개발 구상, 천연자원 및 농산물 교류센터 DMZ 내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 10 이용학, 1992, 「철원군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 안보관광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야은숙, 1993,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김영기, 199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 개발에 관한 연구」; 장승호, 1995, 「한국의 안보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DMZ(화천·양구·인제) 지역을 중심으로」; 강효석, 1996,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성 연구 : 설악,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박형탁, 1997, 「안보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주로 석사학위 논문 형태로 DMZ와 인접 지역 관광개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 11 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 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00,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 1995-2000』; 문화공보부/한국자연보존협회, 1992,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민통선 북방 지역) 자연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등.
 - 12 환경부가 1995년 강원도의 건봉산-향로봉, 대암산-두타연, 철원평야의 3개 지역에 대해 생태계 보전 지역 지정을 목표로 정밀 조사를 추진했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보호지역 지정은 무산되었다.
 - 13 1995년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계획이 무산되면서 환경부는 기존의 규제 중심 자연보전 정책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1997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6-1999년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팀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14 2004년 10월 5일 북한의 국토헌경보호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민족 분열로 인한 거래의 고통과 불행의 피눈물이 어려 있는 원인과 치욕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될 수 있는냐」고 반문하고, 「분열과 대결의 유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보존할 것이 아니라 가시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걸어내고 통일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5 경기도 주최 2005 DMZ 포럼 국제 컨퍼런스(고양 킨텍스, 2005년 8월 16-17일)에 많은 국제단체와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 16 2010년 3월 29일, 국방부가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DMZ 내에 언론사의 취재와 견학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북한은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를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 지대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무력 사용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동부지역 DMZ 조사 계획도 무산되었다.
 - 17 전성우, 민병철, 이병준,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 3
 - 18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남북 교류·접경권 초광역 개발 기본 구상」(2009)에 따른 DMZ 생태평화벨트 개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 계획(2009),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2011년 유네스코에 제출했던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가 모두 미래 통일시대 DMZ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DMZ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기반 조성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19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 시각과 과제」, p. 159.
 - 20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인간과생물권계획(MAB :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육상과 바다의 생태계를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1976년 처음 57곳이 선정된 이래

2012년 12월까지 117개국에 610개소가 선정되어 있다.

- 21 2001년 1월 16일 김대중 대통령 신년 인사에서 남북 공동으로 DMZ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언급하면서 검토가 시작되었다.
- 22 1972년 문화재관리국 지원을 받아 한국자연보존연구회가 『비무장지대의 인접 지역 종합 학술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1991~1993년 성천문화재단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DMZ 인접 지역과 서해 도서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로 발표했고, 산림청은 1995~2000년 조사 결과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로, 환경부는 2003년에 이 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 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로 발간했다.
- 23 에카도르와 페루 사이의 접경평화공원,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3개국 사이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들이 있다. 박은진 외, 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 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Ali, Saleem H., 2007,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he MIT Press.
- 24 전성우 외,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 p. 46.
- 25 이원혁, 2011, "21C 녹색한반도, 발전과 녹색의 대립을 넘어",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pp. 98~103.
- 26 김기곤 외, 2000,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이봉희, 2006, 『강원도 DMZ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남정호 외, 2005~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2008, 『평화생명지대(PLIZ) 관광자원화 방안』, 경기도, 2008,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연구』, 경기도, 2010, 『민통선지역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환경부, 2012,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계획 수립 연구』 등.

| 참고문헌 |

- 강효석, 1996,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성 연구 : 설악,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기도, 2008,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도, 2010, 『민통선지역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국토통일원, 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김기곤 외, 2000,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UNDP.
- 김영기, 199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수, 2010,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발전과 향후 과제』, 『평화학 연구』 11(1),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 시각과 과제』, 『통일문제 연구』 24(1), 평화문제연구소.
- 남정호 외, 2005~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2,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민통선 북방 지역) 자연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 박은진 외, 2012, 『분단 대립 접경지역의 해외 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 박형탁, 1997, 『안보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 산림청, 2000,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 1995-2000』, 국립산림과학원.
- 성천문화재단, 1996, 『아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현암사.
- 아은숙, 1993,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봉희, 2006, 『강원도 DMZ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이용학, 1992, 『철원군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 안보관광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혁, 2011, 『21C 녹색한반도, 발전과 녹색의 대립을 넘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연구단.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87, 『민통선 북방 지역 자원 조사 보고서』.
- 정승호, 1995, 『한국의 안보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DMZ(화천·양구·인제)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성우 외, 2003,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재선, 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 개발 계획』, 『한국관광정책』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규송 외, 1987, 『휴전선 일대의 자연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통일부, 2010, 『DMZ의 평화적 이용 구상』.
- 한국관광공사, 2008, 『평화생명지대(PLZ) 관광자원화 방안』.
- 한국산지보전협회, 2005,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 생태보전과 지속가능 개발 방안 연구』.
- 한국자연보존연구회, 1974, 『비무장지대의 인접 지역 종합 학술 보고서』.
- 행정안전부, 2009, 『남북 교류·접경권 초광역 개발 구상』.
- 행정안전부, 2011,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
- 환경부, 1997,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 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 환경부, 2009,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 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부, 2011,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계획』.
- 환경부, 2012,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계획 수립 연구』, 경기개발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 Ali, Saleem H., 2007,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USA : MIT Press.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과 북의 대치와 충돌은 NLL을 경계선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NLL이 아니라 서해 연안 접경지역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태환경적 가치와 우리 한민족만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존재한다. 남과 북이 그 다름과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함께 번영을 모색한다면,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평화와 번영의 협력지대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심적인 경제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 9장 |

서해 위 또 하나의 경계, NLL

NLL



장용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선임행정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논저에 「북한 국제화 2017」(공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 인식과 대응 전략」(공저),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 변동 : 북한 관련 시사점」(공저), 「서해 북방한계선과 평화협력 특별지대 재론」, 「북·중 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 방향」, 「국가사회주의와 국가 계급지배의 동태성 :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등이 있다.

바다 위의 분단선, 북방한계선의 두 얼굴

한반도 허리에 선명하게 그어진 군사분계선과 마찬가지로 동해와 서해 상에 있는 또 하나의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도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흉터이다. 또한 육지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가 비무장 지대(DMZ)라면,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근접 구역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약 한 달 후인 8월 30일, 당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서북 5개 도서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연안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에서부터 12개 좌표를 연결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동해에서는 육지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했다. 서해의 북방한계선과 동해의 북방경계선 명칭은 1996년 7월 1일 '정전시 교전 규칙'이 개정되면서 북방한계선이하 NLL으로 통일되었다.¹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육지의 군사분계선 근처 접적^{接敵} 지역에 늘 긴장이 감돌고 때때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듯이, 해상 NLL 주변의 긴장과 갈등도 그에 못지않다. 섬이 적은 동해보다는 섬이 많은 서해에서 특히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해 NLL은 전 세계에서 언제든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하나로 주목받는다. 또한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서해 NLL 인접 수역 및 남과 북의 연안 접경지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태환경적 자산과 역사문화적인 소중한 기억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 NLL을 둘러싼 이 지역은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 나아가 동북아 번영을 이룩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정전 60년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과제와도 같다.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다는 천연 활주로인 백령도 사곶 해안.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임시 활주로로 사용했던 곳이다.





서해 NLL과 인접 수역

자료 : 남정호 외, 2005,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230만 명의 삶의 터전, 서해 연안 접경지역

신문이나 TV 등 언론을 통해 서해 NLL과 인접 지역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분쟁 지역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육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삶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적으로 이곳은 크게 남북한 3개의 도급 행정단위와 12개의 시·군급 행정단위가 존재한다. 도급 단위로는 남한의 인천광역시와 북한의 황해남북도(黃海南北道)가 포함되고, 시·군급 단위로는 남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강화군 公同道와 우도·웅진군(連平道·大淸道·小淸道·白翎道), 북한 황해남도의 해주시(海州市)와 연안·배천·웅진·강령·벽성·청단·룡연·태탄군 그리고 황해북도의 개성시(開城市)가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남한의 인천광역시와 북한의 황해남북도를 합하면 약 720만 명에 달하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EEZ)과 남북 접경지역의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보면 약 230만 명이 된다. 주요 산업지구로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황해북도 개성시의 개성공업지구, 황해남도 해주시의 해주공업

지구가 있다.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서해 연안의 남북한 접경지역은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뉜다.

첫째 권역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하구가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남한의 인천광역시 강화군^{교동}과 북한의 개성시^{개풍}, 연안군, 배천군이 인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성의 개성공단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아우르는 성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른 서해 연안 접경지역 구분

구분	강화·한강 하구 권역	연평 권역	백령·대청 권역
위치	예성강, 임진강, 한강 하구	해주만	대동만, 룡연반도
북한 접경지역	개성(개풍), 연안, 배천	해주, 웅진, 강령, 벽성, 청단	룡연(몽금포), 태탄
남한 접경지역	강화(교동)	웅진(연평)	웅진(백령·대청·소청)



자료 : 한반도 평화포럼(『인천광역시 연구용역 보고서』, 2011.

장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둘째 권역은 해주만을 중심으로 남한의 웅진군 연평도와 북한의 해주시, 웅진·강령·청단·벽성군이 마주보는 곳이다. 이 지역은 연평 어장을 비롯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남북 공동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해주항과 인천항 간에 직항로가 개설된다면 공동어로구역과 함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화수역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권역은 북한의 대동만과 룡연반도를 중심으로 남한의 웅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와 북한의 룡연·태탄군이 마주보는 곳이다. 이 지역은 생태환경적 가치가 다른 권역보다 높는데,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생태환경적인 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양 생태평화공원 건설과 같은 구상들을 추진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분쟁 수역으로 변모한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1951년 7월 10일부터 2년여 동안 진행된 정전협상에서 한반도 연해 수역의 경계선을 두고 유엔군 측과 북한군 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정전협정의 주 목적인 무력충돌 방지, 정전체제 관리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했다.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유엔군

백령도의 보물, 점박이물범을 지켜라!

백령도 해역은 우리나라에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원래 물범은 북위 45도 이북에 서식하는 국제적인 희귀종으로,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 반도, 홋카이도 및 훈슈 등지에 분포하며, 전 세계에 약 300만 마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북위 45도 이남에 서식하고 있어서 세계 해양학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渤海) 만과 라오둥(遼東) 만의 얼음 위에 새끼를 낳는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 해역에서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데, 이 일대에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우럭, 놀래미, 장어 등 주요 먹이인 어족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백령도 일원에서 관찰된 점박이물범의 수는 220마리가량으로, 1940년대 8,000여 마리에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물범에게는 방수와 보온을 위해 일광욕이 가능한 암초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백령도 물범바위에는 매우 좁은 공간에 많을 땐 200여 마리가 몰려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하반기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물범바위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물범 관찰 전망대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어민과 관광객들에게 점박이물범이 백령도 인근에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호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번식지인 중국과 서식지인 남북한이 함께 보호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 2005년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도 선정되었다.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도 선정되었다.



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는 유엔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²

이후 NLL은 실제로 정전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NLL은 사실상 한반도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북한도 NLL을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963년 5월 제168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북한 간첩선이 NLL을 넘어왔다고 주장하자, 북한은 자기 측 함정은 NLL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실은 그들이 NLL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984년 9월에서 10월에는 북한 선박이 NLL 상에서 남한 선박에 수해 물자를 인도했고,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NLL에 준해 조정된 한국비행정보구역(ABZ)을 공고했음에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서해상에서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대개 NLL을 실행 지점으로 수용했다.³ 무엇보다 북한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으로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명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NLL 이남에 대한 남한의 기존 관할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관행에도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경계선으로서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당시 남북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

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나가기로 명시했다. 해상경계선 문제가 계속 협의될 사안으로 남아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NLL이 남북의 경계선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NLL이 6·25전쟁의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상 당시 유엔군 측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를 주장했고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확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쌍방의 인접 해면을 존중하고 항구를 봉쇄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했다.⁴ 그 결과 정전협정에는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24일까지 상대방이 관할하던 섬은 모두 돌려주되 서해 5도로 불리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유엔군 측이 관할한다고만 명시됐다. 이런 맥락에서만 보면 북한이 서해 NLL을 침범해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서해상의 경계선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공표한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남한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11년 4월 4일 시행과 동법 시행령 2013년 3월 23일 시행에도 서해 NLL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NLL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인다. NLL 설정 당시 한국 해군은 2급 비밀로 분류된 작전 지시에 따라 NLL을 기준으로 해상 작전을 수행했다.⁶ 이는 NLL 설정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NLL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지만, 1950~60년대엔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하여 남한 해군을 공격하거나 어선을 납치했다.⁷ 1973년 10월부터 11월까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서해 5개 섬 통항 질서
 자료 : 국방부, "북방한계선(NLL)", 2009.

지는 43회나 서해 NLL을 침범한 소위 '서해 사태'를 촉발했고, 이후 12월에 열린 제346차,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 연해라며 서해 5도를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7년 7월 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했고, 8월 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을 해상 군사경계선이라고 선포하는 등 공식적으로 NLL을 부인했다.⁸ 특히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직후인 9월 2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데 이어,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개 섬 통항 질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본다면 서해 NLL 수역은 사실상 명백한 분쟁 수역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이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NLL을 고수하고,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남북 해군 교전에서 남한 고속정(오른쪽)이 북한 경비정(연기 나는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뒤 전속력으로 후진하고 있다.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렇다면 그동안 남과 북은 이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4년 6월에 열린 남북 2차 장성급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와 함께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려고 ①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③ 함정 간 상호 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 공통망 활용 ④ 보조 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 신호 규정 제정·활용 ⑤ 불법 조업 선박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또한 그해 8월 15일까지 쌍방 통신연락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6월 14일 남북 함정 간 시험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서해지구 통신망은 2005년 8월 10일 시험 통신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서 개통됐고, 하루 두 차례 시험 통신 점검과 제3국 불법 조업 선박의 정보 자료 교환에 활용됐다. 그러나 서해지구 통신망은 2008년 5월부터 통화 상태가 불량해 가동이 중단됐다.⁹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합정 간 통신은 북한이 2010년 5월 남한의 소위 5·24 조치에 대응해 활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¹⁰ 그 이전부터 제대로 호응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¹¹

현재 서해 NLL 수역과 5개 도서를 비롯한 연안 접경지역에는 남북이 모두 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¹²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려고 마련한 장치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수도권을 북한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안보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남북이 협력하면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산도 존재한다.

이런 가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나 위협 또한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NLL의 본질적 개념인 경계선으로서의 의미와 군사 안보적 가치를 넘어서, 서해 연안 접경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가치들에 주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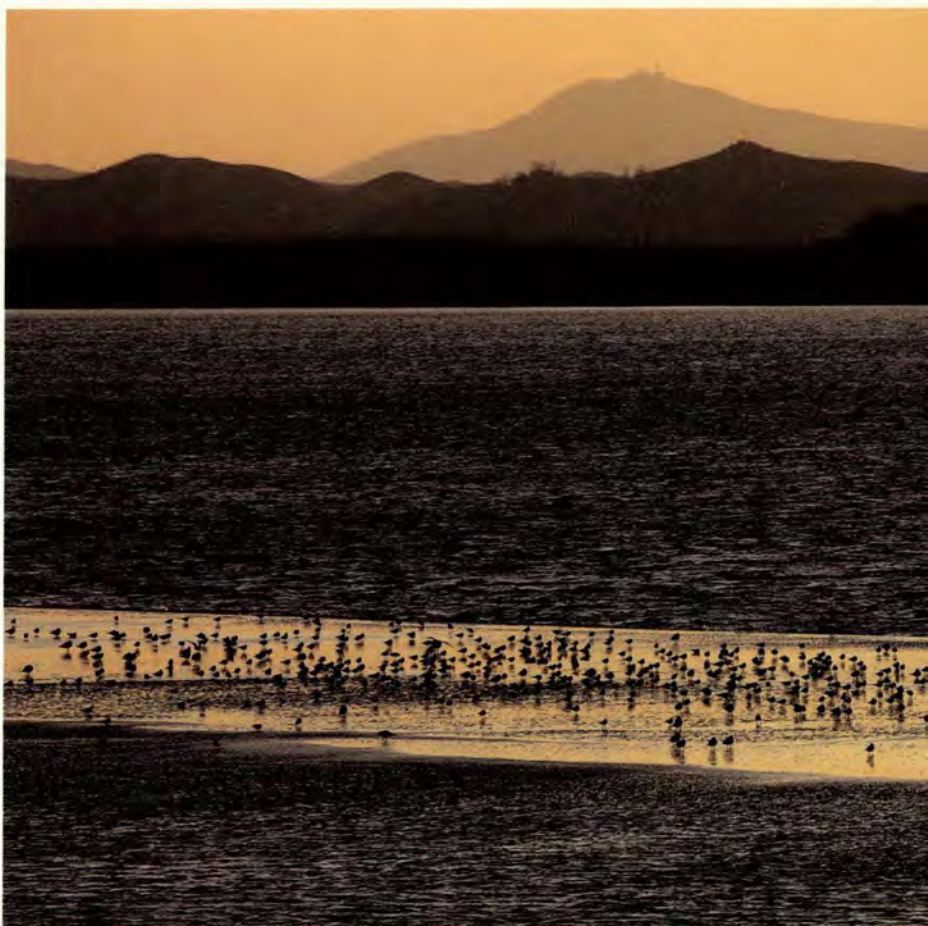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재발견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의 보고(寶庫)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원래 연안 지역은 생태환경적 가치나 경제적 생산성에서 육상 지역을 능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⁴ 이런 점에서 서해 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생태환경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

한강 하구는 겨울철새 이동 시기에 재두루미의 중간 기착지가 된다.



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남한 최대의 자연 하구인 한강 하구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를 뜻하는 하구(河口)는 말 그대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전이 수역이자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전이대로서 다양한 어류가 유생 시절 머무는 곳이다. 이는 한강 하구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는 한반도 전체 갯벌의 약 26%에 해당하는 갯벌이 발달해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갖춘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는 다양한 보호구역이 존재



한다. 남북한 모두 동식물과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특정 도서나 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생태환경과 어족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고대부터 한반도가 중국을 비롯해 세계와 교류하기 위한 요충지로 기능했다. 특히 해양 국가였던 고려가 수도 개경을 방어했던 군사적 요충지이자, 송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들과도 교류했던 국제도시¹⁵ 개경의 수도권에 속했던 지역이다.

먼저 해주는 관내도 또는 서해도에 속했는데, 995년 성종 14 우신책군(右神策軍)으로 우보(右輔)가 됐고, 좌신책군(左神策軍)으로 좌보(左輔)였던 양주와 더불어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1114년 예종 9에는 서해를 장악하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안서도호부로 승격한 뒤 염주·백주·안주를 속현으로 거느리고, 영 방어군인 풍주와 영 현령관인 웅진현, 영진이었던 백령진도 관할했다.¹⁶

이렇게 해주가 개경의 방어를 책임졌다면, 인천광역시시의 교동도는 고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지정 현황

남 한		북 한	
명 칭	지정 건수	명 칭	지정 건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	식물보호구	1
습지보호구역	2	습지보호구	3
천연기념물	12	천연기념물	37
특정 도서	9	바다수산자원보호구	3
소계	25	소계	44
서해 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총 69개소			

자료 : 남정호 외, 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Ⅲ)』.

려시대 국제항이었던 벽란도의 관문으로서 조운선과 각종 상선이 몰려드는 수도 개경의 외부 外府와 같은 존재였다. 무엇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강화도는 고려가 몽고에 항쟁하기 위해 수도를 옮겼던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공식적인 수도로서 소임을 다했다.¹⁷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는 삼국시대 이래 수많은 유물·유적이 존재한다. 특히 고려시대와 관련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강화도와 황해남도 연안에는 중요한 유물·유적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강화도와 황해남도 연안, 개성 지역 등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고려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서해 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 유산을 보호·보존하면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이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 유산을 고려한 보전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철저한 환경영향 평

황해남도 연안에 산재한 고려시대 유물·유적(국보급)

지역	유물·유적
해주시	광조사 5층탑, 신광사 무자비, 신광사 부도, 신광사 5층탑, 해주 9층탑, 해주 다라니석당, 해주 석빙고, 해주 5층탑
룡연군	오차진성
배천군	강서사, 강서사 5층탑과 7층탑, 등암산성, 원자리 자기 가마터 1~4호, 차악산성, 탈미산성
연안군	연안산성
웅진군	본영리 읍성, 본영리 토성, 수항문 기적비, 웅진 고려자기 가마터
청단군	영귀정, 화산성

자료 : 한국 문화문재연구소,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동 출판, 2004, 『조선형토대백과 8 : 황해남도』 1·II.

인천광역시 강화도의 고려시대 유물·유적

구분	유물·유적
보물	하점면 5층석탑, 전등사 대웅전, 하점면 석조여래입상, 백련사 철아미타불 좌상
사적	강화산성, 강화외성, 고려궁 터, 홍릉, 석릉, 가릉, 곤릉, 심랑성, 덕진진, 선원사 터

자료 : 한반도평화포럼, 2011,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실행방안 연구 : 서해 평화 변영과 인천 이니셔티브』.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UNESCO)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여 생태계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이나 연안·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나아가 이를 해양 생태평화공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¹⁸⁾ 또한 역사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남북 공동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와 개성 그리고 황해남도 연안을 환상으로 연결하는 해상 및 육상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남북 공동 변영의 길을 모색하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공동 변영의 길을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바다에서의 협력사업과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 단위 경제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협력사업으로는 서해 연안 접경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나 수산업 협력이 추진될 수 있고, 광역 단위 경제협력사업으로는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해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구상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

•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 협력 추진

공동어로 사업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는 했으나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 공동어로 사업 논의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1982년 2월, 전두환 정부는 북한에 대해 20개의 시범사업을 제의했는데 여기에 남북 공동어로 사업도 포함됐다. 그리고 2005년 7월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에서 서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시작,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 통제 등에 남북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어진 군사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남측과, 서해 해상경계선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공동어로수역도 NLL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동어로 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¹⁹⁾

이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건설에 합의하면서 남북 공동어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12월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또다시 합의에 실패해 결국 공동어로 사업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북은 NLL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공동어로 사업을 통해 공동 이익에 기반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다시 NLL이라는 경계선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공동어로 사업은 영영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NLL이 아닌 수산자원을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²⁰⁾ 즉, 군사당국이 아닌 수산당국이 어족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기초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적인 공동어로에서 남북 합작회사 설립까지²¹⁾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어족자원 보

호, 수산물 가공이나 유통, 연안 지역에서의 양식업 등 수산업 분야 전반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간다면 이는 북한의 서해 연안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성격도 지니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다.²²

•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 구축

인천과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는 사업은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통합된 경제 단위로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적인 경제지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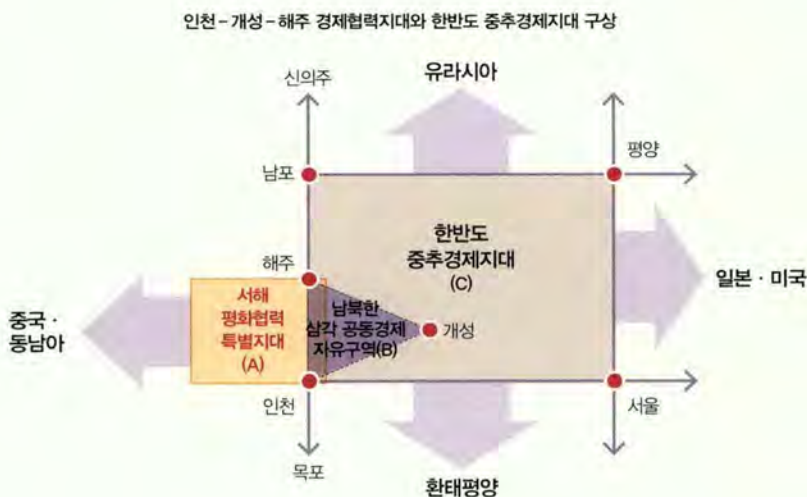
우선 인천광역시는 영종, 송도, 청라지구로 이어지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IFEZ의 영종지구는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 허브를 지향하며, 송도지구는 교육과 연구도시를 추구하고, 청라지구는 금융 등 국제업무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함께 관광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지향한다. 인천광역시의 서비스,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더해진 IFEZ의 성장 동력은 향후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경제 통합과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인천과 더불어 삼각 경제협력의 한 축인 개성은 전통적으로 방직·편직·피복 산업과 함께 인삼 가공 등 농산과 잡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무엇보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이 된 개성공업지구가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12월 시범단지에서의 생산을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123개 남한 기업이 입주해 5만 3,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19억 7,000여만 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기록했다.²³ 이런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IFEZ가 지닌 국제 물류, 연구, 금융 등 국제업무 기능들과 결합

된다면 향후 2, 3단계 개발 과정에서 첨단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국제적인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천과 개성 간의 연계 발전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주는 황해남도의 소재지로 교통이 발달한 곳이다. 해주항은 북한의 8대 무역항 가운데 하나로 시멘트와 광물을 주로 취급하며 북한 무역 화물의 10%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²⁴ 해주항과 인천항 간에는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직항로가 개설되기도 했으나 2010년 중단됐다. 해주와 연결되는 철도 교통으로는 사리원을 거쳐 경의선과 연결되는 황해청년선이 있고, 개성 방면의 배천선과 웅진 방면의 웅진선도 있다.²⁵ 해주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교통과 함께 북한의 5대 대공업지구와 4대 소



자료 : 박양호 외, 2007,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시장 차원에서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 구상”,
『국토정책 Brief』 제159호, p. 3.

공업지구 중 하나로 시멘트와 제련, 인비료 등에 특화된 해주공업지구도 갖고 있다.²⁶

인천광역시와 IFEZ, 개성과 해주가 향후 하나의 경제 단위이자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제 단위들이 지닌 장점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금융, 무역, 국제 비즈니스와 특히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활용한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의 경우 기존의 정공업과 함께 부품 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해주는 해주항과 인천항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시멘트와 같은 건설 공업이나 중화학 공업과 함께 남북 간 수산업 협력에 기초한 수산 가공 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천-해주항 간 직항로 활성화와 더불어 인천교동-개성-해주를 육로로 연결하고, 이를 인천공항과도 연계하는 물류망도 구축해야 한다.²⁷ 그리고 중국의 황해 연안 도시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간다면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추경제지대이자 동북아의 핵심적인 경제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넘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렇듯 분쟁 지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서해 NLL과 주변 연안 접경지역이 남북 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지대로 전환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계선으로서의 NLL이 아니라,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는 서해 바다와 연안 접경지역이라는 면에 주목하면 남북 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새

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구상의 뼈대는 이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합의에 담겨 있다. 당시 남북 정상은 남북이 힘을 합쳐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당시 합의는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모래 채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은 변화한 환경에 맞추고 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서해 NLL과 주변 연안 접경지역을 대결과 충돌의 상징인 경계선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 번영의 토대로서 주목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주 |

- 1 이상철, 2011,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서울: 선인, p. 94.;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실, 2007,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p. 8.
- 2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실, 2007,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p. 7.
- 3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실, 2007,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pp. 27-31.
- 4 정전협정 13항 ㄴ.목과 15항. 정태욱, 2011, "서해 북방한계선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45, p. 261.
- 5 이는 1996년 7월 16일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1975년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NLL은 정전협정과 관계 없

- 이 공해상에 설정된 선이며, 서해에서 북한 함정이 NL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키신저 국무장관은 “북방한계선이 국제적으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N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NL이 국제적 수역을 일방적으로 분할하려고 하는 한 이는 해양에 대한 국제법 및 미국법과 분명하게 배치된다. …… 미국 정부나 유엔사는 이런 사건이 한국 영해나 배타적 어로구역에서 발생했다는 한국의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전문을 보냈다(대한민국 국회, “제180회 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p. 65.; Kissinger,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 / AIRCRAFT INCIDENT”, STATE 046188, 28 FEB 1975.).
- 6 이상철. 2011.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서울: 선인, p. 96.
 - 7 양태진. 2011. 『N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서울: 예나루, pp. 102-112.
 - 8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실. 2007. 『북방한계선(N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pp. 10-11.
 - 9 김귀근. “남북 군사직통망 9회선 …… 5월부터 서해지구 불통”. <연합뉴스>, 2008년 10월 6일. 2005년 8월 서해지구 통신망이 가동됨에 따라 동·서해지구 통행 지원을 위해 2003년 12월 개통한 남북 군 상황실 6회선, 서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2005년 8월 개통한 남북 통신연락소 간 3회선 등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망은 9회선이 가동됐다.
 - 10 “총참모부 중대 통고문,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27일.
 - 11 김귀근. “남북 軍통신선-함정 핫라인 운영 실패는”. <연합뉴스>, 2010년 5월 27일.
 - 12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 26, 49.
 - 13 이상철. 2011.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서울: 선인, pp. 349-351.
 - 14 Robert Costanza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Vol. 387.; James G. Wilson et al., 2005. “Integrated Assessment and Valuation of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Coastal Systems”, in James G. Wilson, ed., *The Intertidal Ecosystem: The Value of Ireland’s Shores*, Dublin: Royal Irish Academy, pp. 12-18.
 - 15 강봉룡. 2004. “고려시대의 해양문화와 국사교과서 기술”, 『韓國史學報』 제16호, pp. 151-161.
 - 16 김창현. 2008. “고려시대 서해도 지역의 위상과 사원”, 『韓國史學報』 제33호, pp. 169-203.
 - 17 김창현. 2004.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한국사 연구』 제127호.; 윤용혁. 2010. “고려 도성으로서의 江都의 재문제”, 『韓國史學報』 제40호, pp. 75-104.
 - 18 강대석 외. 2003. 『서해 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30-43.
 - 19 이상철. 2011.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서울: 선인, pp. 234-237.
 - 20 장용석. 2010.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 평화 정착 노력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미래발전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인천국제교류센터 공동 주최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 학술회의(서울: 국회도서관, 2010년 10월 4일), p. 32.
 - 21 남북 공동어로를 위한 합작회사는 당국의 지원하에 반관반민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공동어로 규정 준수, 감독, 수익배분 등 공동어로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경 분리의 성격이 더해져 사업의 안전성

도 제고할 수 있다.

- 22 남북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를 시작할 수 있는 수역으로는 남북이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로나 피항지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력리도 주변 수역이 거론되기도 한다(남정호 외, 2006,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Ⅱ)』,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02-204.; 남정호 외, 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Ⅲ)』,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90). 이는 해상경계선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것이다.
- 23 통일부 알림마당 개성공단(<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3. 3. 30). 개성공단에는 섬유 72개사, 기계·금속 23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가 입주해 있다(통일부, 2013,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p. 92).
- 24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2010, 『북한의 산업 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pp. 114-115.
- 25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동 출판, 2004, 『조선향토대백과 8: 황해남도 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 19, 72.
- 26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2010, 『북한의 산업 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p. 26.
- 27 한반도 평화포럼, 2011,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실행 방안 연구: 서해 평화 번영과 인천 이니셔티브』, pp. 178-194.



남북한은 지난 60년간 경제·문화·농업 분야에서 수많은 교류 협력사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양극을 오가는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협력관계뿐 아니라 근미래의 협력관계 가능성을 예측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의 목적은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생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정치군사적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이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관광, 농업, 과학기술 연구, 환경보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생산적 교류 협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연한 생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극도의 정치군사적 대립 상황에도 탄력적일 수 있는 접경지역 공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자 한다.



| 10장 |

남북 협력을 매개하는 탄력적 공간 디자인

Peace Park Initiative



서예례 | 미국 바나드/컬럼비아대학, 뉴욕시티대학, 프랫 인스티튜트 겸임교수

Office of Urban Terrains 실장,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받았다. 디자인 연구와 작업을 통해 공간 전략 생산 과정으로서 건축, 도시 설계의 사회·정치적 행위 능력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한의 병행적 도시 계획과 공간제품을 연구하는 'Tactical Territorie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2011년 코넬 대학에서 진행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 시나리오들을 탐구한 'Parallel Utopias'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업으로, 본 프로젝트는 2008년 그래엄 재단(Graham Foundation), 2010년 로치 재단(Rotch Foundation)의 지원금을 받았다.

접경 갈등지역 협상 매개체로서의 환경디자인

이 장에서는 접경 갈등지역의 정치적·군사적 협상에 있어 환경·사회·정치적 생태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환경디자인의 행위 능력 agency¹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경지역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환경외교가 환경연구, 국제협력, 환경NGO 관련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², 이 논의에서 환경디자인을 다루는 건축, 조경건축, 도시설계 분야의 관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기존의 생태보전지역, 경제특구, 특수공업단지, 관광특구 등 접경지역 공간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국제 시장구조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글로벌 공간제품 spatial products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창출되는 공간제품들은 시장과 정치적 홍보의 논리에 충실할 뿐, 관련 지역의 환경적·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대치상황인 남북한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지속가능한 환경디자인이 외교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 장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환경디자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원, 공공 시설물, 도로 환경미화를 위한 디자인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⁴ 하지만 협력사업 개발지역의 인공적·자연적 생태 시스템을 활용한 탄력적 공간 시나리오의 구상을 통해 환경디자인은 공간의 정치적·사회적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의 갈등은 영토 문제와 관련되어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을 다루는 환경디자인은 중요한 정치적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탄력적 공간 개발 사례

접경 갈등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경제특구, 관광, 산업단지, 대규모 기반시설, 접경보호지역, 생태보전지역, 평화공원 등과 같은 공간들은 접경지역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모델들은 대부분 우호적 상호교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며,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와 같이 첨예한 정치·군사적 갈등 상황 속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적 공간제품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본 글에 첨부된 사례들은 군사적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성을 유지한 경우들이다. 이들 모두 한반도 상황에 100퍼센트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정치·환경적으로 탄력적인 생태계가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농경·환경보전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전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접경지역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는 외교 메커니즘 중 가장 보편적인 모델로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가 있다. 특수 경제·관광·공업단지들은 국내의 사업 유치를 위해 세금 면제, 특수 기반시설 서비스, 저임금 노동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며, 갈등 접경지역의 경우 중립적 국제기구의 재원을 통해 매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팔레스타인의 웨스트뱅크 West Bank와 가자 Gaza 지역에 경제특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은행 World Bank 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⁵

사업들이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는 정치·군사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와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외부의 재원 유치와 투자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국제보증기구이다. 제리코 농업공원(JAIP : Jericho Agro-Industrial Park)은 국제투자보증기구가 지원하는 경제특구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일본 등 4국의 협력사업이다.

6~7년간 지연되었던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중동의 석유에 대한 일본의 지대한 관심⁶과 국제기구들의 끊임없는 지원 때문이었다. 사업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자문하는 유엔개발계획기구(UNDP), 팔레스타인 지원 프로그램(PAPP), 투자 위험 보험을 제공한 국제투자보증기구, 제리코 농업공원을 왕복하는 컨테이너 차량들의 국경 출입 완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출입소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제공한 네덜란드 정부 등이 모두 일조한 경우이다.⁷

한편으로 경제특구는 정치적 차원에서 다국 협력을 통한 국제외교의 긍정적 결실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과 인근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독립적 시설물들은 인근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 대신 오히려 지역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영토권 박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⁸

남북한의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단지가 이러한 경제적 특수 공간의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관광단지의 폐쇄, 최근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한 협력구조의 취약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개입과 중재를 통해 단독적 결정이 불가능한 협력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탄력적 시나리오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두 번째 모델은 환경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인 접경지역 생태보전 사업이다. 자원의 한계, 기후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 확장 문제에 세

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늘날 접경국가들에게 있어 환경 생태계와 자원의 문제는 외교와 직결된 사안이다.

〈평화공원〉의 편집자인 살림 알리 Saleem Ali는 “평화공원과 접경보호지역은 항상 다수의 관할 구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외교협력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평화공원은 오히려 보전지역이 출입을 통제하고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환경 문제는 적대국 간 ‘비정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관련국들이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교착 상태에서 탈출구를 제공하는 외교 수단이 된다.⁹ 하지만 대부분 접경지역 내의 보전지역 사례들은 이미 갈등이 해소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 심화 지역에서의 평화공원 사례는 매우 드물다.¹⁰

한반도와 비교 가능한 사례로는 오랜 군사적 분쟁으로 심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던 에콰도르와 페루를 들 수 있다. 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코르디에라 델콘도르 Cordillera del Condor 평화공원은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군사협상 주체로 활약한 첫 사례였으며, 협상을 통해 체결된 평화협약은 접경지역의 환경보전 정책을 포함한다.

1998년 국제 환경단체인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노력과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불분명했던 국경 위치의 문제가 생태보전 지역 설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후 각 국가는 국경 접경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과 국제열대목재기구 ITTO, 지역 환경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생태관리기구가 설치되었고, 이는 2004년 콘도르-쿠투쿠 보전 통로 Condor-Kutuku Conservation Corridor 설정으로 이어졌다.¹¹

독특한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의 DMZ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이를 기반으로 한 DMZ 인근 지역 생태관광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¹²

에콰도르와 페루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중립국의 개입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지역의 특수한 생태환경과 시급한 보전 필요성을 국제 문제로 부각시킨 과정이다.¹³ 코르디예라 델콘도르 평화공원은 생태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두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 DMZ의 경우에도 국제적 '지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y'¹⁴의 형성이 중요하다. 남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내외 NGO와 환경단체들을 통해 유엔사령부의 실 주체인 미국 정부와 그밖의 국제사회에서 파워를 가진 국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적 행위 능력의 축적이 중요하다.

세 번째 모델은 제한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제가 주 목적인 기반시설 개발 협력사업의 사례이다.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체결된 인더스 수자원 협약 Indus Water Treaty은 인더스 강의 협력적 수자원 공유를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 체결 이후 양국 간에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적 국제기구의 개입이 크게 작용했다. 세계은행은 갈등 해결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협상을 진행시켰다.

둘째, 두 국가가 수자원을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접근했다. 과학자·기술자·엔지니어들을 협상 대표로 둬으로써 정치 대신 과학·기술의 '객관성'에 의해 의제들이 결정될 수 있었다.

셋째, '수자원 논리 water rationality'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었다. 상호 협력 없

이는 양국 모두 실패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넷째, 정치적 미사여구와 대중매체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계은행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국가 간 갈등은 민족주의적·국수주의적 정치에 의해 좌우되기 쉽고, 자연자원에 대한 협상은 영토적 문제와 관련되어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제안되고 있거나 실행 중인 여러 해양평화공원들을 분석한 마켈워드 Mackelworth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만으로도 국가 간의 협력력이 기능해야겠지만, 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 계획이 절대적이며, 이는 단기적 결과를 필요로 하는 정치권의 타임라인과 일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¹⁵

따라서 접경지역 생태보전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장기적 계획 아래 단기적 상황에 탄력적일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생태 시스템을 갖춘 공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남북한 경계의 딜레마와 협상 매개체의 필요성



한반도 DMZ에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긴장감과 자연 스스로 원시적 환경을 복원한 풍요롭고 다양한 생태 서식지가 공존한다. 무인지대의 오아시스로 현존하는 이 지역의 다양한 서식지는 세 겹의 철조망, 군사 감시 시설, 위장 탱크와 미사일 기지, 그리고 끊임없는 군인들의 순찰 덕분에 지속되는 딜레마로, 언젠가는 종결될 시나리오이다. 이를 대비해 DMZ와 민통선지역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보전과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존재하며, 확정적인 보전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환경부는 군사분계선 남쪽 435km²의 DMZ 구역을 포함하여 총 2,979km²의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신청했다.¹⁶ 하지만 2012년 7월 유네스코는 철원 지역에 관련 규약이 요구하는 완충 또는 전이지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DMZ 남쪽 지역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령부¹⁷와 북한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개발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유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⁸

1997년 남한 정부는 DMZ의 관할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는 순간부터 2년간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둔다는 사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했다.¹⁹ 하지만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장치를 만들어내기에 2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뚜렷한 장기 대책 없이 관할권이 이양된다면 DMZ와 민통선지역의 규제가 채 풀리기도 전에 부동산 투자와 개발이 난

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접경지역의 보전·개발·관할권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현재의 가능성들을 지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이후 시나리오에 대한 제안들은 많지만, 현재의 접경지역은 정치적·군사적 교착 상태에 놓여 있어 잠재력과 가능성을 생각하기 불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남북한의 병행적 상황은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필요로 한다. 즉, 현재 상황에 탄력적이고 적용 가능한 공간 가능성들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전,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디자인을 매개로 공간 시나리오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정치 수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탄력성과 변형 능력을 환경디자인을 통해 공간 전략화시킴으로써 정치·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위한 협상의 매개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 연구에 있어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은 생물종과 서식지의 탄력적 관계를 연구한 C. S. 홀링(C. S. Holling)으로부터 기원한다. “탄력성은 시스템 내에서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변이와 변수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흡수하면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²⁰ 홀링은 생물적 탄력성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생태 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을 설명한다. 환경보전은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탄력적 사회 시스템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견고성(robustness)이라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생태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사회 생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현대의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는 새로운 창조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관리를 더 중요시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근대화가 산업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견·혁신·발전이라는 진취적 혁명의 역사였다면, 탈산업화 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발전이 가져온 결과를 다루는 위험사회라고 말한다. 위기 관리는 근대화에 의해 창출, 발전된 위험과 불안을 다루는 시스템이며²², 따라서 반사적·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공간 시나리오의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기 대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의 사이공간과 언어의 열린 구조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에는 지난 60년간 세 가지 유형의 경계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된 경계와 실제 경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협정 언어상의 경계와 다르게 실제 경계는 각 지역의 지형적·자연적·생태적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조정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법률적 언어와 현실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이공간'들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규정되는 경계선과 규정될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경계 사이의 딜레마를 법적 맥락에서는 '언어의 열린 구조'라 일컫는다.²³ 언어와 지도 표기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국경의 경우, 언어의 열린 구조로 인해 생성되는 애매모호한 사이공간들이 존재한다. 강의 소유권과 그 경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언어의 한계에서 드러나듯이,²⁴ 자연현상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형의 공간적·시간적 유동 상태는 탄력적 공간 시

나리오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남북한의 경계 유형들에 있어 언어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공간은 첫째 육지상의 경계인 DMZ, 둘째 한강 하류, 셋째 서해 5도 인접 해상 지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공간을 이용한 탄력적 공간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공간 시나리오 1 : DMZ의 '대성동-기정동' 농업 교육, 관광지역

이 시나리오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남북 각각에게 허용된 민간인 선전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의 중립 지역을 위한 구상으로, 현재 침체되고 분단 고착화된 이 지역을 농업 생산과 농업 교육, 관광지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같은 국제 식량과 농업 관련 NGO의 주도하에 유엔개발계획기구의 지원을 받아 관리되는 두 마을은 농업 교육, 관광지역으로 개발되어 남북한의 감시하에 마을 주민들의 농업 교육과 상호 교류, 관광객들의 방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공간 시나리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자원과 생태환경 보완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한다. 계단식 논과 자연농수로 등 지속가능한 배수 체계 지형을 만들어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도 탄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수확 시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극한 환경 조건에도 견딜 수 있는 비균질적인 환경을 만든다.

둘째, 두 마을 간의 농업 지식과 기술 교류를 도모한다. 교류가 원활한 경우 양측 농민들은 군의 감시하에 공동관리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협력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한의 농지가 지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실제 교류가 없더라도 상대의 농업기술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 즉, 서로의 농업기술 노하우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전시실습장 기능을 수행할 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북쪽과 남쪽 경계선. 정전협정 문서에 따른 경계선은 하얀색, 실제 남북한 경계 철조망의 위치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문서상의 선과 실제 현장의 선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공간은 탄력적 공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이미지: 서예례). 아래 지도는 정전협정 제2권 지도(1953. 7. 27)에 첨부한 제1도.





남북한은 이미 DMZ 인근 지역의 군사적 대치 상태와 생태 환경을 각기 관광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이미지 : Denise Pereira, Tansy Mak).



있는 것이다.

셋째, 군 초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양측 군의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경지 지형의 높낮이를 조정함으로써 양측 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분리, 통제함과 동시에 양측의 시각적 연결성 유지와 군 초소에서의 총체적 감시가 용이하다.

넷째, 선전마을인 두 마을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쟁 심리는 양측 논밭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개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은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의 지형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농업 협력 지역을 형성한다. 지형을 사용하여 농경지의 수로를 조정함으로써 생태적 탄력성과 농사 생산성을 도모한다(이미지 : Aura Maria, Jaramillo, Yihua Li, Patricia Echever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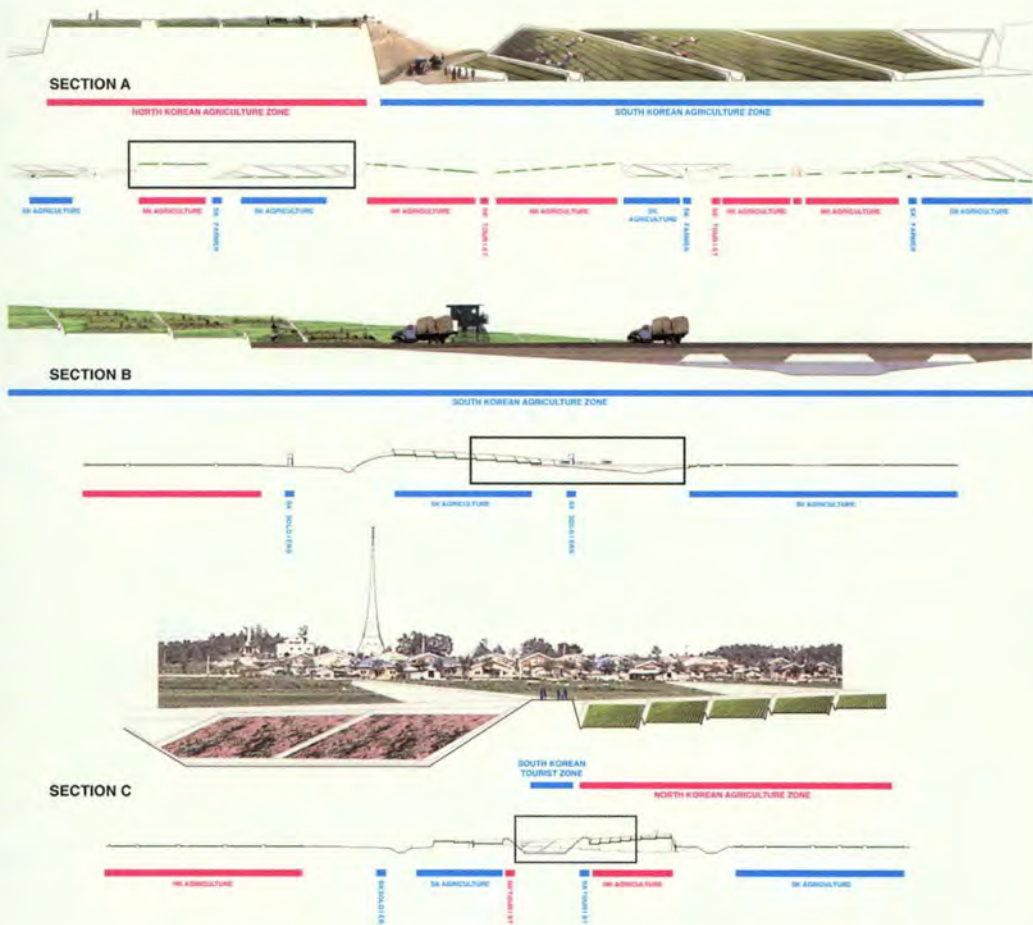
생산력을 서로에게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기술과 시설물 확충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경쟁적으로 생산력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다섯째,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한 농경지 폐쇄에 대비하여 다양한 농작물 재배를 계획한다.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관광 프로그램과 농업 교류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농지 출입 또한 제한될 수 있다. 현재는 쌀만 재배하고 있지만 이후 다양한 작물 재배로 탄력성을 추구한다.

기정동과 대성동은 지금까지 남북한의 정치선전 도구로 존재해왔지만,



대성동-기정동의 항공사진과 단면 위치도(이미지 : Aura Maria, Jaramillo, Yinua Li, Patricia Echeverria)



지형의 높낮이를 통해 남북한의 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군사적·정치적 필요에 따라 분리, 연결시키는 지형을 형성한다(이미지 : Aura Maria, Jaramillo, Yihua Li, Patricia Echeverria).

본 프로젝트는 선전 도구라는 명목하에 환경친화적 농작물 재배와 실험적 농업기술의 교류가 가능한 감시 교류 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는 지형적 배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농업 교류, 협력 기회와 확장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총체적인 군사 감시체계 유지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정치 사이클에 탄력적일 수 있는 농작물 생산 사이클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선전 도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지형을 제안한다.

공간 시나리오 2: 한강 하류 공동 출입 지역

한강 하구는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강 중 하나로 꼽히며, 썰물 때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이 특징적이다. 정전협정에 공유 지역으로 명시된 한강 하구 지역에서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썰물 때 약 30km² 규모의 갯벌이 드러난다. 조수차로 인해 하루 두 번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땅'은 정전협정에 의하면 남북한의 공유 영토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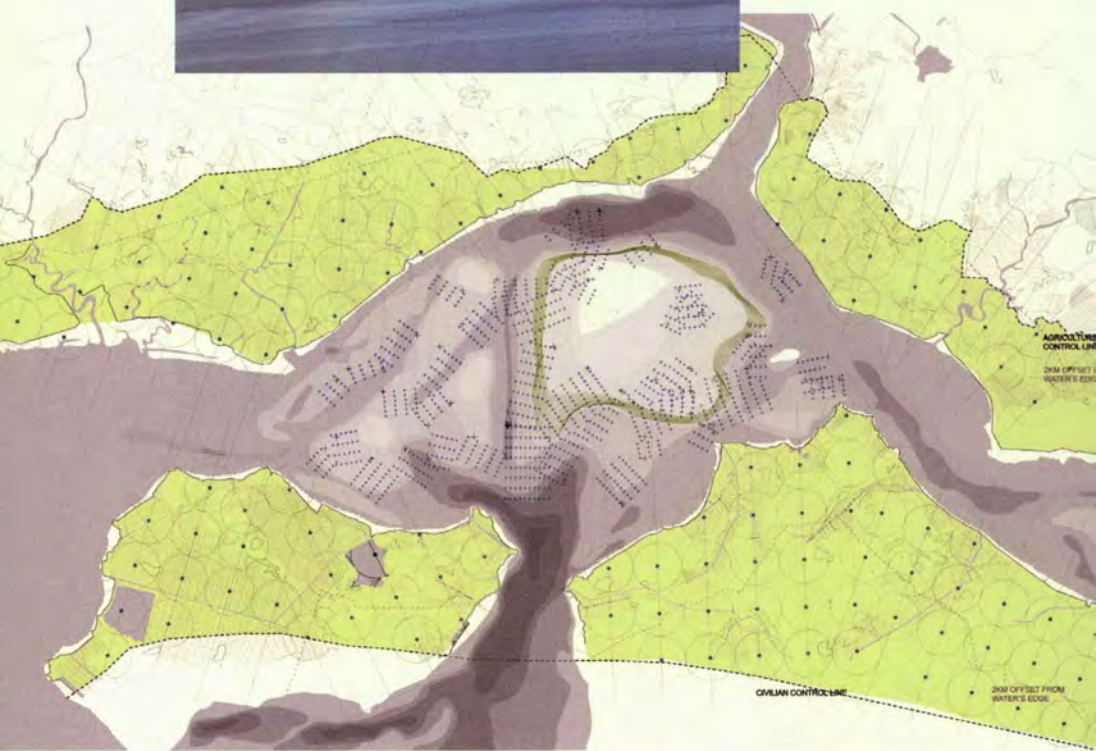
이 공간 시나리오는 일시적 갯벌을 활용한 조개 양식장을 제안함으로써 양식장과 한강변의 논을 활용한 수질,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생물 서식지, 환경오염 수준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 환경단체나 과학기구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과학과 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관리 구역의 실험적 운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공간 시나리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갯벌을 남북 경제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조개 양식장을 설치한다. 갯벌은 하루 두 번 썰물 시간대에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화 시대에는 남북 주민이 동시에 출입할 수 있지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썰물 스케줄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 출입한다. 한강 양변을 따라 위치한 논은 유기농 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협동교육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의 한강 구역. 하얀색은 공동 진입이 가능한 중립지역이며, 검은색 줄무늬는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갯벌 지역을 나타낸다 (이미지 : 서예례). 아래 지도는 정전협정 제2권 지도에 첨부한 제2도.





갯벌 조개 양식장과 한강변의 특수 농경지, 이 지역을 감리하는 환경오염 모니터 가구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미지 : Christine Kim, Caroline Corbett)



위에서부터 인근 농경지에 설치된 대기오염 풍선 측정기구, 쌀물시 출입이 가능한 갯벌 지역 굴 양식장, 조명 환경설치물로 변하는 오염 측정기구(이미지 : Christine Kim, Caroline Corbett).

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평화의 쌀'로 브랜딩되어 시장에 판매된다. 남한의 민통선지역과 인접하여 관광구역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조개와 쌀을 지역 특수품으로 판매한다.

둘째, 갯벌 내 조개 양식장에는 수면에 떠서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측 장비들을 설치하고 남북 양측의 과학자들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 장비들은 인근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농약과 살충제,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는 개성공업단지의 오염 물질, 한강을 통해 하구로 배출되는 서울시의 오염 물질을 감시하게 된다. 강변 인근 지역의 농경지에는 대기오염 모니터링 장치를 풍선에 부착해서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모니터링 기구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집, 배포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한강의 생태 조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셋째, 이 프로젝트는 과학과 환경 관리를 빌미로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험해보는 시범 케이스가 된다. 양측 농민, 어민, 생태학자들과 국제 환경기구 과학자들의 협력적 작업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실험할 수 있는 중립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넷째, 조수간만의 주기는 군사적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키는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강과 갯벌의 자연적 주기는 정치적 주기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진입, 통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 한강의 출입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도 환경오염 관측 장비들은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조개 양식장과 논에 설치된 오염 관측 장비들에 부착된 LED 조명은 한강 하구를 뒤덮는 대형 조명 설치예술로도 기능할 것이며, 이는 인근 지역에 관광객을 증가시키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구상은 조수의 주기와 생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수성에 기

반한 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경제적 생산과 과학적 연구라는 일반적인 주제가 어떻게 지역의 생태보전을 이끌어내는지를 제시한다.

공간 시나리오 3 : 서해 5도의 인공섬, 평화·양식장 관광지구

이 공간 시나리오는 서해 5도를 둘러싼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다룬다. 남북이 각각 주장하는 해양 경계선을 비교했을 때, 양측 경계선 사이에 존재하는 약 24km²의 중립 지역이 대연평도 북쪽에 존재한다.²⁶ 이 중립 지역에 이동 가능한 인공섬을 배치하여 특수 해양양식업 평화관광지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중립적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시민(Virtual Citizen)'²⁷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국제 해양 영역 내에 '코리아'라는 중립지역으로 존재한다.²⁸ 공간 시나리오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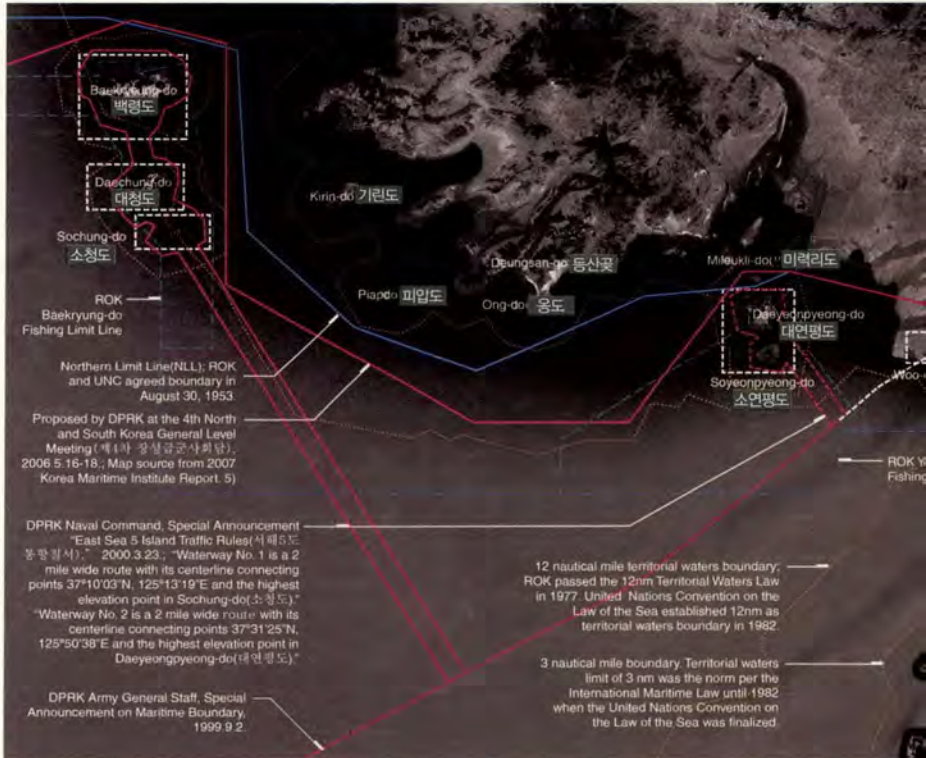
첫째, 인공섬들은 국제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코리아'의 가상시민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인공섬들은 환경친화적인 해양 양식업과 관광업을 위한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평화시 남북한 인근 어민들이 협력하여 환경친화적 양식업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중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관할 영해 내에 양식장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분쟁시 양식장들은 중립지역 안으로 철수해 최소의 규모로 운영된다. 평화 시기 남북의 관광객은 중립지역 안에 배정된 구역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외국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는 남북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출입이 허용된다.

둘째, 인공섬들은 군사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주권국의 영해권을 사용하며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감시한다.²⁹ 평화 시기에는 불법 중국 어선들을 감시하고 남북한 군의 충돌을 방지한다.³⁰

분쟁시에는 인공섬들을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 일정 간격으로 분포시켜 12마일 해상 영해를 선포함으로써 양측을 분리시키는 비무장지대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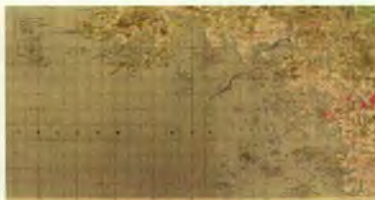
셋째,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고수입 수산물인 꽃게의 주 서식지이다. 하지만 중국과 남북선들의 남획으로 해양 서식지 보전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친화적인 해양 양식업을 통해 지역 어민의 수산업을 지원하고 생태 서식지 파괴를 방지한다.

넷째, 인공섬들과 양식 시설의 유동성은 군사적·정치적 환경에 탄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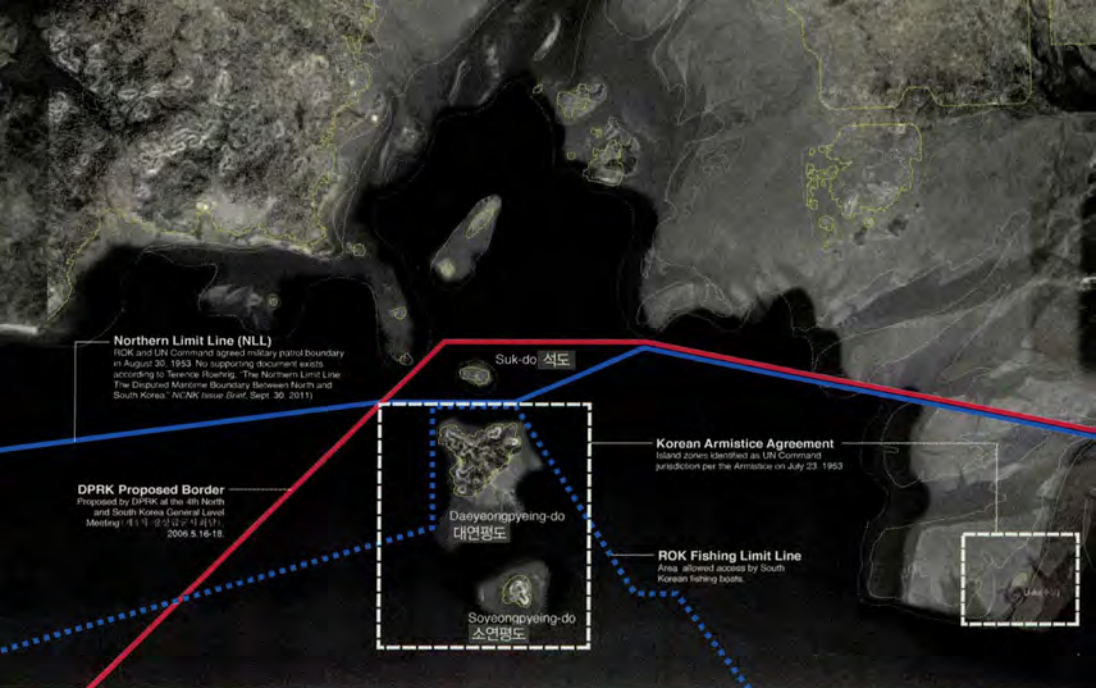
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인공섬의 기반시설들은 중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서해 5도 지역을 시찰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 양식장 시설 또한 분쟁시 중립지역으로 회수될 것이며, 평화 시기에는 생산성 확대를 위해 인근 영해로 확장될 것이다. 확장된 양식장은 불법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 방지 장치로 작용하는 한편, 남북 어선을 구역에 따라 분리 관리한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정치적 상황과 자연생태계의 주기에 따라 확장과 축소가 반복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변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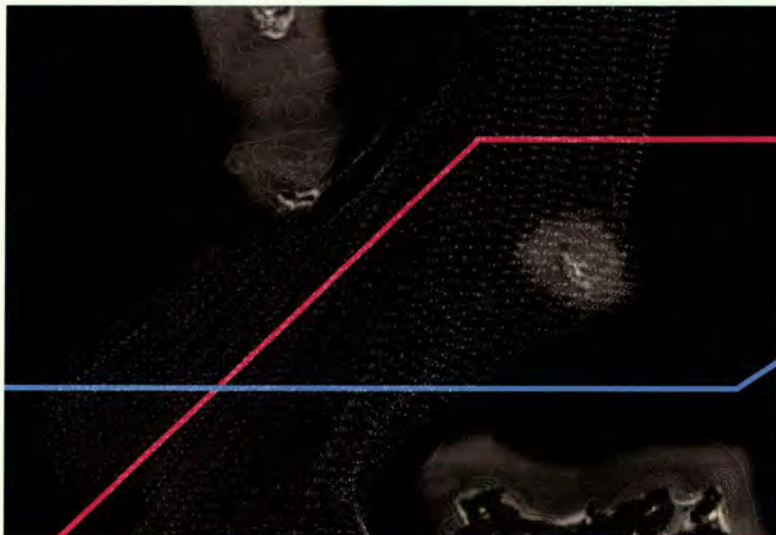


정전협정에 따른 서해 5도 인근 지역의 경계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북은 서로 다른 해양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그림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의 주장에 따른 경계선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하얀색은 정전협정에 의해 명시된 구역, 빨간색은 북한, 파란색은 남한이다(이미지: 서예례). 위의 지도는 정전협정 제2권 지도에 첨부한 제3도.





가장 최근의 남북측 주장에 따른 서해 5도 연안 경계선의 위치에 따르면, 대연평도 북쪽으로 남북한 중립지역이 형성된다(이미지 : Michael Cabrera, Jeremy Tan, 서예례).



중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유동적인 양식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제어하면서도 남북한 어선들의 분리된 양식장 관리를 가능케 한다(이미지 : Michael Cabrera, Jeremy Tan).



서해 5도 연안을 순찰하는 특수구역의 유동적 인공섬들은 일상적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양식장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서해 5도 인근 연해를 비무장지대로 지정하고 양측 선박의 움직임을 관리, 순찰하는 중립적 매개체로 활용한다(이미지 : Bicer Burcu, Aiheidan Roudi, 서예레).

적인 인공섬들은 이 지역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정치적·군사적·환경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꽃게철 동안에는 시간제로 나누어 남북 어선들이 동일하게 어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중국 어선들을 제어하는 동시에 어류 남획을 관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어업 관리 기능 또한 수행한다. 군사 분쟁시에는 중립국의 권한으로 남북 양측 사이에 완충지역을 확립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큰 돌발사태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남과 북의 탄력적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생태보전 문제와 지역개발을 통한 이윤 창출이 남북 대화와 협력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환경적 탄력성의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병행적 협력 모델이 되기 힘들다. 공간은 접경지역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국경지역을 단지 군사분쟁 지역, 생태보전 지역, 아니면 경제·관광개발 가능 지역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고의 경계를 바꿀 수 있는 실험적 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디자이너들의 상상력과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이 글에 포함된 공간 시나리오들은 접경 공간의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역할과 가능성들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탄력적 공간 전략을 통해 경계지역이 영토의 분리를 위한 도구가 아닌 생산적 통합과 협동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찰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주 |

- 1 행위 능력(agency)은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적 측면에서 사용되며, 이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 행위자의 동등한 행위 역량을 의미한다.
- 2 Ali, S. H., ed., 2007,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 MIT Press.
- 3 Easterling, K., 2012, "Zone : The Spatial Softwares of Extrastatecraft", *Places*, June 11(<http://places.designobserver.com/feature/zone-the-spatial-software-of-extrastatecraft/34528/>).
- 4 요르단 강 평화공원(Jordan River Peace Park)은 지역 NGO들과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협력을 통해 요르단 강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실화된 성공적 평화공원 사례이다. 환경보호 NGO 단체인 '중동 지역 지구 의 친구들(FoEME : Friends of the Earth Middle East)'은 미국 예일대학교 건축과, 예루살렘의 베자렐 예술 디자인 아카데미(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의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의 건축가들의 협력을 통해 평화공원 디자인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본 이벤트의 목적은 마른 강바닥을 습지로 전파시킬 수 있는 조류 서식지 형성, 노화된 발전소를 방문객 센터로, 오래된 노동자 주택을 생태 건축물로 바꾸고, 남은 다리를 재활용하는 공간적 아이디어 창출에 있다." 이 사례는 군사 갈등 완화 이후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기에 본 글에 포함되지 않았다. : Ashkenazi, E., "Israeli, Jordanian architects plan peace park in Naharayim", *Haaretz*, May 14, 2008(<http://www.haaretz.com/news/israeli-jordanian-architects-plan-peace-park-in-naharayim-1.245799>).
- 5 MIGA 프로젝트(<http://www.miga.org/projects/index.cfm?pid=989>).
- 6 Ford, L., "Jericho business park aims to inch Palestine towards sustainability", *The Guardian*, June 18, 2012(<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2012/jun/18/jericho-business-park-palestine-sustainability>).
- 7 "The Netherlands provides a container scanner for Palestinian customs inspections",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News*, Feb. 27, 2012(<http://www.government.nl/news/2012/02/27/the-netherlands-provides-a-container-scanner-for-palestinian-customs-inspections.html>).
- 8 Tantir, A., 2012, "Jericho Agro-Industrial Park : A Corridor of Peace or Perpetuation of Occupation?", Position Paper published by Bisan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December(<http://electronicintifada.net/content/leaked-documents-show-pa-outsourced-palestinian-land-and-rights-turkish-firm/11680>).
- 9 Ali, 2007, *Peace Parks*, pp. 2-6.
- 10 더피(Duffy)는 평화공원의 정치성과 환경외교에 있어 이의 제한성을 주장한다. : Duffy, Rosaleen, 2007, "Peace Parks and Global Politics : The Paradoxes and Challenges of Global Governance", ed, Saleem H. Ali,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 MIT Press, p. xx.
- 11 Ali, 2007, *Peace Parks*, p. 10.
- 12 남한의 관광 웹사이트(<http://www.dnztours.com>). ; 북한의 관광 웹사이트(<http://www.north-korea-travel.com/dnz-north-korea.html>).
- 13 Laux, M. F., 2002,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Peac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Negotiation : New Approaches to Global Cooperation*, eds, Lawrence Susskind, William

Moomaw, and Kevin Gallagh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p. 420.

- 14 피터 하스는 확장된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정치적 이슈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력을 조정하는 데 지식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 Haas, P. M., 1992.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published by MIT Press, pp. 1-35.
- 15 Mackelworth, P., 2012. "Peace Parks and Transboundary Initiatives : Implications for Marine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ning", Conservation Letters, Volume 5, Issue 2, April, pp. 90-98.
- 16 Kim, J., "Seoul to seek UNESCO Biosphere Reserve status for DMZ", The Hankyoreh, July 4, 2012(http://www.hani.co.kr/art/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540913.html).
- 17 현 유엔사령부(UN Command :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 - Joint Security Area, UNCSB-JSA)는 미군 주도로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부대이다. 한국전쟁 중 UN 협력국들을 대표하여 정전협상을 돕기 위해 1952년 5월 5일 형성되어 판문점에 배치된 부대이다. 유엔사령부는 미국 정부 관할하에 있다(<http://8tharmy.korea.army.mil/jsa/>).
- 18 Mok, J., "UNESCO denies designation of DMZ as Biosphere Reserve", The Kyunghyang Shinmun, July 13, 2012(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207131046497&code=710100).
- 19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 20 Holling, C.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ume 4, p. 17.
- 21 Anderied, J. M., Janssen, M. A., and Ostrom, E., 2004. "A Framework to Analyze the Robustness of Social-ecological System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cology and Society, 9(1) : 18(<http://www.ecologyandsociety.org/vol9/iss1/art18/>).
- 22 Beck, U., 1992.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 Sage Publications, p. 21.
- 23 Hart, H. I. A., 1961, The Concept of Law,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7-128.
- 24 Steinberg, T., 1995. Slide Mountain : Or, The Folly of Owning Nature,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25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2008년 발표한 나들섬 프로젝트는 한강 하구의 저수심 지역의 청추초로 불리는 곳에 2020년까지 13년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면적 30km²를 복토, 인구 20만 명 규모의 남북한 협동 국제 비즈니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프로젝트이다. : <월간조선>, 2008년 7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ew.asp?nNewsNumb=200807100021&ctcd=&cpage=1>).
- 26 남정호, 육근형, 이구성, 김종덕, 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부록 23, p. 297.
- 27 '가상시민(virtual citizenship)' 개념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이스라엘 포에버'의 사례를 참고한다(<http://israelforever.org/vci/>).
-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2005~2007년 준비된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을 위한 보고서는 국제적·지역적 제3조적의 관여를 추천한다. 이를 위해 UNESCO, IUCN, 그리고 GEF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그리고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등의 기구들의 자문단을 구성, 제시하고 있다. : Nam, J., et. al., 2007, "Toward Establishing the Marine Peace Park :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English version, p. 45.

- 29 Sydell, L., 2012. "Don't Like The Government? Make Your Own, On International Waters". NPR, Dec. 17, 2012(<http://www.npr.org/blogs/alltechconsidered/2012/12/17/166887292/dont-like-the-government-make-your-own-on-international-waters>).
- 30 Hancocks, P., 2011. "South Korea : Chinese fisherman kill coast guard member". CNN, Dec. 12, 2011(<http://www.cnn.com/2011/12/12/world/asia/south-korea-china-stabbing>).

참고문헌

- 남정호, 육근형, 이구성, 김종덕. 2007.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 박삼욱, 허우궁, 박기호, 박수진. 2006.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 방안 : 지리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재경. 2009년 10월 17일. "DMZ 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원칙과 과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표.
- 정전협정. Korean Armistice Agreement, July 27, 1953. ;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Series #2782. ; General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Record Group 11. ; National Archives.
- 최희정. 2005년 9월.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이용 현황 및 남북 협력관리 방향". 월간해양수산. 통권 252호.
- 2011년 9월.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경기도, 강원도 공동 제작.
- Alam, Undala Z., "Questioning the Water Wars Rationale : A Case Study of the Indus Waters Treat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68, No. 4, Dec. 2002.
- Ali, Saleem H., ed.,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 MIT Press, 2007.
- Anderied, John M., Janssen, Marco A., and Ostrom, Elinor, "A Framework to Analyze the Robustness of Social-ecological System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cology and Society, Volume 8, Issue 1 : 18, 2004.
- Beck, Ulrich,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Ritter, Mark, London : Sage Publications, 1992.
- Barquet, Karina, Lujala, Päivi and Røed, Jan Ketil, "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paper presented at the Climate Change and Security Conference, Trondheim, Norway, June 21-24, 2010.
- Bridger, Jessica, "Kijong-dong - Potemkin Landscape". Topos, December 20, 2011(<http://www.toposmagazine.com/blog/kijong-dong-potemkin-landscape.html>).
- Carlson, J. M. and Doyle, John, "Complexity and Robustness".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99, Suppl. 1, Feb 19, 2002.
- Donaldson, John W., "Paradox of the Moving Boundary : Legal Heredity of River Accretion and Avulsion".

Water Alternatives, Volume 4, Issue 2.

- Duffy, Rosaleen, "Peace Parks and Global Politics : The Paradoxes and Challenges of Global Governance", ed, Saleem H. Ali, Peace Parks :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 MIT Press, 2007.
- Easterling, Keller, "Zone : The Spatial Softwares of Extrastatecraft", Places, June 11, 2012(<http://places.designobserver.com/feature/zone-the-spatial-softwares-of-extrastatecraft/34528/>).
- Haas, Peter, Saving the Mediterranean :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Haas, Peter M.,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published by MIT Press, 1992.
- Hart, H. L. A., The Concept of Law,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Holling, C. S.,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ume 4, 1973.
- "Land Use Terminology Dictionary", published by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January 2011(<http://luris.mltm.go.kr/web/luris.pdf>).
- Laux, Maria Fariello,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Peac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Negotiation : New Approaches to Global Cooperation, eds, Lawrence Susskind, William Moomaw, and Kevin Gallagh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2002.
- Mackelworth, Peter, "Peace Parks and Transboundary Initiatives : Implications for Marine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ning", Conservation Letters, Volume 5, Issue 2, April 2012.
- Querol, Maria, "Rethinking International Rivers and Lakes as Boundaries", Water Resources and International Law., eds, Salman, Salman M. A. and Boisson de Chazournes, Laurence, publication by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 Rayfuse, Rosemary and Crawford, Emily, "Climate Change, Sovereignty and Statehood", Legal Studies Research, No. 11/59, University of Sydney Law School, Sept. 2011(<http://www.ilsa.org/jessup/jessup13/Climate%20Change,%20Sovereignty%20and%20Statehood.pdf>).
- Salman, Salman M. A. and Boisson de Chazournes, Laurence, eds., International Watercourses : Enhancing Cooperation and Managing Conflict,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414,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98.
- Steinberg, Theodore, Slide Mountain : Or, The Folly of Owning Nature.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95.
- Susskind, Lawrence and Islam, Shafiqul, "Water Diplomacy : Creating Value and Building Trust in Transboundary Water Negotiations", Science & Diplomacy, August 22, 2012.
- Tairir, Alaa, "Jericho Agro-Industrial Park : A Corridor of Peace or Perpetuation of Occupation?" Position Paper published by Bisan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December 2012(<http://en.bisan.org/content/jericho-agro-industrial-park-corridor-peace-or-perpetuation-occupation>).
- Watkins, Kevin, et. al., "Beyond Scarcity :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Human

Development”, report published by the UNDP, 2006(<http://hdr.undp.org/en/media/HDR06-complete.pdf>).

- Weale, Albert, The New Politics of Pollut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1.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May 21, 1997(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8_3_1997.pdf).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ecember 10, 1982(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DMZ 일원의 평화안보·생태·역사유적 관광

종합 관광지대로 발돋움하는 DMZ

우리나라 DMZ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냉전사의 유물로서,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역설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과 현재진행형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 생태계가 반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태학적 실험장이기도 하다. 현재 군사지역으로 접근이 통제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생태계가 보전되고 희소가치를 가진 특별한 지역이 되었다.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생태학적·역사문화적 의미와 특수성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법적 보호지역을 포함, DMZ 일원의 평화안보·생태·역사유적 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이곳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DMZ 일원의 돌아볼 만한 곳을 평화비보관광, 생태체험시설, 역사문화유적, 축제·문화행사, 체험마을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DMZ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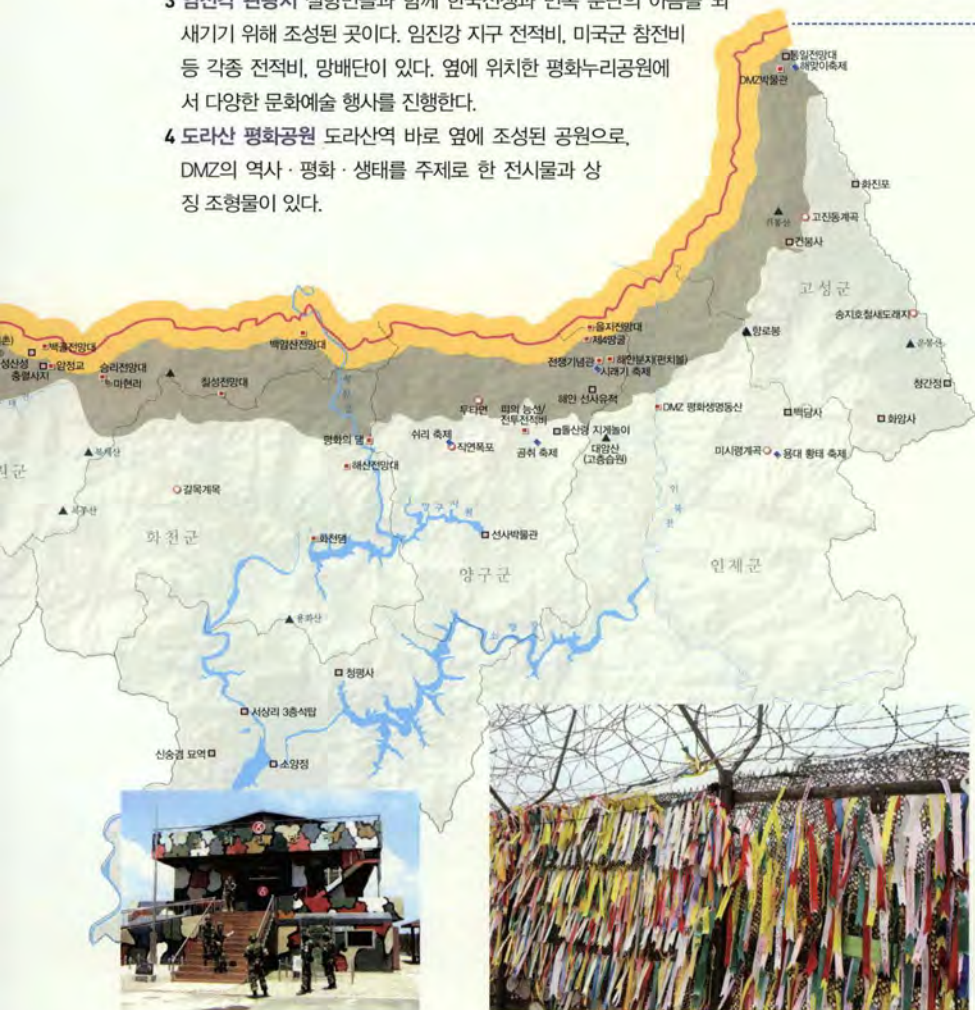
1 판문점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군사분계선 위에 놓여 있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있다. 지금도 군사회담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냉전사의 마지막 유물로 여겨지는 곳이다.

2 전방대 유엔군 사령관이 안보 견학을 위해 승인한 지역으로, 철책선에 접하여 DMZ를 향해 설치되어 있다. 각 전방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전방대 주변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파주), 도라전망대(파주), 상송전망대(연천), 태풍전망대(연천), 열쇠전망대(연천), 평화전망대(철원), 승리전망대(철원), 칠성전망대(화천), 을지전망대(양구), 통일전망대(고성) 등이 있다.

3 임진각 관광지 실랑민들과 함께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임진각 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 망배단이 있다. 옆에 위치한 평화누리공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4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산역 바로 옆에 조성된 공원으로, DMZ의 역사·평화·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물과 상징 조형물이 있다.

DMZ 주변 평화안보관광



연천의 열쇠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생태
체험시설

- 5 세계 평화의 종 공원 평화의 댐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화천군이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다.
- 6 양구통일관 및 제4땅굴 1996년에 개관한 양구통일관은 민통선지역 최북단인 양구군 해안면에 있다. 제4땅굴은 1990년에 발견되었는데, 현재 안보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우고 갱도 및 갱내 시설을 설치해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7 DMZ박물관 동해안 쪽 군사분계선과 근접해 있는 고성군의 민통선 내에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모습과 휴전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 등을 전시물이나 영상물로 재구성하여 전시하고 있다.

- 1 임진강 평화습지원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두루미 테마 생태공원으로, 연천 태풍전망대 인근 임진강변에 조성되었다. 두루미의 생태 탐조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DMZ의 생태환경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산양증식복원센터 체계적인 산양 관리기법 개발과 증식·복원을 위해 양구군에 조성되었다. 산양 방사장과 사육장, 치료센터, 광장, 주차장, 관찰대 등을 갖추고 있다.
- 3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DMZ 일원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교육하는 거점시설로 인제군에 조성되었다.
- 4 평화누리길 임진강변을 따라 연결된 총연장 182km의 생태탐방로로, 김포·고양·파주·연천에 12개의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 5 수달과 함께하는 북한강 DMZ 생태관광 생태마을 탐방, 북한강변의 트레킹 체험, 수달센터 견학, 먹이 주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두타연 및 대암산 생태탐방 평화안보관광 및 친환경적인 생태 트레킹으로 두타연 2개 코스, 대암산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화천의 세계평화의종 공원



고성의 DMZ 박물관



양구의 산양증식복원센터

7 DMZ 해안분지 숲길 양구군 해안면은 '편치불'로 알려진 분지형 지형을 가지고 있다. DMZ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4개의 생태 탐방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8 관동별곡 8백리길 송강 정철이 걸었던 동해안의 비경 800리 길을 답사하는 것으로, 고성군 통일전망대부터 경북 울진군 평해 월송정까지 총거리 54.2km로 구성되어 있다.

1 전곡리 선사유적과 선사박물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변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다.

2 경순왕릉 경순왕은 제56대 신라 마지막 왕이며, 왕릉은 사적 제244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송의전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송의전이 있던 자리이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있다.

4 호로그루 연천군 원당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지이다. 삼국통일을 전후해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5 당포성 연천군 동이리 일원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으로 사적 제468호로 지정되어 있다.

6 연천 은대리성 사적 제469호로 지정된 삼국시대의 성곽으로 백제, 고구려시대의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7 태봉국 도성 태봉국은 901년 공예에 의해 건국된 나라이다. 후삼국 가운데 하나로 후고구려라 칭했고, 905년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강원도 철원군 풍천읍에 있다.

8 해안 선사유적 점토대토기, 유구석부, 빗살무늬토기 등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속하는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각 시대별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유적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에 있다.

역사 문화유적



양구의 두타연 생태 트레킹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

축제
문화행사

- 1 파주 개성인삼축제 파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을 홍보·판매하는 축제. 주로 10월에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다.
- 2 파주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와 더불어 파주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 홍보·판매 축제로, 매년 11월 파주시에서 열린다.
- 3 전곡리 구석기축제 구석기 문화와 선사 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축제.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 4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 심학산 주변의 관상용 양귀비와 다양한 야생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가족 걷기와 꽃마차 타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5~6월 파주시 교하읍에서 열린다.
- 5 화천 산천어축제 해마다 열리는 겨울 축제로 산천어 얼음낚시, 얼음 축구, 빙상경기대회 등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이 있다. 해마다 1월에 화천군 화천읍 일대에서 열린다.
- 6 인제 빙어축제 겨울철이 되면 990헥타르의 빙판이 형성되며, 산란을 위해 빙어 떼가 몰려들어 빙어낚시대회, 빙어 사식회, 빙상 볼링, 얼음 축구대회, 스노우 산악자전거대회 등과 수물지역 및 주변 산촌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민속놀이,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 7 인제 군인추억 페스티벌 매년 10월 초 서화면 일원 주둔 군부대에서 열리며, 민·군·관 병영가요제, 청소년 사생실기대회, 백일장, 옛 전우 만남, 군장병 특별 면회의 날, GOP 대탐방, 병영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8 양구 배꼽축제 국토정중앙 양구체험원정대와 배꼽원정대(두타연 트레킹) 등 자연 중심 양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인공 습지 및 파로호 자연호수에서의 붕어낚시, 밸리댄스 경연대회 등을 운영한다.
- 9 고성 명태와 겨울바다축제 국내 최고의 명태어장을 가진 고성에서 해마다 2월에 열리는 특산물 축제로 수성제례 행사, 어선 퍼레이드, 항구가요제, 명태낚시 체험, 명태덕장 전시 등의 행사가 열린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파주의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

- 1 **백연리 통일촌** 1970년대 민통선지역 개발에 따라 조성되어 파주에 편입되었다. 쌀·인삼·콩 등을 특산물로 생산하고 있다. 정보화 체험, 슬로푸드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 통일촌브랜드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박물관과 마을길 탐방로가 조성되었다.
- 2 **해마루촌** 1990년대 후반 실향민 1세대의 입주 영농을 위해 민통선지역에 조성된 주거단지.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팜스테이 마을 등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 3 **쇠꼴마울** 체험학습장, 주말농장, 황토찜질방, 야유회장 등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이다.
- 4 **옥계마을** 연천군의 민통선과 인접한 마을로 전통 메주, 연천 쌀, 연천 콩 등의 특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5 **호랑이배꼽마을** 민통선에 인접한 마을로 임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쌀·콩·율무·인삼·고추 등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계절별로 산나물 채취, 미꾸라지 잡기, 메뚜기 잡기, 얼음썰매 타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6 **풍산마을** 화천군에 위치한 마을로, 1945년 8월 15일 이후 북한에 속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수복되면서 호음동, 평촌, 전연동, 명승동, 해안동의 5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다. 우렁이쌀 재배 과정 체험 및 팜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7 **편치불 마을** 양구군에 위치한 마을로, 1956년 휴전 후 난민정착 사업의 일환인 재건촌 조성으로 입주했다. 통일관, 전쟁기념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등 다양한 안보자원이 있다.
- 8 **넷강마을** 인제군에 위치한 마을로 강가에서의 뗏목 체험과 민물고기 잡기, 눈을 이용한 설피 만들기, 스케이트 타기 등의 프로그램과 대터·소재골·도리촌·말거리·대암산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축산 및 쌀·콩·버섯류·옥수수·기장·조 등을 재배한다.
- 9 **백담사 만해마을** 민족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을 기려 만든 수련장으로 인제군에 있다. 만해문학박물관, 심우장, 남의침목 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 **동트는 진등마을** 고성군에 위치한 마을로 황토지대에 있다. 황토쌀과 느타리버섯, 산머루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녹차 단지와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일출 체험 등을 운영한다.
- 11 **진부령 흘리마을** 고성군에 위치한 마을로 높이 1,000미터가 넘는 산들에 둘러싸인 고산지대이다. 주로 피망과 고랭지 채소, 치커리를 재배하고 있다.
- 12 **소동령마을** 고성군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수목림, 소쟁이골, 침소 등의 자연산책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이버섯·산나물 등을 주로 재배한다.

기획 경기개발연구원

1995년 설립된 경기도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환경, 자치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사진 전영재

춘천MBC DMZ 생태 전문 기자, 1991년부터 155마일 DMZ를 발로 취재하며 DMZ 다큐멘터리 20여 편을 제작해 살아 숨쉬는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국내외에 전달해왔다. 저서에 『아주 특별한 땅 DMZ의 비밀』, 『통일의 싹이 자라는 숲』, 『멀리서 온 귀한 손님』, 『산양의 비밀』, 『DMZ와 민통선의 생태계를 찾아서』 등 다수가 있다.

DMZ가 말을걸다

평화와 생태의 상징, DMZ의 모든 것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9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13일

지은이 박은진 · 김엘리나 · 김지옥 · 김창환 · 서예례 · 소병천
심숙경 · 이기환 · 장용석 · 조도순 · 최용환 · 함광복

진행 양은하

디자인 ALL design group

제작 이재승

펴낸이 연준혁

펴낸곳 (주)위즈덤하우스 출판등록 2000년 5월 23일 제13-1071호

주소 (410-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6번지 센트럴프라자 6층

전화 (031)936-4000 팩스 (031)903-3895

홈페이지 www.wisdomhouse.co.kr 전자우편 wisdom1@wisdomhouse.co.kr

종이 월드페이퍼 인쇄 · 제본 (주)현문

값 20,000원 ©경기개발연구원, 2013

ISBN 978-89-6086-637-9 (03340)

- 이 책은 DMZ 설정 60년을 맞아 DMZ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주)위즈덤하우스와 경기개발연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a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3026388)

3부 DMZ, 경계와 접경 사이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DMZ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조명한다.

6장 LEGAL ISSUES

국제법으로 살펴보는 DMZ의 법적 쟁점들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장 CASE OF GERMANY

독일 그뤼네스반트가 DMZ 토지 문제에 주는 교훈

- 심숙경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DMZ 통신 #2 남북한의 두루미 보호사업과 NGO의 역할

- 김엘리나 로제스터대학 시각문화인류학과 조교수

4부 DMZ의 미래를 스케치하다

기존의 DMZ 정책 관련 논의와 향후 전망,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미래 구상을 다룬다.

8장 THE DMZ'S FUTURE

DMZ의 위상 변화와 통일을 향한 준비

-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장 NLL

서해 위 또 하나의 경계, NLL

-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0장 PEACE PARK INITIATIVE

남북 협력을 매개하는 탄력적 공간 디자인

- 서예레 미국 바나드/컬럼비아대학, 뉴욕시티대학, 프랫 인스티튜트 겸임교수



평화와 생명을 품은 땅, DMZ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난다!

냉전의 산물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재탄생한 한반도의 DMZ, 그 새로운 출발선에서

한반도 DMZ는 20세기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유물로서 그 자체가 살아 있는 평화의 상징물이다. 지난 60년 남북한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동안 DMZ는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군사 및 문화유적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살벌한 냉전의 현상이 자연에게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일 수 있다는 것, 이는 일종의 아이러니이면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DMZ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쟁점과 과제까지 다룬 종합적인 DMZ 안내서이다. DMZ의 역사와 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삶을 비롯하여 지리·경관, 생태환경, 문화유산, 정책과 현안, 미래 구상 등 DMZ의 가치와 비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분단의 암울했던 역사에서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해가 숨 쉬는 공간이자 자연·역사·평화가 공존하는 멀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난 DMZ. 이제 DMZ가 들려주는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일 때이다. DMZ는 한반도의 미래이다.

